

언론중재

2013 가을호 통권 128호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인쇄 2013년 9월 25일
발행 2013년 9월 30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00002
발행인 권 성
편집인 오광건
인쇄인 이민성
발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 397-3114
FAX 02) 397-3069
www.pac.or.kr
편집 · 인쇄 (주)성우애드컴

편집위원

손영준 서울제3중재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영진 서울제8중재부
(변호사)
강선임 외부위원
(AnC 미디어 실장)
송상근 외부위원
(동아일보 교육복지부장)

- * 본지는 집자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

2013가을호 통권 128호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C O N T E N T S

계간 언론중재

Vol. 128 Autumn 2013



28

Focus on World Media

- 06 정부 비판하던 그리스 공영방송 폐쇄,
언론에 재갈 물리기인가
효율성 위한 조치인가? _김미경
- 16 일본의 우경화
일본의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나 _황성빈

칼럼

- 28 우리도 인종차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_양선희



44

사건, 그 후

- 32 간첩죄로 기소된 스티븐 김,
그의 외로운 법정투쟁 _천영식
- 44 여전히 진행형인 미네르바 사건 _김선태

AIPCE 참관기

- 54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서 열린
제15차 AIPCE 연례회의 _김재원

판례토크

- 58 공익성 외면한 끼워 맞추기식 편집,
언론이기를 포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_양재규



74

Movie with Legal Mind

62 우리들의 〈설국열차〉 _양려원

조정중재 현장

68 노사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노동위원회-
_박동국

기고문

74 과도한 스포츠 내셔널리즘 고찰
: 류현진 보도를 중심으로 _권오상
90 뉴스 소스로서의 SNS 역할과 그 문제점
_황유선



108

해외통신원 기고

108 중국의 뉴스미디어 판매와 소비 경향
_온기홍

언론분쟁 노트

116 지면제작의 화두는 신뢰 _서명수

정부 비판하던 그리스 공영방송 폐쇄, 언론에 재갈 물리기인가 효율성 위한 조치인가?



글. 김미경
서울신문 국제부 차장

2013년 6월 11일 오후 11시쯤(현지시각), 그리스의 유일한 공영방송 '엘리니키 라디오포니아 텔레오라시'(Elliniki Radiofonia Tileorasi · ERT · 그리스 라디오 텔레비전)의 송출이 갑자기 멈췄다. ERT의 TV 채널 화면들은 검은색으로 바뀌었고 'No Signal'이라는 문구만 흘러나왔다. ERT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됐고, 소속 직원 2,600여 명은 한꺼번에 실업자로 전락했다. 75년 전통의 그리스 공영방송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스 공영방송 ERT 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
(출처 : The independent, 「We will not go to new elections: PM offers talks after silencing of state-run broadcaster ERT shocks Greece」,
2013년 6월 13일자)



그리스 정부, 공영방송 ERT 폐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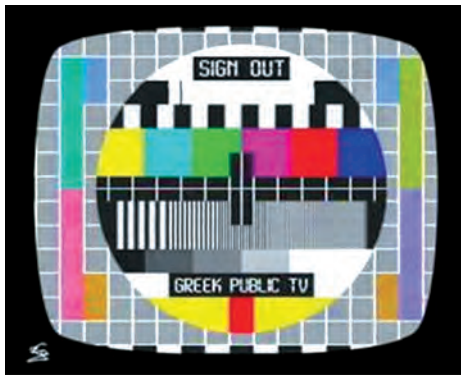
심각한 경제난으로 ‘유로존 위기’까지 몰고 온 그리스는 지난 3년간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정부 주도로 긴축 재정을 단행해 왔다. 그리스 관련 최근 뉴스는 대부분 정부의 긴축 재정 추진과 그에 대한 민간의 저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그리스 정부의 ERT 잠정 폐쇄 소식은 그리스 연합정권을 흔들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 내부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보도나 뉴스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스 정부의 ERT 폐쇄 조치의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이 전개된다. 정부가 추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내년까지 1만 5,000명을 감원해야 하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ERT와 정부의 정치적 이유, 공영방송의 존재와 역할이라는 미디어적 관점이 뒤엉켜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ERT 폐쇄 발표가 있었던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시모스 케디코글루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6월 11일 오후 5시 45분쯤 안도니스 사마라스 총리의 성명을 대독했다. 케디코글루 대변인은 “ERT는 다른 민간 방송사에 비해 운영비는 3~7배가 들고 인력은 4~6배가 많으면서도 시청률은 다른 방송사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ERT는 불투명한 경영과 낭비의 천국이었지만 이것도 오물로 끝이다”라며 ERT의 문을 닫는다고 선언했다. 케디코글루 대변인은 또 “ERT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는 ‘쓰레기’의 전형”이라며 ERT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대변인 성명이 발표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ERT의 송출이 전격 중단됐다. ERT가 운영하는 ET1 채널은 시위 현장을 중계하는 뉴스를 전하던 도중 끊겼고, NET 채널은 ERT의 역사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며 최후를 알렸다. ERT의 한 기자는 송출 중단 직전 방송에 나와

“정부의 쿠데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2일에는 ERT가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방송도 멈췄다.



송출이 중단된 ERT ET1 채널
(출처 : InsideGreece, 「ERT off air : Thought for the day」,
2013년 6월 12일자)

정부의 이날 ERT 폐쇄 발표는 사전에 어떤 예고나 논의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파를 던졌다. 정부는 의회에서의 논의나 각료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합법적인 특별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ERT 직원들과 노조, 상급 노동단체 등의 저항을 피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급증한 부채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그리스는 2010년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왔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 4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추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내년까지 1만 5,000명의 공공부문 인력을 추가로 감축한다

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첫 번째 타깃으로 ERT 소속 직원 2,656명이 ‘선정’된 것이다.

1938년 그리스라디오재단(EIR)으로 개국해 1965년 TV 시험방송을 거쳐 이듬해 ET1, NET, 1988년 ET3 TV 방송을 시작하는 등 3개 전국 지상파 TV 채널과 2개 HD·위성 채널, 6개 라디오 채널 등을 운영해온 ERT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점령당해 중단된 적을 제외하고는 지난 75년간 꾸준히 방송을 이어왔다. 시청료와 라이선스 비용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추가 예산이 필요해 정부로부터 전체 운영비의 약 25% 정도를 보조금으로 받았다.

공영방송 폐쇄에 대한 저항

ERT의 폐쇄 소식이 알려진 날, ERT 직원들과 노조는 물론 시민 수천 명이 아테네 시내 ERT 방송국 앞으로 몰려와 ERT 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세금 부담 등에 반발해온 이들에게 ERT 폐쇄는 직원 2,600여 명 해고 이상의 의미였다. 구조조정으로 유일한 공영방송까지 폐쇄되는 상황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이다.

ERT 폐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예상 밖으로 컸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



수천 명이 모인 ERT 본사 앞 시위 현장(출처: itv, 「Greeks strike over state TV」, 2013년 6월 13일자)

민들은 사마라스 총리의 퇴진을 촉구했다. 또 버스와 철도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ERT 노조의 요청에 따라 하루 총 파업에 돌입했다. ERT가 운영하는 2개의 국립 오케스트라 음악인들도 ERT 빌딩 앞에서 정부의 폐쇄 조치에 항의를 표시하는 릴레이 연주회를 개최했다. 그리스 현지 일간 에펜디티스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ERT 잠정 폐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유럽방송연맹(EBU)도 그리스 정부에 ERT 방송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 폴 필리포 노조위원장도 “방송국의 문을 닫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라며 “ERT의 문을 다시 열고 방송 신호 송출과 인터넷 연결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ERT와 같은 공영방송인 영국 BBC도 ERT 방송 재개 촉구에 가세했다. BBC 토니 홀 사장은 그리스 정부에 ERT 방

송을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리스 정부의 갑작스러운 ERT 폐쇄 조치는 “비민주적이고 전문가답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그리스 정부에 방송 재개를 촉구한 BBC 토니 홀(Tony Hall) 사장
(출처: the guardian, 「ERT: BBC director calls on Greek government to reopen broadcaster」, 2013년 6월 13일)

BBC를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등 50여 유럽 방송사 대표들은 유럽방송연맹을 통해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공공 서비스 미디어의 존재와 정부로부터 그들의 독립은 민주

주의 사회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문제로 번진 ERT 폐쇄 사태

노조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ERT 폐쇄는 정치권으로 불뚝이 튀었다. 야당인 좌파 정당 시리자당은 물론, 3당 연합정권(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중도 좌파 사회당과 민주좌파당도 ERT 폐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수 집권 세력인 우파 정당 신민당이 연정 파트너들과도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감과 함께, 국민들의 반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알렉시스 시프라스 시리자당 당수는 “ERT 폐쇄는 명백한 불법이며 정부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 승인 없이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사회당과 민주좌파당 당수들도 성명을 내고 “ERT 폐쇄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케디코글루 정부 대변인은 6월 11일 ERT 폐쇄 성명 발표 후 “새로운 공영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가급적 빨리 만들어져 방송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12일 “ERT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방송국으로 재개국하게 될 것”이라며 “재개국시 (해고된) 일부 직원은 다시 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RT의 뒤를 이을 ‘새롭고 깨끗한’ 방

송 NERIT(새로운 그리스 라디오 인터넷 텔레비전)를 8월 말 개국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자 사마라스 총리도 14일 “비상위원회를 꾸려 (해고된) 일부 필수 인력을 다시 고용해 ERT를 대체하는 소규모 방송국을 만들어 일부 프로그램을 방송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ERT 직원들은 물론, 연정 파트너들로부터도 부정적 반응을 얻었다.



그리스 총리 안도니스 사마라스(출처: 호주 ABC, 「Greece's Democratic Left party quits ruling coalition after state TV channel ERT closed down」, 2013년 6월 22일자)

연정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연정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다급해진 사마라스 총리는 17일부터 연정 파트너들과 협상을 시작했다. 1차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연정 대표들은 19일 2차 회의를 열고 3시간 30분 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어 20일 열린 3차 회의에서도 사마라스 총리는 에반젤로스 베니젤로스 사회당 당수와 포티스 쿠벨리스 민주좌파당 당수와 만나 ERT 문제 등을 협의했

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송을 재개하라는 사회당과 민주좌파당의 요구에 사마라스 총리는 “ERT를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며 버틴 것이다.

쿠벨리스 당수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없었다”며 “(정부의 ERT 폐쇄 결정은) 합법성 문제였는데 우리는 정부의 적법하지 않은 조치에 의견을 달리 했다”고 밝혔다. 베니젤로스 당수는 “그리스는 다시 매우 중대한 상황에 처했다”며 연정 유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왼쪽부터 에반젤로스 베니젤로스 사회당 당수, 포티스 쿠벨리스 민주좌파당 당수, 안도니스 사마라스 총리
(출처 : Greek Reporter, 「Greek Court Leaves ERT, Coalition In Limbo」, 2013년 6월 18일자)

연정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좌파당은 21일 연정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 민주좌파당의 연정 탈퇴 소식에 그리스 주식시장은 전일 대비 6.11%나 급락했다. 민주좌파당의 탈퇴로 연정에는 신민당과 사회당이 남아 가까스로 과반을 넘기는 상황에 처했고, 정치적 불안은 더욱 커졌다. 사회당도 ERT 폐쇄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민주좌파당의 연정 탈퇴로 출범 1년 만에 위기를 맞은 사마라스 총리는 24일 베니젤로스 사회당 당수를 외무장관 겸 부총리로 임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 애썼다. 사회당은 ERT 폐쇄에 반발했지만 연정 붕괴로 조기총선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잔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회당이 ERT 구조조정을 비롯한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이지 않아 불안하게 유지된 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 행정법원은 6월

17일 정부가 ERT의 방송신호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ERT 송출을 중단한 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재정장관과

미디어 담당 장관을 상대로 “새로운 방송국이 만들어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까지 공영방송에 의한 방송 송출과 인터넷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ERT 구조조정 추진에 이용하는 모양새다. 터키 일간 휴리에트데일리뉴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그리스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ERT 폐쇄 및 새로운 공영방송 설립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ERT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유럽의회와 법원, 유럽방송연맹, 유럽의 공영방송 대표들이 강한 반대의 뜻을 표하자 채권단인 EU와 영국을 비롯한 IMF 등은 ERT 폐쇄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며 진땀을 흘렸다. IMF 제리 라이스 대변인은 “ERT 폐쇄 조치는 그리스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IMF는 긴축정책에 있어 특정 공기업의 구조조정까지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ERT 폐쇄를 촉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 정부의 공공부문 관련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유럽의 민주주의와 가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공공 서비스인 방송의 역할이 핵심적이고 이는 어떠한 경제적 상황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RT 폐쇄, 불가피한 조치인가,

언론 탄압의 의도인가?

그렇다면 ERT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봤을 때 그리스 정부의 ERT 폐쇄 결정은 재정 감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대다수 공영방송들이 공공성을 위한 프로그램 만들다 보니 수익성이 낮아 적자를 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게다가 그리스는 국제채권단으로

부터 공공부문 인력 감축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어, ERT 폐쇄 조치는 구제금융을 위한 좋은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ERT 소속 직원들은 ERT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첫 희생양이 된 것에 대해 ‘언론 탄압’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한다. ERT가 공영방송임에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상당히 내왔으며, 일각에서는 ERT가 사마라스 총리와 집권 신민당보다 사회당 등 다른 당을 지지하는 보도를 다수 내보내 ‘미운 털’이 박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폐쇄된 ERT 조정실엔 “혁명은 방송되지 않습니다”란 문구가 붙여져 있다.

(출처 : the guardian, 「Greece's state broadcaster defies government closure; RBS boss in shock resignation – as it happened」, 2013년 6월 12일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정부는 그동안 ERT를 ‘개혁’하겠다고 수차례 메스를 댔지만 ERT 강성 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디코 글루 대변인은 “그동안 ERT 기술자들을 방송국 두 건물 간 재배치하는 것도 저지당하는 게 현실이었다”고 밝혔다.

그리스의 미디어 전문가 조지 플레이오스 교수는 “사마라스 정부가 ERT 폐쇄를 원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문

제”라며 “정부가 ERT의 사장과 특별 자문관을 직접 배치했지만 (ERT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ERT 직원들은 1년 전 사마라스 정부와 새로운 임원들의 과도한 프로그램 요구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이 같은 시위는 사마라스 총리의 중국 방문 및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그리스 방문 등 중요한 행사 기간에도 이어져 보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ERT 직원들은 또 반정부적 내용의 가디언 보도를 전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해고당했던 ERT의 유명 앵커 2명을 다시 채용하라는 ‘압력’을 넣기도 했다.

ERT 폐쇄 조치에 대해 민영 방송사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정치적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플레이오스 교수는 “ERT 폐쇄 조치 뒤에는 극단적 보수주의인 사마라스 총리와 그의 정부, 민영 미디어 소유주들, 그리고 파시즘적 극우 정당인 황금새벽당 간 동맹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은 민주적이고 관대한 조직 (ERT)이 계속 운영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RT 노동조합은 11일 오후 폐쇄 발표 직후 “정부가 채권단의 요구에 따르려고 공영방송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방송국 점거 시위에 들어갔다.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지만 회사 건물에서 나가

지 않고 연좌 농성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소속 직원들은 “ERT가 원상 복구 될 때까지 점거 시위를 벌일 것”이라며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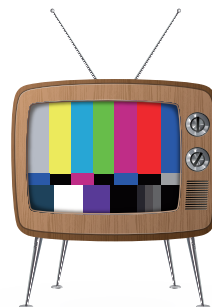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는 ERT 직원들
(출처 : London Evening Standard, 「Crisis as Greek premier pulls the plug on state broadcasters」,
2013년 6월 12일자)

ERT의 저항과 NERIT의 등장

해고된 ERT 직원들은 경찰의 무력 조치로 화면 송출은 막혔지만 유럽방송연맹 (EBU)의 도움을 받아 자체 인터넷 방송을 제작하는 등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 EBU는 자체 위성 시스템과 인터넷 망을 ERT 측에 제공, ERT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그리스와 유럽 등에 내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식 채널이 막힌 상황에서 이른바 ‘해적방송’을 하게 된 것이다. ERT 한 기자는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익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보내는 것”이라며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악조건 속에서도 이어진 ERT 해고 직원들의 자체 방송 송출은 이례적으로 대





NERIT 시험방송 화면(출처 : Greek Reporter, 「Greek Public Television Is On Air」, 2013년 7월 10일자)

중의 큰 지지를 받았다. 일반 시민 수천 명이 ERT 건물 앞에 텐트를 치고 시위에 동참했으며, 지식인과 예술가, 음악인 등이 무료 공연과 쇼를 하며 ERT 직원들의 항의 방송에 지지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ERT는 자체 스튜디오를 열어 노동자 권리와 언론의 자유, 이민 문제, 공공 의료, 신자유주의 정치 등 민감한 문제들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 여론 형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ERT의 이 같은 새로운 시도는 대중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시청률도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

물론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ERT 조직이 방만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기습적 폐쇄는 잘못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 정부는 ERT 폐

쇄 결정을 발표한 지 거의 한 달 만인 7월 10일 새로운 공영방송 NERIT에 대한 시험방송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기존 ERT 채널에서 시험방송이 시작되었으며 국영TV 로고가 왼쪽 상단에 나타났다.

정부와 ERT의 갈등은 아직도 '현재진행형'

판테리스 카프시스 그리스 문화장관은 이날 “몇 시간 내 시험방송용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방송될 것”이라고 밝혔고, 오후 9시부터 시험방송이 시작됐다. 카프시스 장관은 “새 방송 채널을 위한 인력 채용도 이뤄질 것”이라며 해고된 ERT 직원 중 상당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그동안 1,000명 안팎의 인력 충원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ERT 노조는 새 방송사 출범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으며, 그리스 언론 노조도 이를 거부하는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험방송을 시작하고 새로운 인력 충원을 예고하면서 ERT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점거 시위를 보도하기 위해 모인 기자들
(출처 : The National Herald, 「Greece To Close, Re-Open National Broadcaster ERT」,
2013년 9월 5일자)

언론인 출신인 카프시스 장관은 “새로운 공영방송은 비용이 덜 들고 인력도 적을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며 “BBC 모델과 감독기구 방식을 적용,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막고 새로운 방송인들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방송을 위한 채용은 ERT 노조가 점거 농성을 끝내야 비로소 이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ERT 기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반대하고 있다. 한 기자는 “시험방송 개시는 불법적 조치이며 ERT를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다른 기자는 “정부가 개혁 운운하지만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에 남기보다 다른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RT 직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배경에는 정부가 새 공영방송을 하겠다고 새로운 직원들을 뽑겠다고 발표하면서, ERT 해고 직원들로부터 새로운 자리에 대한 지원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600여 명 가운데 1,000~1,200명 정도를 선별해서 재배치한다는 계획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직원들은 “입맛에 맞는 인력만 다시 채용하겠다는 속셈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키워 언론을 길들이려는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와 ERT 간의 첨예한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새로운 방송국 개설과 신규직원 채용을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밝힌 대로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새 방송국을 운영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ERT 폐쇄 사태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리스 정부가 유일한 공영방송 ERT를 구제금융의 희생양으로 삼아 폐쇄시키는 강수를 둬으로써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공영방송 등 언론 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갖고 변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국제사회의 감시와 관심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

일본의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나



김. 황성빈
릭교대학(立教大學)
사회학부 교수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지적한 고노 요헤이
중의원의장 인터뷰 기사(출처: 아사히신문,
「右傾化への歯止め必要(衆院選 ここに注目)」,
2012년 12월 12일자)

작년 12월 일본에서 아베(安倍晋三)정권이 들어선 후 경제가 호전되고,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까지 결정되면서 정권의 행보가 자못 의기양양하다. 현재의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재정 의하고, 집단적 자위권도 용인하고, 전쟁과 무력의 포기를 담은 이른바 평화헌법을 자주헌법으로 바꾸는 것이 궁극적인 정치 목표라고 주장하는 자민당의 보수·우파가 세력을 확장하며, 1955년 이후 자민당의 주요축을 이루어왔던 리버럴(liberal) 세력은 현저히 퇴조했다. 또 극우적 언사로 유명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씨가 대표인 일본유신회 등의 등장으로 일본 정치는 ‘우경화’를 앞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전 중의원의장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의 지적도 있다(아사히신문 2012년 12월 12일자 조간).

역사인식을 둘러싸고도 마찬가지이다. 아베 수상은 국회 답변에서 “침략의 정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명기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의 담화)를 수정

할 듯한 자세를 보였다. 이른바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 강제동원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군의 포괄적인 관여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도쿄재판(東京裁判)의 A급 전범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등을 ‘합사(合祀)’한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 참배에 대해 ‘영령(英靈)에 대한 애도’는 일본인 마음의 문제라며 주변 각국의 우려를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라며 비판한다.

그런 한편 여론의 차원에서는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언제까지 사죄를 되풀이해야 하느냐며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를 자학적이라고 비판하는 의견에 심정적 지지가 확산되고 있고, 특정 국가(주로 중국과 한국)나 민족에 대한 배외주의적 주장과 시위행동을 전개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중국과 한국에 대한 기피반응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위세 등등한 국내용 레토릭(rhetoric, 편집자 주: 수사법)과는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지난 7월의 참의원선거의 압승 이후에도 아직 ‘우경화’를 구체화하고 있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일본의 언론인들의 ‘우경화’ 인식은 한국의 언론이 전하는 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아사히신문의 주필을 지내고 동아일보에 <와카미야의 東京小考>라는 고정 칼럼을 집필중인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씨는 “다수의 일본인에게에는 아베 수상과 이시하라씨의 우경화 노선에 동조하고 있는 느낌이 없지만”, 한국, 중국, 북조선의 자극이 “내셔널리즘을 부추겼고 아베 정권은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이용해 등장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던지며, “일본도 삼가고 조심해야 하지만, 한국도 너무 쉽게 일본 비판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측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동아일보 2013년 1월 10일자).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출처: 위키피디아 [ja.wikipedia.org])

| 와카미야의 東京小考 |

일본의 우경화를 돕는 일

와카미야 요시부미
아사히신문 주필



독도-센카쿠 분쟁-로켓 발사-
일본엔 초강력 태풍
매마침 오른쪽 향해 서있던
'아베의 등' 밀어줘

한국 새 대통령에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서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일본에도 확산되고 있다. 나도 새 정권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과감한 특사를 파듯하게 맡아준 것은 기쁜 일이었다. 차기 대통령은 일한 관계를 수복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에게 쏟아지는 한국의 눈초리는 따갑다. 지난해 말 도쿄(東京)에서 열린 일한포럼에서는 일본의 우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한국 측 참석자들에게서 분출했다.

무리도 아니다. 일한포럼 자리에는 현법을 개정해 국방군을 만든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선포행사를 정부 주최로 한다" "역사교과서의 근면제국조항 수정을 검토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과거를 깨끗하게 사죄한 프라이마 도미이치(福田康夫) 총리 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 수정은 예전부터 아베 총리의 지론이다. 만약 이런 것들이 모두 정말로 실현된다면 나조차도 이 나라를 탈출하고 싶다.

포럼에서 일본 측 의견은 나왔지만 "우경화에는 실패" 없다는 반론이 많았다. 예컨대 자민당이 이긴 것은 민주당 정권의 실책에 대한 반동일 뿐이다. 정당이 난립한 가운데 소신각주(小信각주)라고 자민당이 외쳐서 너무 많이 가져간 것뿐이다. 자민당에 대한 기대는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내건 정책 재선에 맞춰져 있다. 아베 총리도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론을 관철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개헌론에는 합리적인 부분도 있어 위험한 우경화와는 별개의 이야기다. 하물며 일본 전체가 우경화하고 있는 것이 생각하는 것은 못박아도 되는 주장이었다.

한국 측이 다시 비판했다. 총선거에서는 일본유신회도 약진했는데 총선 전에 유신회 대표에 오른 인물은 아베 총리보다 우파적인 이시하라 신타로(石橋太朗) 씨 아닌가. 주변국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 확실히 우경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등...

이런 공방을 듣고 있으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느꼈다. 다수의 일본인에게에는 아베 총리와 이시하라 씨의 우경화 노선에 동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 하지만 한국의 어떤 참사가 있었듯이 일본에서 타격을 할 때 자신이 오른쪽을 향해 서있다는 걸 눈치 채지 못하면 위험하다. 타구가 크게 O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서있는 일본을 한국은 단지 매섭게 비판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나는 이런 발언을 했다. 일본에서도 아베 정권의 부활을 예견한 사람은 몇 개월 전까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기고, 총선거에서도 가세를 올린 것은 바람에서 뒤바뀌어 붙어왔기 때문이다.

뒤바뀐 것은 무엇인가. 육상경기의 3단 멀리뛰기에 비유하면 이명박 대통령, 다케시마(독도) 방문과 일한포럼 발언이 홈, 센카쿠(尖閣) 영도를 둘러싼 중국에서의 반일 폭동이 스프, 그리고 정르는 북한이 초아슬린 정거라 로켓이었다. 모두 일본을 자극해 내셔널리즘을 부추겼고, 아베 정권은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이용해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한국과 중국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북한은 그렇다 쳐도 우리는 일본의 태도에 분노를 나타낼 뿐인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맡아주는 것이냐"고 반문할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돌아보면 민간이 앞장서서 반정인가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점은 작년 여름부터 돌아서서 돌풍이 오른쪽을 보고 서있던 아베 신조의 등을 밀어줬다는 사실이다.

대통령만 책임질 생각은 없다. 한국 언론 다수도 일본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고 늘 격한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책망만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고심해 짜낸 아시아여성기금을 조금 더 배려했으면 고노 담화 수정과 같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개헌에는 지극히 지위대도 지금 그대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중국 사람들이 담담한 듯이 "일본은 군대를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위화감을 느낀다. 두 나라 모두 당당한 군대를 갖고 있는 데다 특히 중국은 군비 확장으로 주변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 군국주의의 과오를 반한 일본은 별개라는 점은 알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군대를 갖지 않고 해외의 전쟁에도 휘말리지 않는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그런 점을 일깨워 이해해주고 있는가. 평화화를 위해 피를 흘려라 하지 않는 국가라고 일삼고선 당하는 일도 있다는 점에 조금이라도 동정을 받을 수는 없을가. 그런 이해심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왜 일본만 손발이 묶여 있어야 하나'라는 반발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은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도 너무 쉽게 일본 비판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서로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와카미야의 東京小考> 칼럼 캡처(출처: 동아일보 2013년 1월 10일자 30면)

우경화에 대한 일본 전국일간지 보도 분석

이 글에서는 아베 정권이 등장한 작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전국일간지인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를 대상으로 우경화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신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우경화'를 포함하는 기사를 검색한 결과, 아사히는 96건, 요미우리 47건, 마이니치 84건, 산케이는 92건이 추출되었다. 이 결과는 일본 신문의 입장 지형을 고려할 때 흥미로운 것이다.

흔히 아사히와 마이니치가 ‘리버럴’한 입장이고(일본에서는 진보나 혁신이라는 용어는 공산당이나 과거의 사회당에 대해 쓰인다), 요미우리과 산케이는 보수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경화’에 대한 관심은 아사히와 산케이가 높게 나타났고 보수를 대표하는 요미우리가 가장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사히와 마이니치의 경우 ‘우경화’를 우려할 추세로 보는데 반해 요미우리는 그렇지 않다.

물론 ‘우경화’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아니다. 일련의 아베 정권의 움직임과 언사는 ‘보통국가화’를 지향할 뿐이지 ‘우경화’는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보면 보수 신문의 경우가 훨씬 많게 나타난다. 공통점도 있다. 우경화를 제기하는 주체(정보원)는 대부분이 중국, 한국이라는 점이다. 일부 연립여당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과 자민당의 전 중의원 의장 등의 발언이 뉴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 불과했고 외부 필자들의 기고는 각 신문사의 입장과 공명하는 논평이었다.

공영방송 NHK의 경우

먼저 우경화 문제를 둘러싼 ‘중간’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객관·중립의 보도로 정평이 나 있는 일본방송협회(이하, NHK)의 뉴스 기사를 분석해보면, 해당기간 동안 ‘우경화’를 포함하는 기사는 모두 11건이었다. 데이터베이스는 NHK의 뉴스원고를 수록한 G-Search(<https://db.g-search.or.jp>)를 이용했는데, NHK의 경우 뉴스센터에서 작성하는 원고를 산하의 모든 방송국과 채널에서 공유하고 있어 검색된 기사의 건수가 뉴스의 빈도나 중요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경화를 다룬 기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정보원은 한국 야당의원, 다나카(田中均) 전 외무심의관, 한국 대통령, 중국 미디어, 그리고 후쿠시마(福島瑞穗) 사민당 당수,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의장, 북조선 미디어였고, 그 밖에 뉴스의 직접적인 소스(정보원)로 아베 수상과 오노데라(小野寺五典) 방위상이 등장하는데, 모두 우경화 비판에 대한 반론이었다.

2012년 12월 4일에 공시되어 16일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 기간에는 ‘우경화’를 포함하는 기사가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중립을 의식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후에는 주로 한국, 중국, 북조선에서 제기되는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관련된 비판을 ‘우경화’ 비판으로 전하고 있다. 2013년 2월 14일에



오노데라 방위상이 6월 1일 싱가포르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우경화라는 지적은 오해”라는 내용을 연설하는 모습(출처 : NHK, 2013년 6월 1일자)

는 북조선 미디어의 비난, 4월 23일에는 고노 요헤이 씨의 한국 강연, 그리고 4월 24 일에는 일부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 고, 다음 날에는 사민당 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한 기자회견 을 다루었다. 이처럼 NHK의 우경화 관련 보도에서 우경화를 지적하는 나라는 한국 과 중국으로 국한되고 있고, 국내의 정치인 등이 정보원이 된 경우에도 두 나라의 입 장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문맥화된 경우가 많았다.

한편, 6월 1일에는 오노데라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회의 연설에서 “우경 화라는 지적은 오해”라고 주장하며, “방위비 증액과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하는 헌 법 개정 논의는 지역안정을 위해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 고 강조하고,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도 “역대 내각과 같은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고 한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같은 날 이와 관련된 뉴스에서는 중국군 간부가 센카 쿠 국유화가 현상유지라고 주장한 오노데라 방위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 발하는 소식을 전했고, 남중국해 섬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는 나라 들인 베트남과 필리핀 참석자들의 의견을 소개해, 중국과의 대립을 강조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이처럼 NHK는 ‘우경화’에 대해 어떠한 논평이나 입장을 부여하지 않으며, 건조한 톤으로 뉴스를 전달했지만, 중국과 한국의 비판이라는 문맥에서만 우경화를 다루 고 있다는 점은 특기해야 할 것이다.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자위대의 집 단적 자위권 용인 문제, 헌법 개정문제, 종군위안부 문제는 모두 중요한 정치문제로 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런 뉴스에서는 ‘우경화’라는 단어는 쓰이고 있지 않다.

리버럴신문 아사히의 경우

아사히의 경우는 분석기간 동안 96건의 기사에서 ‘우경화’가 등장한다. 월별 분포는, 2012년 12월에 34건, 2013년 1월에 8건, 2월 1건, 3월 3건, 4월 6건, 5월 6건, 6월 16 건, 그리고 7월 14건, 8월에 10건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많은 기사가 게재된 작년 12 월과 올 7월에는 각각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있었고, 6월에는 오노데라 방위상의 ‘우경화 지적은 오해’라는 설명을, 그리고 8월에는 아소타로(麻生太郎) 부총리의 나 치스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되었고, 8월 15일을 전후해서 역사인식 문제를 다루는 해 설기사 등에서 우경화가 다뤄진 경우가 많았다. 해당기간에 ‘우경화’가 등장하는 사 설은 아래의 4편이었다.

작년 12월 14일자 사설에서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아시아 의 일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서 이해를 나타내는 움직임도 있지만, 많은 나라

2012년 12월 14일 '총선거 헌법 개정 리셋 버튼은 아니다'
 2012년 12월 17일 '자민 대승 아베 정권으로 안정된 정치'를
 2013년 6월 4일 '우경화 부정 '오해'라고 주장하자면'
 2013년 6월 18일 '수상의 반론, 이론(異論)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Simon Wiesenthal Center to Japanese Vice Prime Minister: Which 'Techniques' of the Nazis Can We 'Learn From'?

July 30, 2013

The Simon Wiesenthal Center urges Japanese Vice Prime Minister and Finance Minister Taro Aso to immediately clarify a statement at a lecture yesterday in Tokyo.



Remarking o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so spoke of how "we can learn from [that] technique" of the Nazis, who changed Germany's Weimar constitution "unnoticed."

"What 'techniques' from the Nazis' governance are worth learning—how to stealthily cripple democracy?" asked Rabbi Abraham Cooper, associate dean of the Simon Wiesenthal Center, a leading Human Rights NGO, adding, "Has Vice Prime Minister Aso forgotten that Nazi Germany's ascendancy to power quickly brought the world to the abyss and engulfed humanity in the untold horrors of World War II?"

leading Human Rights NGO, adding, "Has Vice Prime Minister Aso forgotten that Nazi Germany's ascendancy to power quickly brought the world to the abyss and engulfed humanity in the untold horrors of World War II?"

"The only lessons on governance that the world should draw from the Nazi Third Reich is how those in positions of power should not behave," Rabbi Cooper concluded.

“독일 나치 정권의 바이마르 헌법 개헌 수법을 배우는 게 어때냐”는 발언으로 한·중은 물론 미국의 인권단체 ‘사이먼 위젠탈 센터’ 등으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은 아소다로 부총리(출처 : 사이먼 위젠탈 센터, 「Simon Wiesenthal Center to Japanese Vice Prime Minister: Which 'Techniques' of the Nazis Can We 'Learn From'?」, 2013년 7월 30일자)

는 전쟁의 반성에서 억제적인 방위력을 관찰해 온 전후 일본의 노선전환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특히 미국에서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역사인식과 영토문제로 인접 국가들과 마찰이 고조되는 것이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어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중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12월 17일자 사설에서, 중국과 북조선이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전제하면서도, 자민당의 일련의 공약이 과연 일본의 안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후 일본의 행보를 전환한다는 시각이 인접국에서 확산된다면 국익은 손상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1차 아베 정권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숙하고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답습해 일중관계를 재건했다”며 그러한 “현실적 지혜와 판단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후 우경화 문제는 뜸해지지만, 간헐적으로 한국과 중국, 북조선에서 제기되는 비판이 뉴스로 등장하다가, 6월 4일에는 오노데라 방위상의 ‘우경화는 오해’라는 주장의 연설에 대해 사설을 실었다. “방위상이 국제회의에서 이런 ‘변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이고, “역사인식을 둘러싸고는 아베 수상의 발언이 불신을 초래했고, 우경화 비판을 초래하는 원인은 바로 역사를 둘러싼 아베 정권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변명 대신 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길을 솔직하게 제안하는 새로운 일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군

국화 일본'의 부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아사히신문은 우경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주변국과의 마찰로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또 미국에서도 일본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경종을 울리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아사히신문의 입장은 40년의 정치 취재를 회고한 와카미야 전 주필의 칼럼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시아회귀(Pivot to Asia, 편집자 주 : 2011년 10월 오바마 대통령이 천명한 대외정책으로 아시아 중심정책을 표방)를 지향하는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경계하면서도 일본의 우경화에 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 교수는 작년 11월 일본의 ‘극단적인 내셔널리스트’가 지역의 번영을 해칠 위험에 대해 영국의 신문을 통해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도 최근 무라야마 담화 등을 수정하려는 아베 씨에 대해 사설에서 못을 박았다.”(아사히신문 2013년 1월 12일자 조간)

보수신문 요미우리과 산케이의 경우

이어서 요미우리과 산케이의 보도를 살펴보자. 이 두 신문의 ‘우경화’는 주변 각국, 특히 한국과 중국이 역사문제를 정치, 외교에 이용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한다. 먼저 요미우리에서 ‘우경화’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는 모두 47건이었다. 작년 12월에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올 7월과 8월에 각각 6건의 기사가 있었다.

2012년 12월 5일자 조간은 중의원 선거 일정 공고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은 정권안정, 러시아는 경제교류 기대, 중국 한국은 ‘우경화’ 경계”라는 제목을 달았다. 12월 8일자 조간은 공명당 대표 야마구치(山口那津男)씨가 자민당의 헌법 개정요건 완화 움직임에 대해 “너무 오른쪽으로 기우는 일이 없도록” 견제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자민당이 압승한 중의원 선거가 끝나자 다시 ‘우경화’ 우려는 중국과 한국만이 제기하는 문제로 바뀐다. 12월 20일자 ‘아베 정권의 과제 일미동맹강화 구체화를’이라는 특집기사에서는 미일동맹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과 집단적자위권 인정에 대해, “노다 수상을 비롯해, 중국 등 해외 일부에서 ‘우경화’라고 비판하는 움직임이 있

Print

Joseph S. Nye
Joseph S. Nye, a former US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and chairman of the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is University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He is the author of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Era*.

Japan's Nationalist Turn

09 November 2012
TOKYO – Japan has been in the news lately, owing to its dispute with China over six square kilometers of barren islets in the East China Sea that Japan calls the Senkaku and China calls the Diaoyu Islands. The rival claims date back to the late nineteenth century, but the recent flare-up, which led to widespread anti-Japanese demonstrations in China, started in September when Japan's government purchased three of the tiny islets from their private Japanese owner.
Prime Minister Yoshihiko Noda has said that he decided to purchase the islands for the Japanese central government to prevent Tokyo Governor Shintaro Ishihara from purchasing them with municipal funds. Ishihara, who has since resigned from office to launch a new political party, is well known for nationalist provocation, and Noda feared that he would try to occupy the islands or find other ways to use them to provoke China and whip up popular support in Japan. Top Chinese officials, however, did not accept Noda's explanation, and interpreted the purchase as proof that Japan is trying to disrupt the status quo.
In May 1972, when the United States returned the Okinawa Prefecture to Japan, the transfer included the Senkaku Islands, which the US had administered from Okinawa. A few months later, when China and Japan normalized their post-World War II relations, Japanese Prime Minister Kakuei Tanaka asked Chinese Premier Zhou Enlai about the Senkakus, and was told that rather than let the dispute delay normalization, the issue should be left for future generations.

일본의 극단적인 내셔널리스트를 지칭한
조셉 나이(Joseph S. Nye) 교수의 신문 기고글
(출처 : project syndicate, 「Japan's Nationalist Turn」,
2012년 11월 9일자)



공명당 대표 야마구치 나쓰오
(출처 : 위키피디아[ja.wikipedia.org])

지만, 이는 보통국가가 당연히 해결해야할 테마라고 내외에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가 바뀌어 1월부터 5월까지의 간헐적으로 중국, 한국에서 제기되는 ‘우경화 비판’을 단신으로 게재하는데, 4월 25일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한다는 발언을 다루면서, ‘한국 대통령의 비판’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6월 1일에는 다른 신문과 마찬가지로 오노테라 방위상의 ‘우경화는 오해’라는 연설을 석간에 단신으로 게재하고, 다음 날 조건에는 해설 기사를 게재했는데, “아베 정권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안전보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움직임이 ‘역사인식’을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비판과 혼동되어, 일본이 ‘우경화’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었다.

또 7월의 참의원 선거기간에는 야당의 ‘우경화 비판’을 부당한 ‘낙인찍기’라는 입장을 나타내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전개했다.

“표를 노린 대중영합적인 주장이나 상대를 모욕하는 비방, 중상이 횡행하기 십상이다. 특히 주요논점의 하나인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후회귀’, ‘우경화’라는 레텔(レテル, 편집자 주: 라벨)을 붙이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7월 5일 조건, 정치부장의 해설기사)

“민주당은 선거전에서 자민당 등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정당을 들어 ‘우경화’라고 레텔을 붙이는 전략을 전개했다.”(7월 20일 조건)

8월 15일 사설은 일련의 문제에 대한 요미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주목된다. 제목은 ‘중국, 한국의 반일(反日) 경사(傾斜)를 우려한다. 역사인식 문제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달았다. “전후 일본은 쇼와(昭和)의 전쟁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 재출발해 평화리에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정부개발원조와 자위대의 국제평화 협력활동 등을 통해서 폭넓게 국제사회에 공헌도 했으며,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어왔는데, 유독 중국과 한국만은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 대일비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극히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개탄하고 있다. 이어 이 사설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우경화 비판을 거론하며, 이러한 태도는 수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숙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

“정치가로서 역사인식을 포함한 영토, 주권에 관한 견해를 국제사회에 대해 끈질기게 호소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후에 쌓아온 평화와 번영을 더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국과 화해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하다.”

현실주의를 지향하는 요미우리다운 마무리인데, 중요한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바로 사설을 시작하는 “쇼와의 전쟁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라는 표현이다. 요미우리는 1931년의 만주사변부터 1945년의 패전까지 일본의 전쟁을 ‘쇼와의 전쟁’이라고 적고 있는데, 즉 그 이전의 메이지와 다이쇼의 전쟁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고, 따라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명시한 무라야마 담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8월 16일자 사설도 주목할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이 한일양국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연설에 대해, “위안부나 다케시마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며 “억제적이었다”고 평가한 다음, “위안부 보상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서 법적으로 해결되었고, … 역사인식 문제로 일본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며 대화나 교류를 거부하는 방식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요미우리는 일련의 아베 정권의 움직임을 ‘보통국가화’로 파악하며 이를 우경화로 비판하는 국내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역사인식을 둘러싼 주변국가의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문제의 정치적 이용이라며 경계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제를 첨예화시켜서 외교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 배경에는 미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 그리고 사회의 ‘우경화’ 경향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어서, 재특회를 비롯한 배외주의 집단의 데모행위에 대해서는 사건 기사 이외에는 거의 게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미우리의 논조와 비교해 산케이의 논조는 색다르다. 같은 기간 동안 92건의 ‘우경화’ 관련 기사를 게재해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대부분은 우경화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반론하는 의견기사가 많았다. 한국과 중국의 우경화 비판에 대해서는 이를 ‘반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내 좌파의 움직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오해’를 푸는 적극적 선전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상호 비평의 문화가 없



중국과 한국의 반일 감정에 대한
요미우리 신문의 8월 15일자 사설

는 일본의 저널리즘에서 유일하게 다른 신문(아사히신문)의 논조를 비판하는 신문이기도 하다.

글을 마무리하며

‘우경화’ 문제를 둘러싼 일본 언론의 나름대로 다양한 입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여전히 애매한 문제로 남는다. 글을 마무리 지으며 미국의 베트남전쟁 보도를 분석하며, 여론의 영역을 ‘일탈의 영역’, ‘정당한 토론의 영역’, ‘합의의 영역’으로 나누는 다니엘 할린(Daniel Hallin, *The Uncensored War: The Media and Vietn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의 분석틀을 원용해 보고자한다. 일본 언론의 입장과 여론의 지형을 분석할 때는 이 세 영역에 더해 음양(陰陽), 또는 다테마에(建前, 편집자 주: 속마음을 감춘 채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와 혼네(本音, 편집자 주: 진짜 속마음), 또는 겉과 속, 이성적 판단과 감정의 차원을 덧붙여도 좋을 것이다. 즉 겉으로는 합의의 영역인 것으로 비추지만 마음의 차원에서는 치열한 정치의 영역인 경우도 있겠고, 일탈의 영역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집단에 따라서는 암묵적 합의의 영역인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인종주의의 문제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지난 8월 28일에는 마틴루터킹 목사의 워싱턴 행진 50주년을 기념해 각 신문에서 특집을 게재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고백처럼 슈퍼마켓과 거리에서 지나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정치의 영역임을 알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언론의 ‘우경화’ 보도를 생각해보면 어떤 분석을 내릴 수 있을지가 이 글의 문제관심이었다. 먼저 공영방송인 NHK의 보도를 통해서 ‘중간’ 영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했는데, NHK에서 ‘우경화’를 둘러싼 문제는 국내의 정치적 이슈로서 ‘정당한 토론’의 영역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중국과 한국 등의 주변국이 주로 역사인식의 문제를 들어 비판을 제기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정치의 우경화’보다는 ‘역사인식의 우경화’가 ‘외교 문제’로 논의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어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살펴보았는데, 아사히의 입장이 ‘우경화 비판’을 주로 중국과 한국의 비판으로 다루면서도, 미국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함께 다루면서 주변국과의 갈등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안전과 외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며 현실적 대응을 촉구하는 논조라면, 요미우리는 헌법 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 등 일련의 자민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보통국가화로 보기에 야당의 ‘우경화’ 비판은 부당한 낙인찍기이고, 인접국가의 역사인식 비판은 역사의 정치적 이용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국제정세를 고려해 첨예화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입장이었다.

같은 보수신문인 산케이는 이러한 요미우리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과 한국의 정치선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었고, 미국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을 미국 내 좌파의 움직임으로 인식하는 이데올로기적 집착을 드러내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배타주의적 역사인식과 외국 및 타민족에 대한 배외주의의 확산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우경화에 대해서는 요미우리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 정치의 우경화 동향에 대해서는 아사히와 마이니치가 반대, 요미우리와 산케이가 지지로 명확히 나뉘어있지만, 원론적인 대립이 있을 뿐으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일은 오히려 드물었다. 헌법 개정은 자민당의 창당 이래의 목표였고, 자위대의 역할은 이미 극적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해외 파병도 이루어진 상태여서 더 우경화할 여지도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전후체제의 청산을 주장하는 아베 수상 또한 ‘미일동맹의 강화’ 의지를 되풀이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난 후에는 정치의 우경화 동향은 잠잠할 뿐이다.

논쟁이 활발한 것은 오히려 역사인식 문제인데, 이 문제 또한 무엇이 논쟁의 대상인지가 애매할 뿐이다. 과거의 수많은 반성과 사죄의 발언도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시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인지가 분명치 않다. 그 동안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이 밝혀온 많은 역사인식 관련 발언에는 전쟁을 둘러싼 애매한 수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지난 전쟁’ 또는 ‘과거의 잘못된 국책’이라고 할 때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일본의 보수세력에게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대전으로 이어지는 20세기 초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로 생각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국민적 작가로 불리는 시바 료타로의 대표작 ‘언덕 위의 구름’에서 묘사되듯이 그러한 인식이 ‘국민적 욕망’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요미우리가 쇼와의 전쟁으로 표현하는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15년 전쟁인데, 이는 1930년대 군부의 폭주로 시작된 것으로 보아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고, 미국의 참전을 부른 1941년의 진주만 공격이 잘못된 국책의 시작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잘 들여다보면 시간축의 왼쪽으로 기울수록 좌경, 오른쪽으로 기울면 우경으로 볼 수도 있겠다. 좌경의 끝은 1985년의 청일전쟁과 그에 앞선 ‘대만정벌’이 있고, 우경의 끝은 1941년의 진주만 공격일 것이다.

패전 후의 일본에서는 미국과의 전쟁과 원폭 투하, 항복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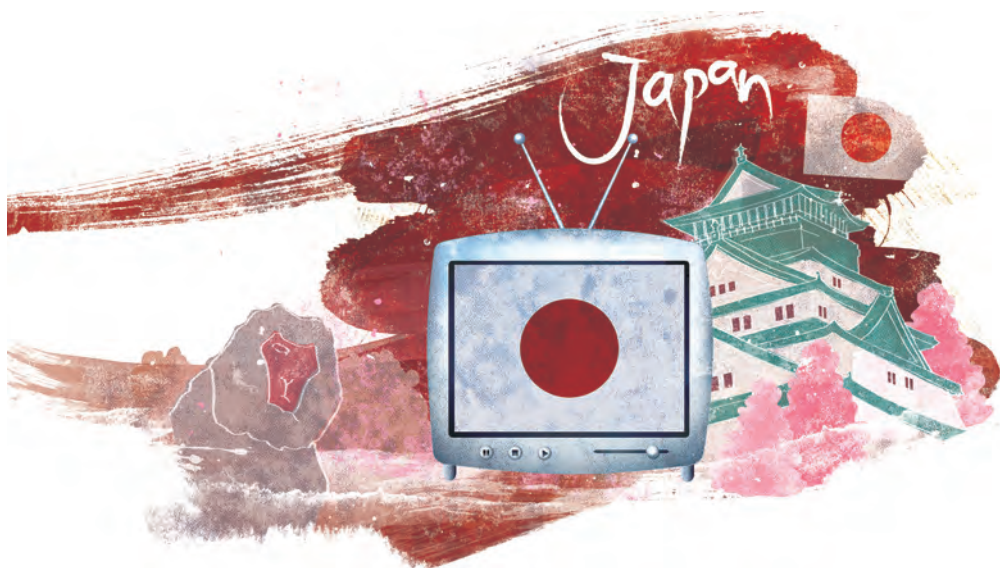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 일본 젊은이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담은 시바 료타로의 소설 ‘언덕 위의 구름’

이 지배적이었고, ‘상실’한 식민지와 만주침략의 기억은 망각되었으며 어쩌다 생각나는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1972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에 다시금 아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고,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논의가 시작된 것도 이 무렵부터이다.

냉전해체와 더불어 다시금 전쟁과 침략에 대한 기억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 정점에서 발표된 것이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였고, 여기서 일본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명기한 것인데, 그것을 이른바 ‘좌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현재의 ‘우경화’가 과거와 다른 점은 이러한 ‘좌경’에 대한 반발과 수정의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고, 그 비판의 화살은 왼쪽, 즉 한반도와 중국으로만 향하고, 태평양으로 나가 미국으로 향하는 일은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거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상대에 따라 다테마에와 혼네가 착종(錯綜, 편집자 주 : 이것저것이 뒤섞여 있음)하는 수사를 되풀이해왔다고, 언론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보다는 ‘외교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논의를 계속해 왔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쟁은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늘 ‘우리 일본’과 그들의 감정적 응수로 끝나는 것이었고, 결국은 그들을 자극하지 말고 미래를 지향해 나가자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졌던 것은 아닐까? 그것이 결국은 사회의 우경화를 가속시킨 것은 아닐까?





글.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우리도 인종차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꽃보다 할배’ 프로그램에 출연중인 신구
(출처 : tvN 홈페이지[program.interest.me/tvn])

“코가 크고 덩치 큰 백인들을 보면 우리는 좀 위축돼.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대등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기특해.”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던 ‘꽃보다 할배’(tvN) 팀의 구야 할배(신구)가 방송에서 한 말이다. 우리 구세대들에겐 백인에 대한 일종의 ‘인종적 열등감’이 있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인종적 열등감과 우월감, 물론 인종적 편견은 나쁜 것이라고 하

지만, 실은 어느 나라 사람에게나 있다. 이런 인종에 대한 잠재된 편견은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인과 백인. 이들 사이에 인종차별 문제가 일어난다면, 보통은 한국인이 피해자고 백인이 가해자일 것으로 상상하기 쉽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 있는 현지 한국 기업이 백인에게서 인종차별로 소송을 당했다. 현대중공업 애틀랜타 현지 법원에서 2009년 인사담당 간부로 일했던 미국인이 해고되자 “백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60만 달러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소장에서 “2008년 현지 법인장으로 취임한 한국인 대표가 오자마자 법인의 얼굴을 미국인에서 젊은 한국인으로 바꾸는 게 임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특하면 직원들 앞에서 ‘조직이 너무 늙었다’고 개탄하면서 나이와 인종으로 편을 갈랐다”고 주장했다. 또 한인 직원들은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고, 골프를 쳐서 소외감을 줬다는 것이다. 당시 법인장은 한 행사에서 “한국, 중국, 일본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돈이 많아 보이면 중국인, 똑똑해 보이면 일본인, 잘생겼으면 한국인”이라는 인종 가르기 식의 농담을 해서 논란을 일으

켰다고도 주장했다.

이 소송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이 소송이 알려진 건 한국기업이 이겼다는 통신 보도를 통해서였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회사가 한인을 선호한 건 인종적 이유보다 사업적 이유로 판단된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일부 통신과 인터넷 매체에 보도됐으나 일간지 등 주요 매체에 선관심을 받지 못했다. <중앙일보>만 이제 한국인들도 인종문제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칼럼을 내보낸 게 거의 전부였다. 뉴스밸류로 볼 때 이긴 사건이라는 점에서 크게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고, 미국 지역 뉴스여서 크게 중요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글로벌 경쟁에 나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세계화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도,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역사도 20년 남짓밖에 안 된다. 그 사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현지공장 노동자 폭행 등 여러 가지 인종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이번 소송이 제기된 도시가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랜타였다. 조지아주엔 현대·기아차 공장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다. 여기서 지난 6월 한국계 자동차 부품공장 흑인여성 근로

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걸 계기로 반한 시위로 번진 사례도 있었다. 공장 측은 사망원인이 해당 근로자의 지병때문이라고 했지만 현지의 노동계와 주의회 의원 등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적인 가혹한 노동환경을 지목하면서 착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위는 반한운동으로 번져서 애를 먹었다. 이렇게 인종문제는 감정적이고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나면 수습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젠 갑이 된 한국인들의 '한국적 방식'에 대해 현지인들은 '차별' 혹은 '착취'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젠 우리도 인종문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된 거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을 배척하거나 낯설어 해도 이게 인종차별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로 살아왔고, 한국인들은 외세를 침략의 주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거다. 그렇다 보니 인종차별이라는 문제 자체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고, 인종차별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지난해 한 공중파 방송에서 외국남자와 한국여자의 교제 실태를 보도하면서 외국남자들은 전부 한국 여성

을 유린하는 데만 집중하는 듯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다. 당시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적 의식을 비판하고, 방송사에 항의방문을 하고, 항의하는 글을 쓰고 동영상 만들어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항의했지만 한국인들은 무관심했다. 언론매체들도 이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인종차별철폐는 세계적인 핫 이슈다. 이 문제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건 오래되진 않았다. 미국에서 1955년 로자 파크스가 버스 좌석 양보를 거부해 기소된 후 흑인 인권운동으로 번지고 이듬해 인종차별철폐법안을 이끌어내면서 시작됐다. 말하자면 60년도 안 된 역사인데 이후 인류는 인종차별을 중대한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엄격히 금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고 인종차별이 없어진 건 아니다. 얼마 전 재산만 3조에 이르는 오프라 윈프리도 스위스에 여행갔다가 상점에 들어가서 비싼 가방을 보여달라고 했다 거부당하는 인종차별을 당한 일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 개개인의 차별의식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세계 사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즉각 사회 전체가 '그건 나쁜 행동'이라

고 지적하는 등 의식의 단계는 대단히 높아졌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을 이끈 로자 파크스(1913~2005)
(출처: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

인종차별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주목’하고
‘교육’해야 한다. 언론은 끊임없이 인종차별 문제

에 대해 주목하고 보도하며, 낯선 문화와 민족에 대한 반감과 차별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 다음은 공교육 과정을 통한 교육이다. 미국 인문교육의 상당부분은 인종차별 철폐의 노력이라든지 왜 인종차별이 범죄인지 등을 가르치는 데 할애돼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예 교육이 없다시피하다. 사실 다른 것에 대한 차별의식은 생래적인(편집자 주: 세상에 태어난 이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의식을 차단하려면 의식적으로 ‘차별은 나쁘다’는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한다. 이런 교육은 내가 인종차별을 하지 않고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도 하지만, 내가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인은 지금 글로벌한 존재다. 차별을 해서도 당해서도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차별금지교육은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알게 하는 데 중요하다.

간첩죄로 기소된 스티븐 김, 그의 외로운 법정투쟁

STEPHEN KIM Legal Defense Trust

HOME | ABOUT STEPHEN | ABOUT THE CASE | LEGAL DEFENSE TRUST | MEDIA COVERAGE | DONATE |

I am writing to ask for your support for my dear friend, a loyal and devoted public servant – Stephen Kim.
As you may know, on August 27, 2010, government lawyers announced that they were charging Stephen with the crime of unauthorized disclosure of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The government is alleging that in 2009 Stephen divulged classified information to a journalist about how a foreign country would likely respond to proposed international sanctions.
Stephen's lawyer, Abbe Lowell, has confirmed...

[read more...](#)



Join the Mailing List

Send your email to helpstephenkim@gmail.com to receive occasional updates on the grassroots effort to help Stephen.

Grassroots Support

Grassroots effort to publicize Stephen's plight, push the U.S. government to drop the case against him, and urgently raise funds for his legal defense.
[Learn more...](#)

Sign the Petition

We have created a petition in support of Stephen and have placed it online at:
<http://www.thepetitionsite.com/1/helpstephenkim/>.
Please read and consider signing the petition. It is fast and easy to sign the petition online so please spread the word so we can get as many online signatures as possible.



글. 천영식
문화일보 정치부 차장

스티븐 김을 후원하는 지인들이 만든
'스티븐 김 변호 기금'
(Stephen Kim Legal Defense Trust)
홈페이지
[<http://stephenkim.org>] 캡처

스티븐 김(Stephen Kim)을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 국무부의 잘나가는 엘리트 관료이자 미 최대 핵 연구소인 리버모어 연구소의 연구원. 아니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하버드 석사, 예일대 박사의 최고 학력을 지닌 한국계 미국인. 환칠한 키와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소주를 들이키는 47살의 한국인. 그것도 아니면 하루아침에 간첩죄(Espionage Act)로 기소된 비운의 한국인?
스티븐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원고지 몇 장을 채울 수 있다. 문화일보 워싱턴특파원으로 3년간 미국에 있으면서 너무나 가까이에서 그의 고통과 눈물을 보아왔기에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다. 지금도 스티븐과 함께 워싱턴 DC 지방법원을 드나들던 순간들이 눈에 선하다. 필자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스티븐은 홀로 법정에 나가고 있다.

스티븐 사건이란

스티븐 사건은 2010년 8월 한국 언론에 처음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미 국무부 검증국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Verification,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의 선임 보좌관이던 스티븐이 간첩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던 필자가 제1보로 보도했고, 국내 언론이 모두 이를 받아 대서특필했다. 자칫 한국에 소개되지도 않을 뻔 했던 이 사건은 이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게 됐다.

잘나가던 국무부 관료가 간첩죄로 기소됐다는 자체가 큰 충격이었다. 기소 내용도 한국인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이었다. 스티븐이 북한 관련 정보를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흘렸다는 게 범죄혐의였다. 미 정부의 리크(Leak, 누설) 사건은 여러 건 있었지만, 이번에는 북한 정보가 유출된데다 잘나가는 한국계 국무부 엘리트가 연루됐고, 간첩죄라는 죄목을 썼다는 이유 등이 하나같이 쇼킹한 뉴스였다.

그는 기소되면서 하루아침에 국무부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검증국 선임 보좌관이던 그는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보좌관으로 영전하기로 얘기가 끝난 상태였다고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기소되면서 모든 게 없던 일로 돼 버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를 매일같이 들여다보며 미 국익에 봉사하던 그는 이제 간첩죄로 애국심을 의심받는 신분으로 변했다. 스티븐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친 그 같은 변화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스티븐은 물론 혐의를 부인했다. 폭스뉴스 기자를 만난 건 시인했지만, 기밀 정보를 흘린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법정투쟁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해주는 제도이다. 법무부와 피의자가 교묘하게 타협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기소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피의자는 법정투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형량을 줄이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한다.

스티븐도 한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투쟁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법정투쟁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 개인이 홀로 미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외롭고 험한 길이다. 승산도 높지 않다. 스티븐은 2013년 8월 현재 이 법정투쟁으로 만 3년을 흘려보냈다. 그리고도 아직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The New York Times

August 27, 2010

U.S. Analyst Is Indicted in Leak Case

By SCOTT SHANE

WASHINGTON — A federal grand jury in Washington has indicted a State Department analyst suspected of disclosing top-secret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to Fox News, the third time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filed criminal charges accusing people of leaks to the news media.

The indictment, dated Aug. 19 and unsealed on Friday, named Stephen Jin-Woo Kim, 43, of McLean, Va., a specialist in nuclear proliferation who worked as a contractor for the State Department. Mr. Kim, who has worked as a high-level foreign affairs analyst for a decade for various federal agencies, is accused of disclosing the information in June 2009 and of lying to the F.B.I. in September 2009.

Mr. Kim, an American citizen, pleaded not guilty on Friday in Federal District Court before Judge Colleen Kollar-Kotelly and was released on \$100,000 bond.

A person familiar with the investigation said it involved a Fox News report on North Korea's likely reaction to a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which was then pending, that condemned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s.

Fox News said at the time that it was "withholding some details about the sources and methods by which American intelligence agencies learned of the North's plans."

The charges are part of a crackdown on disclosures of classified information to the news media under President Obama. A former contract linguist for the F.B.I. was sentenced in May to 20 months in prison for disclosing secret documents to a blogger, and a veteran National Security Agency official is awaiting trial on charges of sharing classified information with a reporter for The Baltimore Sun.

In addition, the Justice Department is seeking to question a reporter for The New York Times, James Risen, about his sources for a book about the C.I.A. that describes a program devised to disrupt Iran's nuclear weapons program.

News media and civil liberties advocates have criticized the prosecutions, noting that Mr. Obama came into office pledging to insist on openness about government operations.

Administration officials have said there is no contradiction between the transparency policy and aggressively punishing those who leak secrets.

David S. Kris,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the Justice Department's national security division,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willful disclosure of classified information to those not entitled to it is a serious crime."

But Abbe D. Lowell, a lawyer for Mr. Kim, denounced the charges as an attempt to criminalize "the type of government-media exchanges that happen hundreds of times a day in Washington." He said the charges would "destroy the career" of Mr. Kim, whom he called "a loyal civil servant and brilliant foreign policy analyst."

스티븐 김이 북한 관련 정보 누설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
(출처 : 뉴욕타임스[www.nytimes.com], 2010년 8월 27일자)

왜 다시 스티븐 사건인가

스티븐이 새삼 주목받게 된 것은 지난 5월 미 정부의 언론인 사찰이 문제되면서다. 미 정부가 스티븐과 접촉했던 폭스뉴스 로젠 기자에 대해 광범위한 뒷조사를 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법원의 수사기록과 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미 정부는 로젠 기자 가족의 이메일, 통화내역까지 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모든 걸 합법적으로 진행했다고 하지만,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언론인에 대해 이처럼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미 정계와 언론계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군다나 미 법무부의 압수수색 영장은 로젠 기자를 공동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

다. 기자를 사실상 피의자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미 법무부가 로젠 기자에 대해 한 번도 공식 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미 상당한 뒷조사를 한데다 피의자 취급을 하고 있으니 미 언론들이 경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로젠 기자가 보안카드를 이용해 국무부 본청을 출입한 시간대별 기록을 스티븐의 출입기록과 대조한 것은 물론이고, 두 사람의 통화와 이메일 내역이 모두 조사됐다.

미국에서는 리크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돼 있다. 조사를 해봤자 언론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익도 없다. 이로 인해 각종 리크 사건이 발생해도 언론 자유는 위축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로젠 기자가 전례 없이 전방위적 사찰을 당한 셈이다. 이번 사건이 ‘언론인 사찰 및 언론자유 탄압사건’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이 언론활동을 범죄시하기 시작했고 그제 미국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이건 정말로 도가 지나치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를 조사할 특별검사나 독립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도 “새 규칙과 독립적인 중재자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은 둘 다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레이엄 의원과 함께 언론인 조사를 승인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새 법안을 초당적으로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로젠 기자에 대한 뒷조사는 스티븐 사건 자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 법무부의 이 같은 조사행태가 스티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로젠 기자를 뒷조사하지 않고서는 스티븐에 대한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미 법무부의 스티븐 조사가 벽에 부닥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로젠 기자 조사가 문제된 뒤 스티븐 사건에도 유화적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 콜린 코랄-코틀리 판사는 지난 6월 4일 스티븐의 변호사인 애비 로웰 변호사가 연방검찰이 부당하게 압수한 증거들을 제대로 열람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재판부의 조치를 촉구하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보여주라’는 취지의 주문을 검찰에 내렸다. 기소된 지 3년 만에 변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열람이 허가된 것이다.

재판도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법무부의 무리한 수사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무조건 장기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지금까지 재판이 늦어진 것은 미 법무부가 사건 변호에 필요한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당한 변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검사측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계속돼왔다.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
(출처 : 폭스뉴스 홈페이지[www.foxnews.com])

스티븐은 누구

스티븐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티븐이란 개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필자가 스티븐을 알게 된 것은 2009년 12월경이다. 워싱턴 DC의 한 모임에서 스티븐을 처음 보고 줄곧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스티븐은 낯선 사람을 잘 경계한다. 국무부에서 기밀 정보를 오랫동안 다뤄온 데 따른 습관이라는 것이다. 스티븐이 필자를 처음 만났을 때도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저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첫마디로 꺼냈다. 타인이 접근해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응대하는 편이다.

스티븐은 원래 한국인과 잘 교류하지 않았다. 이는 국무부에서 일하는 한국계 관료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다. 국무부에서 한국과장을 거쳐 현재 주한 미국 대사로 일하고 있는 성 김 대사도 비슷했다. 한국인과 교류를 하게 되면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정보 유출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스티븐 사건이 터졌을 때 한국 사회에서 그다지 발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스티븐과 한국 교민사회와의 단절이 하나의 이유로 작용됐다. 교민사회에서는 스티븐이 누군지도 모르고, 스티븐과 특별히 교류하는 사람도 없었다. 스티븐은 그저 혼자 힘으로 미국 대학 교육을 마치고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스티븐은 9세의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뉴욕으로 이민을 왔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아버지로부터 식탁에서 “오늘의 뉴욕타임스 사설 내용이 뭐냐. 그걸 모르면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서울대 상대를 나온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강했다. 스티븐은 조지타운대를 거쳐 하버드대 석사와 예일대 박사 학



스티븐 김이 몸 담았던 리버모어 연구소 전경
(출처 :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

위를 거머쥐었다. 한 살 연상인 누나 유리 루텐버거도 컬럼비아대를 나와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 아버지는 남매를 남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으로 키워낸 셈이다.

스티븐은 아버지로부터 법대 진학을 권유받았지만 역사학을 택했다. 스티븐은 조지타운대에서 유럽 현대사를 공부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과 윌리엄 예이츠에 흠뻑 취했고, 1815년 빈 회의의 주도멤버인 메테르니히와 탈레랑, 캐슬레이 등 3인을 특히나 좋아했다고 한다.

이들은 냉혹한 현실분석으로 현대 외교의 기초를 닦은 인물들이다. 스티븐은 필자에게도 유난히 메테르니히가 현대 외교학의 아버지라며, 서양 외교는 그에 의해 시작됐다는 말을 자주 했다. 메테르니히에 의해 형성됐던 초기 외교란 정상적인 설득 과정이라기보다 술과 파티를 동원한 세뇌과정이라고 했던 스티븐의 말이 자주 생각난다. 외교란 그만큼 냉혹하다는 것이다.

스티븐은 “미국인에게 지기 싫어 미국 주류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유럽 역사를 놓고 정면 대결을 펼쳤다”고 말했다. 유럽적 전통과 교육 속에서 자란 미국인에 비해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공부에 힘들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박사학위 취득 후 스티븐은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종신(테뉴어) 교수직을 제의받았

지만, “똑같은 강의를 30년 하고 죽고 싶진 않다”는 생각 때문에 고심 끝에 포기했다고 필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

스티븐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역사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고 싶어 했고, 군사정보 및 군사전략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 해군전략 연구소를 첫 직장으로 택했다. 2년 후 리버모어 연구소로부터 영입제의를 받아들여 직장을 옮겼다. 리버모어 연구소는 핵무기를 개발한 미 최대의 국립 핵 연구소이다.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핵 지식을 습득한 스티븐은 북핵 국면에서 발군의 분석 실력을 발휘하면서 워싱턴에 이름을 알리게 됐다. 국방부와 국무부 등 10여 개 정부기관에서 10여 년간 파견형식으로 일을 하게 됐고, 기소직전 국무부에서 선임 보좌관을 맡고 있었다.

미국에서 만났던 스티븐

스티븐은 필자를 만나고 얼마 후 간첩죄로 기소됐다. 스티븐의 기소 계기가 된 폭스뉴스의 기사는 2009년 6월 11일 게재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곧바로 이 기사에 대해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고, 스티븐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당시 스티븐이 폭스뉴스의 로젠 기자와 자주 접촉했었고, 국무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티븐은 2009년 3월 국무부 공보담당자로부터 로젠 기자에게 북한 문제를 설명해주라는 요청을 받고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 기사의 내용은 그리 대단한 정보도 아니며, 정보라기보다는 상식에 가까웠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후 추가 핵실험 등으로 대응할 것이란 내용인데, 중앙정보국(CIA)을 정보소스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관련 기사가 게재된 뒤 FBI 수사관이 국무부의 스티븐 자리로 찾아왔으며,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는 자택에 대한 수색도 벌어졌다.

스티븐은 당시 필자와 교류를 하고 있었지만, FBI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숨겼다. 아마 당시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다가 8월 간첩죄로 전격 기소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미 언론에는 누군지 알 수 없게 기사가 실렸으며, 스티븐이 그제야 필자에게 자신이 기소됐다고 밝힘에 따라 문화일보에 자세한 기사를 실을 수 있었다.

스티븐은 기소 당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스티븐은 미 법무부의 플리바게닝 제안을 거절할 만큼 결백을 자신했었다.

스티븐은 이후 워싱턴 DC 지방법원에서 심리를 받았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증언을 위해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도착한 스티븐 김
(출처 : the guardian, 「South Korea press leak blamed on US state department analyst」, 2010년 8월 28일자)

미 의회의사당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필자는 스티븐이 첫 법정에 출두한 날부터 2012년 7월 특과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2년간량을 꼬박 동행했다. 기자라기보다는 지인으로서 동행했다는 게 맞을 것이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28A 법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미 법원의 재판 절차는 한국과 달랐다. 한국은 기소가 되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에 재판기일을 잡게 되고 정식 재판을 하게 된다. 이후 1심 판결이 나고 항소심 등으로 이어진다.

반면 스티븐의 경우 기소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있다. 기소된 2010년 8월부터 지금까지 만 3년이 넘도록 정식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지금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일종의 청문회 성격이다. 약 2~3개월에 한 번씩 재판부와 피의자측, 검찰측이 모여 사실 관계와 증거서류 제출 등에 대한 다툼을 벌인다. 사건 조사를 진행하면서 플리바게닝 등을 시도하고, 증거서류를 변호인측에 넘겨 변호를 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확보한다. 하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의자는 상상 이상의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음에 따라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변호사 비용이 천정부지로 쌓이게 된다.

스티븐은 국무부에서 해고됐지만 다행히 원래 다니고 있던 리버모어 연구소로부

터는 해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월급의 대부분을 소송비용에 쏟아 붓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 소송 초기에는 많은 나날을 술로 달래야 했다.



스티븐 김의 변호사인 애비 로웰
(출처 : NY daily news[www.nydailynews.com])

스티븐의 북한 정보는 어느 정도일까

스티븐이라는 사람을 알면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가 가진 대북 정보의 양이다. 이는 지금 재판과정에서도 논란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다.

스티븐 변호사인 애비 로웰은 “스티븐이 국무부 내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대북 정보에 접근 가능한 인물이었다”면서 “스티븐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10년간 봐왔는데, 고작 북핵 실험에 관한 단편 정보를 폭스뉴스에 흘릴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고 방어하고 있다. 스티븐이 리크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밀 정보를 흘렸을 것이란 얘기다. 이는 스티븐이 굳이 리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통상 리크를 하는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있다. 최근 미 사회에 불고 있는 내부정보 폭로자인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들은 미 정부의 정보통제에 대한 저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스티븐은 정보를 흘림으로써 얻는 실리도 없고, 이를 통해 확보하고 싶어하는 명성도 없다는 점에서 리크의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변

호인의 주장이다.

스티븐은 대북 전문가라는 점에서 상상 이상의 대북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는 재판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지만, 아직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런 상황은 오지 않고 있다.

다만 스티븐은 2008년 6자회담에도 상당히 관여했었다고 고백했다.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측 협상 대표였다. 힐은 어떻게든 김계관(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었지만, 스티븐을 중심으로 한 국무부 검증국과 백악관 NSC가 이를 좌절시켰다.

2008년 12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마지막 6자회담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힐은 “북한이 시료채취(sampling)를 빼지 않으면 최종 협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최후통첩을 해왔다”면서 시료채취를 제외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자는 의견을 본국에 보냈다. 힐은 “현 단계에서 그동안 협상을 수포로 돌리지 않으려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티븐이 몸담고 있던 검증국은 힐의 제안을 거절했다. 검증국은 “시료채취 없이는 현재 북한 핵개발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향후 북한이 핵개발 시도를 다시 할 때, 그것이 과거의 연장인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과학적 근거를 가질 수 없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 NSC도 검증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힐은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했다. 당시 스티븐과 직속 상관이던 폴라 드서터 검증국 차관보는 대북 원칙론을 고수한 것이다. 검증국은 국제적 조약과 협상 등이 제대로 맺어지는지를 평가하는 기관이어서 6자회담도 마지막에 검증국의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때부터 스티븐은 국무부 내에서 북핵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 명성을 쌓게 됐다. 북핵 문제의 협상당사자는 동·아·태국이지만, 최종 결



폴라 드서터 당시 미 검증국 차관보
(출처 :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

정에서는 검증국이 힘을 발휘하는 구조 때문에 스티븐의 존재가 부각될 수 있었다. 폴라 드서터 당시 검증국 차관보 역시 스티븐의 보좌에 힘입어 북핵 국면에서 결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도 방문했다.

이 때문에 당시 국무부 내 협상파들이 스티븐을 꺾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스티븐이 간첩혐의로 기소된 것은 오바마 행정부와 호흡을 맞춘 협상파들이 대북 강경파인 스티븐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취재 후기

스티븐은 미 국적을 갖고 있지만 철저한 한국인이다. 9살에 이민 온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어가 유창하다. 가령 워싱턴에서 만난 한국계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국어를 들긴 하지만 말하진 않는다. 말하는 것이 어눌하기 때문에 아예 한국어를 하지 않는다. 한국인을 만나도 한국말을 쓰지 않는다. 워싱턴에는 한국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 대학시절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는 이상, 한국말에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티븐은 “밖에서는 미국인과 일대일로 경쟁했고, 집에서는 철저히 한국인으로 살았다”고 말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가정교육이었다. 한국말을 잊지 않기 위해 집에서는 한국어로만 대화했다. 아버지가 서울대를 나오고 어머니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대학 강단에 설 만큼 엘리트 집안이지만,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한국인의 뿌리를 강조한 것이다.

그렇지만 대학교육부터는 철저히 스스로 책임지는 미국식 방식에 따랐다. 부모는 스티븐과 누나에게 대학 학비를 전혀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대학부터는 자신이 책임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철학이었다.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학업을 이어갔다고 했다.

필자는 스티븐 집안의 모든 분을 직접 만났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스티븐이 기소

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스티븐의 재판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했다.

스티븐의 누나는 법정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는 스위스 남편을 따라 스위스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 스티븐 구명 사이트에 각종 글도 스티븐의 누나가 대부분 직접 쓰거나 감수를 했다. 미 법조계에 있는 컬럼비아대 로스쿨 인맥을 활용해 스티븐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

스티븐은 미국 생활 당시 필자의 집에서 자주 잠을 청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재판 탓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필자와 함께 소주잔을 기울였다. 대리운전이 활성화되지 않은 미국에선 술을 마신 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티븐은 술을 마시면 “너무 억울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이민 첫째 미 초등학교에서 말을 못해 미국 학생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시작한 눈물겨운 이민사가 한꺼번에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최고 학벌을 갖춘 뒤 미 정부에서 일했지만, 지금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힘겨운 법정투쟁뿐이다.

미국이라는 사회의 거대한 벽을 느낀다고도 했다. 그동안 자신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 어느 정도 편입됐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전혀 아니란 사실을 체감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들이다.

1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던 재판이 3년 이상 이어지면서 미국 사회의 또 다른 문제점을 보게 됐다. 국익이라는 잣대에 걸릴 경우 개인은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 것이 미국 사회다. 한 개인의 절규는 거대한 빅 브라더 사회 속에서 잘 들리지 않는 고독한 외침일 뿐이다.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여전히 이방인이고 소수인이다. 철저히 미국인 행세를 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다. 스티븐은 “재판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고 곧잘 말하곤 했다. 워낙 지친 탓이다. 한평생 미국에서 생활한 스티븐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현재 스티븐은 길고 지루한 법정투쟁으로 멎들어있다. 스티븐의 자화상은 모든 한국계 미국인의 현재이자 미래일 수 있는 것이다.

여전히 진행형인 미네르바 사건

법적인 판단은 끝났지만 미네르바 사건은 어떤 면에서 아직도 진행형이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진행형인 미네르바 사건을 그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조명해 본다.



파리 앵발리드(Hotel des Invalides)에 위치한 미네르바(Minerva, 로마신화 지혜의 여신) 동상
(출처 : 위키미디어[commons.wikimedia.org])



글.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지도 어언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는 무죄로 풀려났고 그에 대한 기사는 이제 매스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법적인 판단은 끝났지만 미네르바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당시 재판에서 문제가 됐던 공익의 개념이나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지금도 알게 모르게 미네르바 사건의 여진이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진행형인 미네르바 사건을 그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조명해 본다.

외환위기에 이어 또 다시 찾아온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부실 주택담보대출과 파생상품을 결합해 만든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이 부실화되면서 미국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리먼브라더스를 비롯한 대형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팔렸고 그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미쳤다.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 안전자산을 찾아 이동하면서 한국 같은 신흥국들은 주가하락, 환율급등의 피해를 피해가기 어려웠다. 외환위기에 이어 10여 년 만에 다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고 2006~2007년 5%대를 유지하던 경제성장률은 2008년 2.3%, 2009년에는 0.3%로 추락했다.

2008년 집권 첫해부터 광우병 촛불시위

에 이어 금융위기까지 맞은 이명박 정부는 안팎의 위기로 흔들리고 있었다. 자연히 정권 지지율은 떨어졌고 정부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파산한 리먼브라더스의 간판을 내리는 모습
(출처 : the guardian, 「Lehman Brothers : financially and morally bankrupt」, 2011년 12월 11일자)

미네르바의 등장

이런 배경에서 한 청년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이 ‘미네르바 신드롬’이라 불릴 정도의 폭발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박대성이라는 이름의 이 청년(당시 30세)은 2008년 봄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하반기 물가가 오르니 생필품 6개월 치를 미리 사두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시작으로 그는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환율 증가 전망을 비롯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280여 편의 글을 올렸다.

그중에는 ‘또 환율 사기극을 하는 구나’, ‘달러전쟁=과연 1,100원 저주의 시작인가’, ‘2008년 금융 전쟁의 서곡:한국판 지옥의 묵시록’, ‘개구리 체감경제...우리는 마루타



미네르바의 주 활동무대였던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 캡처

개구리여?’와 같은 글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한국 금융시장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출렁거리면서 그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자 미네르바라는 이름은 본격적으로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의 예측 중에는 빚나간 것도 있었지만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 의외로 맞아 떨어진 것도 상당수 있었고 이로 인해 그는 일약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며 인터넷 스타 논객이 됐다.

네티즌들은 정부보다 그의 말을 더 믿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의 글에 관심을 두지 않던 주요 언론들도 차츰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상파 방송들은 ‘미네르바 신드롬’에 대한 시사방송을 내보냈고 9시 뉴스에서 기사화되기도 했다. 신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투자 전문가들조차 그의 정보력과 판단력에 대해 반박하기 힘들다” “그에게서는 환율 프로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는 등의 보도가 줄을 이을 정도였다.

그는 자신을 ‘고구마 파는 늑대’라고 칭할 뿐,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직업이나 경력 등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당시 정보당국은 떠도는 소문을 취합한 결과 미네르바가 50대 초반 나이에 증권사를 다녔으며 국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의 정보를 모 신문에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박 씨는 공고와 전문대를 졸업했고 당시 30세의 무직 남성이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에서도 전파통신 분야를 공부했고 경제관련 과목은 2학년 2학기에 수강한 ‘지구촌 경제와 직업세계’가 유일했다. 경제학 공부는 졸업 후 독학으로 책을 보며 했다고 한다.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에 올린 글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를 짜집기하는 수준이었다는 게 나중에 검찰이 밝힌 내용이다.

미네르바 체포되다

미네르바의 글을 거의 맹신하다시피 하는 네티즌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에게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바짝 긴장해 그의 글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미네르바의 글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08년 7월 30일 미네르바는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하의 글에서 ‘외환예산환전업무 8월 1일부터 전면중단, 외환보유고 문제없다고 떠들어 대는데 시한폭탄 핵 잠수함이 서서히 수



2009년 1월 10일 '미네르바' 박 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
(출처: 세계일보,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인도에 떨어진 느낌”」, 2009년 3월 16일자)

면 위로 부상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렸다.

8월말에는 산업은행이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하려 시도하는 것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에서는 본격적인 미네르바 신드롬이 불기 시작했다.

그 사이 검찰에는 미네르바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고 검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김경한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답해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었다. 장관의 이런 답변 이튿날 박 씨는 요양치료를 받으러 간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런데 12월 29일 미네르바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글 하나를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 ‘2008년 12월 29일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 -정부 긴급 업무 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용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펙은 법적 문제 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 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였다.

2009년 1월 7일, 서울중

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을 신설하고 박대성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고 3일 만인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후 전기통신기본법은 소위 ‘미네르바 법’으로 불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범죄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미네르바에 대해 “정부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했고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2008년 12월 29일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미네르바 체포 규탄 시위
(출처 : 한겨레신문, 「미네르바 체포, 한국사회 영장」
2009년 1월 16일자)

무죄로 석방되다

2009년 4월 13일 검찰은 “미네르바 박 씨가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단히 자극적인 글을 써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구형 이유였다. 박 씨는 검찰과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에서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

이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글을 썼을 뿐 네티즌을 선동하고 공익을 해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심 공판은 4월 20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박 씨의 글 두 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박 씨가 글을 작성할 당시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외화예산 환전업무의 정확한 개념을 오해한 상태에서 인터넷 자료와 기사를 종합한 후 자신의 경제지식을 더하여 글을 작성했다”며 “자신의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박 씨가 문제의 글을 올린 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바로 삭제했다는 점, 인터넷 경제토론방은 누구나 접속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 씨에게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전기통신기본법상 ‘공익’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처벌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무죄판결로 박 씨는 검찰에 체포된 지 100여 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1심에 반발, 4월 24일 항소했으나 이후 2009년 12월 항소를 취하해 박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2009년 4월 20일, 무죄로 풀려난 미네르바 박 씨
(출처: 경향신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2009년 4월 20일자)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결정

1심 법원에 제기했던 위헌법률심판이 기각됐지만 박대성 씨는 이번에는 해당 법조문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대상이었다. 2009년 5월 14일이었다. 박 씨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전기통신법상 ‘허위의 통신’이라는 문구가 ‘허위 명의’를 의미하는지 ‘허위사실’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적용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10년 12월 28일 나왔다. 현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

을 내렸다. 현재는 결정문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행위가 이를 해하는지 판단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정하기 어려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조대현 · 김희옥 · 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법조항의 입법취지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려는 데 있다”며 “공익을 해할 목적뿐 아니라 허위 통신 부분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반된다”는 보충의견을 내렸다. 이강국 · 이공현 · 조대현 · 김종대 · 송두환 재판관은 “표현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회적 해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에 대한 논란

특정 법조문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면 해당 법조문의 효력은 바로 정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결정 당시 동법 조항에 의해 유언비어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사법처리를 면했다. 특히 당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된 28명은 모두 현재 결정으로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후 예비군 동원령이 발령됐다는 내용의 허위문자 등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경
(출처 : 헌법재판소 블로그[blog.daum.net/c_court])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성향 단체나 인사들은 헌재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악법이었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졌다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한 법 조항을 당시 정부가 촛불시위 참가자들과 미네르바를 구속하는데 악용했다”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근거법이었던 만큼 헌재 결정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의 행동은 당시 일본의 ‘공익’에는 어긋났겠지만, 당시 우리 민족과 역사에는 ‘공익’에 부

합하는 행동이었던 것과 같은 이치”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하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이었냐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다. 거짓말로 사회 혼란을 야기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면 사회의 기본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지적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무방하다면 이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헌재 결정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허위의 통신’은 그 주된 내용이 거짓이거나 명의를 거짓인 통신을 의미하고 전체적으로 봐 의견표명이나 제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 의미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허위라는 개념이 애매하지 않고 비교적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고영주 변호사 역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이란 진실인 경우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익’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지만 현재 시행 중인 다른 법률 300여 개의 800여 개 조문에서도 공익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공익이라는 개념은 이미 구체화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전기통신기본법 개정 상황

현재 전기통신기본법 법조문을 찾아보면 과거 위헌결정을 받았던 제47조 제1항은 그대로 살아있다. 물론 해당 조문의 효력은 2010년 현재의 결정으로 당시에 이미 중지됐다. 이를 명시하기 위해 해당 조문에는 2010년 12월 28일 위헌결정이 났다는 각주도 달려 있다. 2010년 현재 결정 후 법무부는 조속히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조문 개정작업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정부 개편에 따라 주무부처가 바뀐데다 국회도 이후 적극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0년 당시 이 법의 주무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등 3개 부처였으나 현재는 정부조직이 바뀌어 소관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었다.

18대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는 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대체법안은 크게 두 갈래였다. 첫 번째는 전쟁, 테러 등 국가적인 중대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한정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방향이었다. 또 다른 갈래는 경제·무역·재정 등 구체적인 경제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퍼뜨리는 경우까지 확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위헌 결정이 난 전기통신기본법을 손질하자는 안도 있었고 대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처벌 조항을 넣자는 안도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이두아 의원 등 10명은 전기통신기본법 대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손질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전쟁·사변·교전 등 무력충돌 △내란·폭동·테러 △국방·외교 △식품·환경 △보건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또 △경제정책·무역거래·재정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유포한 자를 처벌토록 했다. 이들 의원은 외환보유액 규모를 허위로 퍼뜨리거나, 경제정책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거나, 금융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위기설을 퍼뜨리는 경우도 구체적인 처벌 사례로 규정했다. 다른 의원입법 움직임 역시 있었으

나 이들 법률안들은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됐다.

새 정부와 19대 국회가 들어선 현재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적극적인 법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 형태로 법개정이 추진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민 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논란이 되었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상황을 한정시킨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에 국방·외교, 식품·환경, 보건·의료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추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상황을 전쟁·사변·교전, 내란·테러 등 비상상황이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대규모 재난상황일 때로 한정시킴으로써 감시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도록 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박대성 씨 근황

2009년 4월 무죄로 풀려난 뒤 박대성 씨는 국내는 물론 몇몇 해외 언론과 인터뷰



미네르바 박 씨가 쓴
〈미네르바의 경제 전쟁〉

도 하고 일부 신문에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2011 경제대전망〉, 〈미네르바의 경제 전쟁〉 등 책도 몇 권 썼다. 하지만 그는 수감 이후 온갖 협박 전화와 수감 시 충격 등으로 인해 체중이

40kg이나 빠지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박찬중 변호사가 2010년 9월 공개한 그의 사진은 구속 당시와 같은 사람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야윈 모습이었다.

박 씨는 2012년에는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박 씨는 소장에서 “검찰이 2009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나를 구속기소한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을 잠재우려 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104일간 위법하게 구금됐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금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누리꾼들이 나를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비방글을 올리는 등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2009년에 비해 40kg 이상 몸무게가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며 “1억 원의 위자료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또 자신이 가짜라는 글을 인터넷

에 올렸던 네티즌을 고소, 유죄판결을 받아 낸데 이어 이들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승소하기도 했다.

미네르바 사건이 남긴 것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건에 대한 법적처리는 2009년~2010년 모두 끝났다. 하지만 이 사건의 파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무엇을 허위사실로 볼 것인가, 어디까지를 공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아직도 그대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직도 관련 법의 개정과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의 구속이나 현재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는가에 대한 논란의 불씨도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후보자 시절 국회 청문회에서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를 묻는 질문에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답했다가 곤혹을 치른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소장 후보자가 현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검찰이 기소한 것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합당하냐는 것이었다. 미네르바 기소 당시 그는 대검 공안부장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박소장은 “법 규정 자체가 문리 해석상 기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검사의 기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소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현재의 결정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

과한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한때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이동흡 씨 역시 미네르바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미네르바 사건의 위헌심판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었다. 그랬던 그가 현재소장 후보로 지명되자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다. 그는 다른 개인적인 이유 등이 겹쳐 결국 사퇴했지만 우리사회가 아직도 미네르바 사건의 후유증을 앓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중 하나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서 열린 제15차 AIPCE 연례회의



글. 김재원
제주중재부 위원



9월 7일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제15차 AIPCE (Alliance of Independent Press Councils of Europe) 연례회의에 언론중재위원회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우리 일행(필자와 손영준 위원, 홍숙영 위원, 오광건 사무총장, 심영진 본부장, 이홍길 차장보)은 인천공항에서 오후 3시에 출국했다. 12시간을 비행해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키투리온 공항(Ben Gurion airport)에 도착하니 현지시각으로 밤

9시.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마치고, 마중 나온 한국대사관 차량으로 숙소이자 연례회의 개최장소인 힐튼호텔에 도착해 수숙을 마치니 이미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인지 모두들 피곤한 표정이었고 시차적응을 위해 서둘러 잠을 청했다.

9월 8일

아침 일찍 식사를 마치고 함께 미팅

을 가졌다. 이번 참가가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제16차 AIPCE 연례회의를 한국으로 유치한다는 사명을 띠고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유치전략 등을 의논했다. 오후에는 인근 갈릴리 호수 쪽으로 둘러보았다. 시리아 사태로 안전을 걱정했던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텔아비브 시내에는 의외로 평화로웠다. 고층건물이 드물었고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건물들이어도 조금씩 그 형태



이스라엘의 황량한 광야

가 달랐다. 도시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오래 전부터 그렇게 짓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듯했다. 시내를 벗어나니 광야(廣野)가 펼쳐졌다. 들판이나 벌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황량한 광야였다. 그 광야에 듅성듅성 있는 나무들을 보니 ‘근성(根性)’의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오고, 그 나무들의 뿌리가 메마른 땅에서 수분을 찾아 아래로 넓게 뻗어가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니 “성공하다”를 뜻하는 “succeed(sub ‘아래로’ + ceed ‘가다’)”의 의미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이 두 단어의 의미 속에, 형극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로 바꾸었던 유대인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듯하였다.

9월 9일

아침에 일어나서 복도로 나오니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호텔 직원들은 눈을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AIPCE에 참석하기 위해 온

접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대로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저녁에는 이스라엘 언론평의회 5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시몬 페레즈 이스라엘 대통령이 나와 사회자와 좌담 형식으로 기념사를 했는데, 그는 나이가 아흔임에도 유머러스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도 아주 쉽고 명쾌하게 답변했다. 특히, ‘한 눈으로는 현상을 다른 한 눈으로는 그 현상이 어떻게 변화되어갈 것인가를 보아야한다’던 그의 말에는 수십 년 간의 중동분쟁에 대한 경험이 농축되어 있었다.

9월 10일

28개 회원국 58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AIPCE 연례회

회원국 대표들은 가볍게 인사를 하며 말을 건네기도 했다. 오전에 다시 한 번 미팅을 가졌다. 거기서, AIPCE 회원국인 스위스가 차기 연례회의 유치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의 막이 올랐다. 1부에서는 <변화하는 언론 속에서의 언론평의회>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벌어졌다. 여기서는 주로, (1)‘언론’의 개념이 분명할 때는 언론평의회 of 본질도 분명했다.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해야만 하는 전통적인 언론매체들이 여전히 평의회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이것은 “인터넷에는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와 어떻게 일치될 수 있는가? (3)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언론평의회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난관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어진 2부 주제는 <사이버 시대에 사생활이 남아 있는가?>였는데, 여기서는 (1)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노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생활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2)규제기관들은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사이버 거대기업에 맞서 사생



이스라엘 언론평의회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시몬 페레즈 이스라엘 대통령(좌측)



이라크, 파키스탄 등 분쟁지역에서 활동 중인 언론인의 안전성 제고와 면책권 부여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중인 유네스코 Ms. Tarja Turtia

활 보호 전쟁에서 패하고만 있는 것인가? (3)우리는 그저 인터넷에서의 우리 삶에 대한 감독기관의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폭로에 놀랐다고만 하고 있는 중은 아닌가? 등의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3부 주제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에 대한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1)적법절차는 여전히 가능한 것인가? 재판의 공정성이 트위터나 포털에 의해 방해받고 있지는 않은가? (2)공정한 보도를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가? (3)법원은 모든 것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해야만 하는가?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4부 주제는 <투명한 시대의 윤리적 딜레마>였는데, 여기서는 (1)첨단기술이 기밀자료를 폭로하고 있는가? (2)간접광고와 콘텐츠 마케팅이 온라인 저널리즘에 대

한 위협인가? (3)우리의 언론평의회가 페이스북 세대에 적합한가? (4)언론윤리규범이 오늘날의 기자들에게도 적합한가? 등에 대한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첫날 주제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저녁에는 지중해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카이사레아 크루세이더즈(Caesarea Crusador's) 식당에서 만찬이 있었다. 여기서는 물밀 유치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러시아,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등이 한국의 제16차 AIPCE 연례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다른 유럽대륙의 대표들은 우리가 다가가도 가벼운 인사말 정도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그들은 AIPCE가 세계언론평의회가 아니라 유럽언론평의회이기에 회의의 정체성을 이유로 한국 개최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는 모

습을 보였다.

9월 11일

연례회의 둘째 날, 5부에서는 <분쟁지역에서의 보도>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여기서는, 2002년 파키스탄에서 살해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Daniel Pearl을 추모하며 (1)인간의 삶과 권리의 수호자로서의 종군기자 (2) 극단적인 상황 하의 취재에서 언론윤리를 지키는 것 (3)우리는 UN이 기자에 대한 표적살인이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선언하도록 요구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6부는 <남용의 자유: 인터넷에서의 독자평(댓글)>이 주제였다. 여기서는, New Israel Fund가 행한 인터넷 상에서의 언어폭력 연구결과를 가지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 7부에서는 <언론의 자율성>을 주제로 하여 (1)언론에 대한 법적인 규제 제도가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인가? (2)모든 평의회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유럽연합의 역할이 있는가? (3)출판업자들과 언론인들이 점점 더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데도 자율규제 메커니즘은 과거만큼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7부에 걸친 이틀간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모두 끝난 후 차기 연례회의 개최지 선정에 대한 토

론이 있었다. 가장 먼저 유치신청을 했던 스위스가 내부사정을 이유로 개최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한국 언론중재위원회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차기 연례회의의 개최의사를 표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내년도 제16차 AIPCE 연례회의의 서울 유치를 위해 프레젠테이션 중인 경기중재부 홍숙영 위원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개최 희망국으로 우리만 남게된 상황이니 당연히 AIPCE 차기 연례회의는 대한민국이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한국의 프레젠테이션 후 우려했던 대로 유럽대륙의 국가들이 AIPCE 정체성 문제를 표면화했고, 뒤이어 벨기에가 브뤼셀에서 차기 연례회의를 열겠다고 나서게 됐다. 참고로 작년 AIPCE 연례회의가 같은 국가 앤트워프에서 개최된 바 있다. 손영준

위원이 한국에서 아시아 주요국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IPCE 차기 연례회의가 개최되면 AIPCE가 국제회의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다시 제의하는 상황에서 회의는 차기 개최국을 확정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끝나고 말았다.



페이스북 등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의견을 피력 중인 서울 제3중재부 손영준 위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공식회의가 끝난 후 저녁만찬에서 나온 유럽지역 참석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니,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만 아시아일 뿐 유럽지역과 가깝고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유럽신문협회, 유럽방송협회 등에 가입하여 활동해오고 있어 심정적, 제도적으로는 유럽국가로 인식되고 있어 이스라엘이 이번 연례회의의 호스트가 되는 것은 무리가 없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었다. AIPCE 차기 연례회의의 개최지로 거명된 브뤼셀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주 내에 그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어쨌든 그들은 한국의 적극적인 유치희망에 놀라움과 찬사를 보내는 한편, 한국이 AIPCE를 초청하고 아시아 몇몇 나라의 신문평의회를 초청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면 기꺼이 참석하고 싶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9월 12일

AIPCE 참석자 모두 함께 이스라엘 신문평의회가 주관하는 예루살렘 투어에 나섰다.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공존하는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은 슬픔을 머금고 있는 듯한 도시였다. 인간의 욕망과 갈구가 곳곳에 묻어 있는 듯한 도시였고,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했지만 속으로는 들끓고 있는 도시 같았다. 예루살렘 투어를 마치고 다시 힐튼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일행은 먼저 벤구리온 공항에서 내려 귀국길에 올랐다.



공익성 외면한 끼워 맞추기식 편집, 언론이기를 포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글.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변호사



며칠 전, 도시락을 시켰더니 반찬으로 명란젓이 담겨왔다. 명란젓은 충분히 먹음직스러웠지만 차마 젓가락이 가지 않았다. 바로 방사능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수산물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을 걱

SNS를 통해 '세계 5대 과학지인 PNAS(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서 발표한 일본 방사능 지도'로 알려졌다. PNAS에서는 연의 지도는 PNAS에서 발간한 지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하고 있다. SNS에서는 ‘일본 국토의 절반이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됐다’느니 ‘수입 명태의 90% 이상이 일본산’이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불신이 루머를 낳고, 루머가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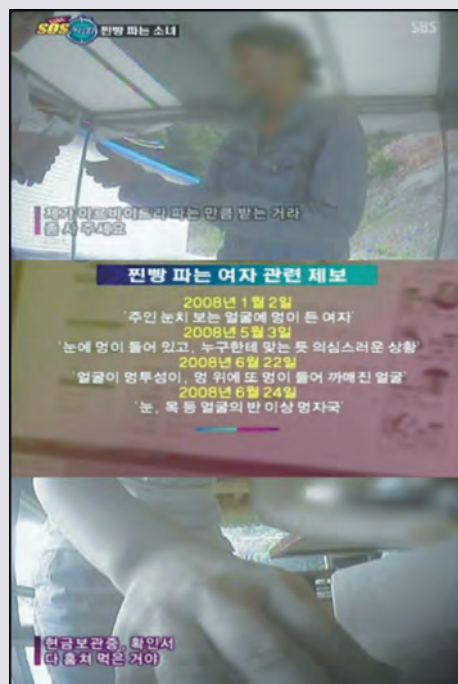
언론보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가끔 문제되는 몇몇 기사를 빼고 언론은 대체로 진실을 전하거나 적어도 진실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믿음은 정말 중요하다. 언론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온갖 억측과 루머가 횡행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언론보도를 신뢰하고 싶다. 우리 언론이 정말 믿을 만한지 여부를 떠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초래할 혼란이 더욱 걱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에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종종 터지곤 한다. 단순한 오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기자가 사람인 이상, 어떤 면에서 오보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법에서도 모든 오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허위보도라도 기자가 진실이라 믿었고 그 믿은 데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면책된다. 단순오보를 넘어서는 오보, 단지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은 아니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오보가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사건을 대할 때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에도 솔직히 화가 난다.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한 분노이지 싶다. 동시에, 걱정이 앞선다. 언론보도조차 믿

을 수 없게 된 마당에 앞으로는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나.

이번 호에서 다루고자 하는 판결은 지난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속칭 ‘찐빵 소녀’ 사건(2012나28808)이다. 재판을 통해 밝혀진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 위법의 정도는 심각하다. 법정에서 드러난 방송의 민낯은 쳐다보기 민망할 정도고,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진실을 전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하게 된다. 특히, 언론에 의한 사실왜곡의 정도가 심각할 때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언론보도가 진실해야 할 이유와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SBS <긴급출동 SOS 24> 당시 방송된 화면 일부
(출처 : 미디어오늘, SBS '찐빵소녀' 방송조작,
피해자에 3억 배상 확정, 2013년 2월 4일자)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SBS 프로그램 <긴급출동 SOS 24>에서는 3회에 걸쳐 ‘찐빵 파는 소녀’라는 제목으로 어느 국도 주변 휴게소 종업원이 모진 학대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 보냈다.

첫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 방송사 홈페이지에는 찐빵 소녀를 동정하는 글과 함께 휴게소 주인을 엄벌하라는 분노에 찬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 결과, 휴게소 여주인이었던 A는 구속기소되었으며 A의 나머지 가족(남편, 딸)에 대한 수사도 개시되었다. 불쌍한 찐빵 소녀는 가족의 동의 하에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악당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약자는 구제받았으니 말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찐빵 소녀’가 사라져가고 있을 무렵, A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고작 벌금 100만 원이었다. 온 가족이 찐빵 소녀를 감금하고 칼·재떨이 등을 이용해 장기간 구타했다는 방송 내용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 이유인즉, 방송에 보도된 내용 대부분을 법원은 사실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 ‘찐빵 소녀’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가해자들보다 엄중한 형사처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에 이른다. 여기서도 법원은 찐빵 소녀가 A와 그 가족들을 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보았다.

방송에 연루된 경찰관들의 책임도 인

정되었다. 법원은 A 등이 수사 받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직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재판은 이제 이 사건 방송 제작진의 책임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2012년 2월 23일 A1억 5천, A의 남편 6천, A의 딸 9천 도합 3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SBS에게 선고했다(2010가합23150). 고액의 위자료로 인해 이 판결은 다수의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다.



“이 사건 방송은 …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외형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에게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의 증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방송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작진이 사실을 취재하여 이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여 제작한 방송이 아니라 피고 제작진이 이미 원고들을 가해자로 ○○○을 피해자로 단정한 다음 피고 제작진이 미리 구상한 줄거리 즉 ‘원고들의 ○○○에 대한 폭력행사를 고발하고, ○○○을 폭력적 상황에서 구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내용’에 맞추어 취재 및 촬영을 한 다음 편집을 하여 만들어진 허구의 사실에 불과하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원·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월 11일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에서 내린 결론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당사자들의 상고 포기로 확정되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언론사에 패소판결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우선, 언론사가 패소한 이유다. 명예훼손소송에서 언론사가 패소하는 이유는 대체로 보도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을 입증하지 못해서다. 언론보도와 관련해 송사가 걸리면 주로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보도의 공익성이 부정되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다.

언론보도의 공익성이 부정되었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일이다. 보도의 진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언론사는 성실히 취재에 임했음을 입증하기만 하면 면책받을 수 있다. 보도의 상당성이 보도의 진실성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런데 면책의 필수요건인 보도의 공익성은 다른 것으로 보완될 수 없다. 공익성의 결여는 곧 법적 책임으로 직결된다.

또한, 공익성의 결여는 그 자체로 언론의 심각한 위기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언론이 하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면 이런 믿음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보도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부터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보도의 진실성 이전에 공익성마저 부정한 이유는 “제작진이 미리 구상한 줄거리에 맞추어 취재·촬영 및 편집”을 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80쪽이 넘는 판결문 중 상당 부분이 방송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할애되었다. 편집이 아무리 언론사의 권한이라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편집이라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3억에 달하는 위자료 인용액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법원에서 인용한 언론사건 평균 인용액이 2,700만원 정도(언론중재위원회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고액이다. 이 점을 재판부도 의식했는지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이 매우 길고 자세하다. 여기서도 거듭 반복되는 단어는 ‘만들어 놓은 결론’, ‘고의’, ‘왜곡’ 등이다.

믿음과 신뢰,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쉽다. ‘언론이 하면 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정도의 신뢰를 얻는다면 아마 취재가 좀 더 쉬워질 것이다.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며 공익성마저 부정하는 행동이다. 우리 언론이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으리라, 난 믿는다.



※ 이하 모든 사진의 출처는 '설국열차 홈페이지'(snowpiercer2013.interest.me)

우리들의 <설국열차>



글. 양려원
변호사(법무법인 인터로)

“당신은 도대체 심각한 게 없어? 내가 보이거나 해?”

아이들과 씨름하며 보내는 아내의 여름방학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모양이다. 이럴 땐 슬그머니 쓰레기를 챙겨 들고 나가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다녀오는 것이 좋다. 아니 모처럼 불타는

금요일이니 자동차 극장이나 가보자 할까? 훗! 아내가 낚였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어떤 느낌일까? 사실 우리 부부는 자동차 극장이란 델 처음 가 본다. 마침 개봉한지 얼마 안 된 영화가 상영 중이란다. 게다가 비도 그쳤다. 쾌재를 올리며 극장에 갔다. 법률가가 본 영화 이야기 세 번째는 이 영화 <설국열차>다!

아직 영화 시작 전인데 차들이 많이 들어찼다. 우린 맨 앞 가운데 자리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놓고 뒷자리의 아이들과 치킨에 콜라를 마시며 영화를 기다렸다. 이때만 해도 자동차 극장의 맨 앞자리가 초래할 불운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드디어 영화가 시작되었다. 386 아니 이제 486(40대이고,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에 태어난) 세대인 아내와 나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만한 <닥터 지바고> 같은 영화를 기대했다. 아니면 적어도 눈부신 설원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화면은 나오겠지? 이름만 <설국열차>는 아닐 테니까!

기대와 달리 영화는 칙칙한 어둠 속의 남루한 사람들에게서 시작한다. 아이를 빼앗긴 한 남자가 질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 기차 밖으로 손을 내놓게 하여 톱으로 팔을 자르는 형벌이다. 그리고 수상의 연설이 이어진다.

“신발을 머리에 놓지는 않는다. 그렇

게 하면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질서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꼬리 칸은 머리 칸이 될 수 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를 지켜라!”

대충 이런 내용이다.

꼬리 칸이라... 계급과 시대의 모순을 이야기하며 대학 시절을 보낸 우리 부부에게 익숙한 코드가 아닌가? 생활에 지친 아내를 위해서는 잘못 골랐는지는 몰라도...

질서! 법이 참 좋아하는 말이다. 법은 질서유지를 위해 태어났다. 청동기 시대 국가가 형성되고 법은 바로 질서유지의 목적을 위해 권력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권력의 상징인 법 앞에 복종하며 삶을 영위했다. 시간이 흐르고 질서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법의 변화를 요구했고 이를 잘 알아차린 사람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오래토록 존경받았다. 오늘날 우리 헌법에도 질서유지는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니 질서를 지키라는 수상의 말은 잘못이 없다.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평등에 있다. 이는 질서유지보다 중요한 법의 이념이다. 지금은 고대나 중세 봉건 사회나 절대왕정의 시기가 아니다. 우리는 근대 시민혁명을 거친 법이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시대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법의 이념은 천부인



권이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존엄하고 인간의 존엄을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인류는 태형이 행해지는 나라에 대해 야만적이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체의 일부를 손상시키는 형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여 어떤 이유로도 인정하기 어렵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권리를 사회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을까?

설령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디에서건 아무런 이유도 알리지 않은 채 아이를 빼앗아 가고, 그에 저항한 이에게 신체형을 가하는 것은 인간 존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영화 속의 인권 침해는 질서유지를 이유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영화 속 상황을 고려해 본다. 인류 마지막 생존자를 태운 기차 안, 어쩌면 질서에 의해 인간성이 말살될 수 있는 극한적 상황을 감안하며 영화에 빠져든다.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고 평등





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회는 쪼개터지기 마련이다.

‘그럼 그렇지. 그대로 있으면 인간이 아니지.’

꼬리 칸의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을 주도하는 사람은 커티스다. 자동차 극장에서 아들 녀석의 반란도 이때 시작되었다.

“아빠, 저는 영화가 안 보여요. 앞으로 가도 돼요?”

알고 보니 자동차 극장은 앞좌석을 위한 곳이었다. 더구나 우린 그 극장의 맨 앞자리였으니 뒷좌석의 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화의 화면이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문제는 딸아이였다. 다섯 살 꼬마 아가씨는 열두 살 오빠가 엄마와 앉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아내는 딸과 아들 모두를 안을 수 없었고, 운전석의 나는 아들 녀석을 안을 수 없었다. 딸아이가 막무가내로 울기 시작했

다. 답답한 차 안에서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영화를 보는 엄마 아빠가 미웠던 모양이다. 아내가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내 아들과 난 두 다리 쪽 뻗고 영화에 집중하게 되었다.

꼬리 칸의 사람들은 기차의 앞쪽 칸으로 가고 있다. 어려움이 있고 앞쪽 칸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았다. 그래도 그들은 앞으로 나아간다.

평등! 저항! 혁명!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들이 떠올랐다. 386이 참 좋아하는 말이다. 나의 반쪽 386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내의 의식이 나를 선진적인 것은 80년대 학번의 공통 문화를 향유했기 때문이라. 더러 아내의 말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가진 시대적 감수성에 내가 미치지 못함이다. 그러니 이런 장면을 함께 보면 참 좋으련만!

권력을 가진 자의 지배 수단에 불과하던 법은 시민혁명을 만나 민주주의 법으로 다시 태어났다. 저항은 숭고한 이념이자 법을 새롭게 하는 역사의 원동력이다. 다만 법이 저항을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체제 유지적인 법과 체제 변화를 모색하는 저항권과의 모순 탓이라.

그래도 다수의 법학자들은 저항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그 요건을 이야기 한다. 정말 썩을 대로 썩어서 국민의 합의를 배반한 법질서에 대하여 법체계 내의 어떤 다른 수단으로 해결되

지 않을 때, 저항만이 유일한 수단이라면 저항권을 행사해도 좋다는 말이다. 그렇게 엄격하게 인정되는 저항권이 바퀴벌레를 주식으로 먹어야 하는 영화 속 피지배계급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저항은 지배계급에 의해 터무니없이 억눌린 인간들에게 유일한 생존수단이다. 우리 헌법도 전문에서 3·1운동과 4·19 혁명을 언급하여 이러한 저항권과 정신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내와 우리의 늦둥이 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주인공 커티스는 앞쪽 칸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앞쪽 칸은 환하다. 물고기와 화초, 화려하고 깨끗한 사람들, 아이들은 월포드가 영웅이라는 내용의 세뇌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커티스 일행은 몇 년 전과 이번의 반란에서 꼬리 칸 다수를 무작위로 죽인 것은 기차 내 다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균형’ 때문인 것을 알게 된다.

균형이라는 말에 이렇게 소름끼치긴 처음이다. 사실 균형은 법률가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다. 대법원 앞의 정의의 여신 동상이 들고 있는 저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균형일 것이다. 그것은 법관의 판단에서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런 균형이 영화에서는 공존을 위한 전략이고 꼬리 칸에게 행해지는 비인간적인 처사의 합리적 이유가 된다. 불행히도 균형을 이유로 행하여진 학살은 비인간적이지만 수궁이 된다. 극한적·예외

적 상황의 설정이 그렇게 만든다. 비행기 사고로 추운 지방에서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이 영화에서도 커티스가 처음 꼬리 칸에 탑승한 후 살아남기 위하여 어린 아이들을 먹었다는 말을 하면서 그 때의 상황에 대해 괴로워하기도 한다.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인간은 여전히 존엄하다. 생명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당위가 흔들리는 것은 이 영화의 설정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범죄들이 수시로 생명을 위협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정치는 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있지 않고, 정권을 잡기 위한 싸움에 끝없이 몰두한다. 이념과 실재는 괴리되어 사람들의 눈에 법은 공허해 보인다. 영화가 극한적 상황을 빌어 말하려는 것도 어쩌면 한국 사



아내의 대답은 짧고 냉랭하다. 분위기가 갑자기 묘해졌다. 함께 보러왔는데 의도와 달리 영화의 절반 이상을 보지 못해서일까?

이제 영화는 후반부다. 커티스가 기차의 중간쯤 왔을 때 ‘이만하면 많이 온 것 아닌가? 더 가지 않아도 자네는 영웅이네’하는 말을 듣는다. 어쩌면 어떤 노력에 대해 나름의 성과는 제 각각일 수 있다. 끝장을 보아야만이 미덕은 아니다. 법질서의 모순에 저항할 때도 더 큰 희생을 줄이기 위한 대타협은 차라리 용기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가슴이 답답할 것은 분명하다.

그의 전진을 돕는 보안전문가 남궁민수가 환각제인 크로놀을 모은 것은 기차를 세우고 탈출하려는 의도임을 알게 된다. 크로놀은 폭약이 될 수도 있었다. 우리가 탐닉하는 것의 파괴성을 말하려는 것일까? 남궁민수는 크로놀로 앞 칸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기차 밖으로 나가는 문을 폭파시키고 기차에서 탈출하려고 하지만 커티스는 그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은 채 전진한다.

커티스가 드디어 기차의 맨 앞 칸에서 월포드를 만난다. 월포드는 커티스에게 중대한 제안을 한다.

“이 기차를 맡아주게.”

월포드는 이제 늙었고 기차는 누군가가 이끌어야 한다며, 역경을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기차의 꼬리 칸에서 맨 앞



화가 직면한 이토록 안타까운 현실일지 모른다.

기차는 굴러가야 한다.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거기에 묻어간다. 행해지는 모순과 부조리에 저항할 생각도 별로 없다. 비정규직 친구를 위해 정규직을 버릴 사람은 없다. 전쟁을 서슴지 않는 북한에 대하여 ‘북한사람들의 인권이나 우리와의 통일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도 한다. 여전히 지역감정이라는 낡은 도구가 이용되어도 생존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도 남는다. 기업이나 학교, 국가라는 기차는 그렇게 모순과 부조리를 안고 달려간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세울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다. 더러 내리고 싶긴 하다.

아내가 잠든 아이를 안고 돌아와 뒷좌석에 앉았다.

“밖에서 봤어?”

“응.”

칸까지 온 커티스야 말로 기차를 이끌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한다. 제안은 달콤했고, 커티스는 흔들렸다. 기성세대가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일까? 아니면 당연한 일인가? 법은 어떤가? 민중들의 저항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나? 첫 마음을 잃어버린 법은 개정 혹은 다른 새 법의 제정으로 폐기되지 않던가? 4·19세대가 정치입문을 하고 기성세대가 된 것을 비판했던 386이 그대로 답습한 것은 이 영화에서 월포드의 제안에 주인공 커티스가 흔들리는 것과 유사하다. 혁명을 일으켜 기차의 맨 앞 칸을 차지한 그도 결국 월포드의 체제 안에서 안주할 것이 분명하다.

다행히 영화는 커티스가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엔진 부속으로 일하고 있는 실종된 아이들을 발견하고 저항의 첫 마음을 되찾는다. 그는 맹렬히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차에서의 탈출을 시도하는 남궁민수에게 기회를 준다. 마침내 기차는 폭발로 인하여 눈 덮인 산에서 멈추어 선다. 짐승의 털옷을 입고 기차 밖으로 나온 소녀와 소년의 눈에 설산을 오르는 북극곰 한 마리가 보인다. 영화는 끝이 난다.

“우리가 설국열차와 뭐가 달라?”

자동차 극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던진 아내의 말이다. 아니 이걸 무슨 금성에

서 온 여자 분의 도발적 언사이신가?

“나도 때로는 기차를 세우고 싶다고.”

이어지는 아내의 자조 섞인 말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운전만 한다. 그렇지. 우리도 설국열차와 다를 바 없지. 내리면 죽을 듯 생각하면서 부조리와 문제점을 안은 채 살아가지. 그것이 서로를 위한 것이고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체절명의 진리인 양 말이다. 그날 밤 우리는 늦도록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내는 일방적이고 가중된 가사 노동과 육아, 그리고 그 너머 소통과 감정적 유대의 부족을 이야기했다. 우리들의 설국열차였다.

세상 어려운 것 중 가장 어려운 일을 가까스로 이겨낸 심정으로 잠들었다.



노사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 노동위원회 –



글. 박동국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사회갈등과 노동위원회의 필요성

통신 및 미디어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과거의 참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를 지나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칭찬받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권리 간 충돌이 커지면서 이러한 권리 충돌 즉,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현대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OECD회원국 중 네 번째로 사회 갈등이 심한 국가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한 유형이자 한국의 산업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와 사용자 간 갈등 즉, 노사갈등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에 따라 노사 모두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을지, 서로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만 입을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해결해야 할 것이나, 법원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¹⁾,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인해 오히려 당사자 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1)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비용 및 소요기간 비교

	노동위원회	법원
비용	* 비용 발생 없음(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무료국선 대리인 선임제도 운영)	* 인지대, 송달료,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따른 많은 비용이 소요
소요기간	2008~2012년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 - 지노위(42.2일), 중노위(90.2일)	2011년 민사소송의 처리기간 - 1심 합의 판결(272.2일), 항소심 고법 판결(280.1일), 상고심 합의 판결(139.8일) ※ 2012년 사법연감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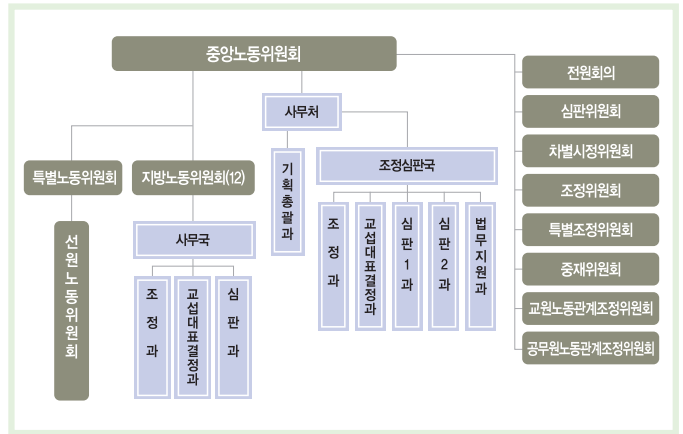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노동위원회 제도의 특성

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8일 노동위원회법이 제정·공포(법률 제281호)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노동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마다 위치한 지방노동위원회, 재심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특정분야의 노사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노동위원회(예를 들면 선원에 관한 사건은 선원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로 구성되고 있다²⁾.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와 사용자가 당사자로서 다투고 노동위원회는 이 사이의 갈등 해결을 도모한다.

법원의 경우 확정된 판결에 의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노동위원회를 거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공정력이 부여되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판정이 무효가 된 경우,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이나 법원의 취소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을 내린 경우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제도³⁾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강제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성

- 2) 미군정청은 1945. 10. 30. 노동분쟁은 「노동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해 12. 8. 「노동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53. 3. 8.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현재의 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 1963. 4.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제도, 1989. 3.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제도, 1999. 7. 교원의 노동관계에 대한 조정·중재제도, 2006. 1. 공무원 노동관계에 대한 조정·중재제도, 2007. 7. 기간제와 단시간 및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제도, 2008. 1.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2010. 1. 복수노조관련 사건의 시정신청제도 도입 등 그 업무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3) 이행강제금 제도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노동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453건, 근로자 3,640명과 관련하여 189억 6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근로자들의 조속한 구제를 실현하고 있다.

법원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당사자 간의 주장을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사회 각층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입장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부족한 법리적인 부분은 조사관들이 보충함으로써 원활한 갈등해결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용자위원이 노동쟁의 조정회의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부당해고 등의 심판사건의 판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양 당사자의 입장이 판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였으며, 노사 간 교역할을 통해 조속히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업무 중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업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에 관한 심판업무이고 그 다음으로는 노사 간 단체교섭 도중 발생한 이

익분쟁 등에 관한 조정제도 관련 업무이다.

이에 더하여,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차별시정제도, 2010년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분쟁해결제도에 따른 업무가 노동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손꼽힌다.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인사처분·징계·해고한 경우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통해 이러한 처분이 있기 전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사용자가 조합원임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단체교섭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재발방지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에 대해 화해제도⁴⁾를 도입하여 사건의 신속한 해결 및 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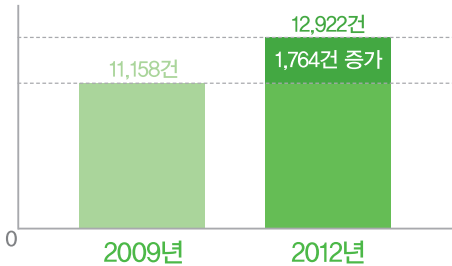
실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2012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2,922건(재심사건 1,901건 포함) 중 3,907건의 사건에서 화해가 이루어져 판정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34.4%의 갈등이 해결되었다.

1997년 IMF 및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민사소송에서 주로 활용되는 제도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공정력 및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

2009년에는 11,158건이 접수된 반면, 2012년에는 12,922건이 접수되어 1,700여 건이 증가했다.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



구제율도 2007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평균 71.5%를 기록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료되는 사건 비율(분쟁해결율)도 96%임을 볼 때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정의 공정성 부분에서도 공익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최근 몇 년간 판정에 불복하여 이루어진 소송은 판정의 30% 수준(2012년의 경우 33.8%)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재심유지율은 85% 내외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최근 비정규직의 문제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2.5%(2012년 8월 기준)에 이르며,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3.3%(2012년 8월 기준)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기간제법 시행과 동시

에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이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신청건수가 100건 내외(2012년의 경우 101건)에 불과하여 13,000여 건이 넘는 심판사건에 비해 턱없이 저조하다.

이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재직 중 신청을 하면 고용불안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8월 2일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차별시정에 관한 조사권을 부여하여 일선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으로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별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시정통보제도를 도입했다.

복수노조 등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 관련 조정제도

2011년 12월 말 기준 전국적인 노동조합 현황은 5,120개소, 조합원수는 172만 명이다. 2011년 그간 시행이 유보된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게 됨으로써 2013년도에만 1,175개의 노조가 새로 설립됨⁵⁾으로써 노동위원회의 대표적인 갈등해결제도인 조정제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조정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

5) 2013년 4월 말 기준으로 706개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음 (2013. 6. 17. 월간조선 기사 중 발췌)

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전치주의⁶⁾에 의해 노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인(공익사업의 경우 공익위원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0일 이내(공익사업의 경우 15일)에 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2012년 전국적 조정신청건수는 752건이며, 이중 61.9%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실질적 분쟁인 쟁의행위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하여 노사 간 갈등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⁷⁾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부분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노 간의 갈등,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조가 노동조합간 또는 그 조합원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제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

6) 분쟁이 있을 경우 조정을 먼저 거쳐야만 재판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우리 노조법에서는 노사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실제 2009년 121건이었던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2010년 86건, 2011년 65건, 2012년 105건으로 감소

특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사용자와의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해당되므로 이 과정에서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야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사건처리기간을 법적으로 10일(과반수노조,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등 조합원수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10일간 연장 가능)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이를 시정해달라는 시정신청이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건수는 법이 시행된 이후 430건에 해당하나 조사과정 등에서 사용자를 설득하여 판정회의의 전즉시 공고를 하는 등 조기에 사건이 해결되어 취하된 건수가 244건(56.7%)에 이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간접고용 등 고용시장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이 나타나고, 분쟁의 형태 역시 다변화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노동위원회는 앞으로 노동분쟁의 다변화에 맞는 맞춤형 분쟁해결

방법을 통해 조기에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 할 것이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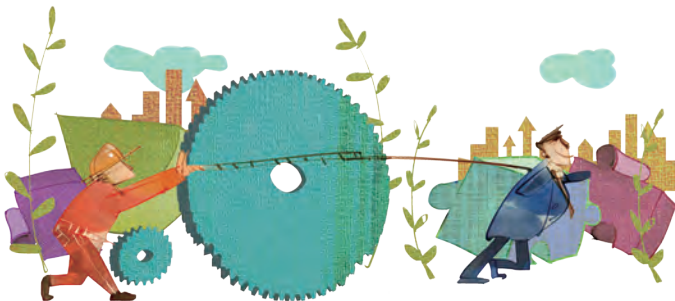
〈차별 시정 조정사례 : ○○○코리아 사례〉

○○○코리아는 경비업체로서 은행 ATM 기 현금수송업무 수행에 있어 정규직 경호원과 기간제 경호원을 함께 근무 시키고 있던 도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수시감독을 통해 정규직 경호원들에 비해 기간제 경호원(163명)의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통보되었음. 차별시정금액이 5억 원이 넘어 즉시 시정명령하기에는 해당 업체 규모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재직근로자 116명에 대하여 시정금액을 3회에 걸쳐 2015년까지 분할지급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근로자 및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음(퇴직자는 연락이 어려워 시정명령으로 사건 종결)

〈노동쟁의 조정사례 : ○○교통(주)등 사례〉

○○교통(주)등 8개사는 시내버스운수업을 하는 업체이고, 노동조합은 1,264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자동차 노동조합으로써, 노사는 2012년도 임금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해 9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노동조합측이 조정을 신청함. 주요쟁점사항은 노동조합측의 기본급 월

22만 원(기준시급 대비 7.5%)인상에 대해 사용자는 적자가 심한 지선의 경우 노선전담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액의 부족(대당 4만 원/일)과 유류비 등의 인상으로 임금인상의 여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월 5만 원(기준시급 대비 1.7%)인상을 제시함. 노동위원회는 조정과정에서 ○○지역의 8개사 시내버스업체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서로 달라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사전조사와 3차례의 조정(2차 조정은 현장조정을 실시)과정을 통해 노동조합측에 버스업체로서 공익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는 점과 사용자에게는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삶의 질에 직결됨을 이해시키면서 수차례의 양보안을 제시토록 하였음. 특히 조정종료일에 개최된 제3차 조정회의에서는 자정시간까지 9시간여에 걸친 끈질긴 설득과 양보를 통해 기본시급 대비 3.43% 인상에 노사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음



과도한 스포츠 내셔널리즘 고찰 : 류현진 보도를 중심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공식 홈페이지[losangeles.dodgers.mlb.com] 캡처



글. 권오상
전 한겨레신문 스포츠팀
부장

들어가며

류현진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12승을 달성한 8월 14일 이후 13승에 도전했던 일주일(8.16.~8.22.) 동안 국내 중앙지와 지방지, 전문지 및 방송에서 류현진의 이름을 넣어 보도한 뉴스건수는 2,728개였다. 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같은 기간 폭염을 보도한 건수 1만 4,262건의 19%에 해당하는 양



추신수 메이저리그 개인통산 100호
홈런의 순간
(출처: 스포츠, 「추신수의 통산 100호
홈런이 터지는 순간」,
2013년 8월 28일자)

이며,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내 농민들의 생계에 치명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가뭄에 대한 보도건수 3,746건의 72.8%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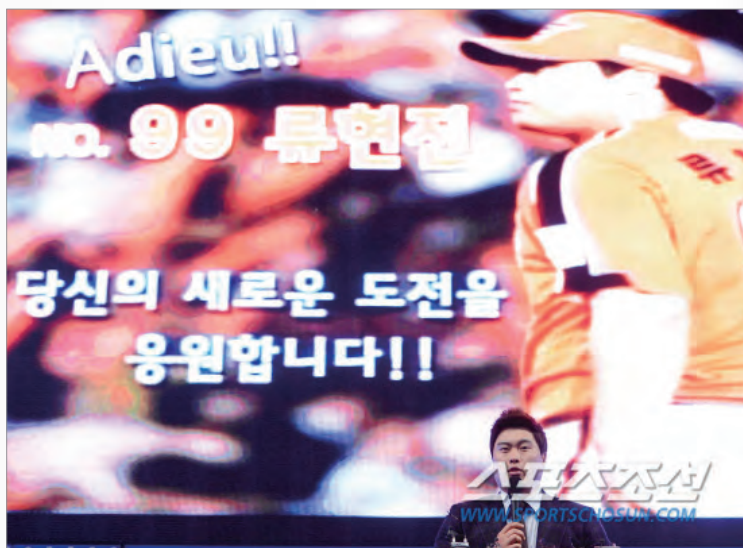
메이저리그 기사 80%가 류현진 보도

스포츠뉴스에 국한해 류현진에 대한 보도량을 조금만 분석해보자. 역시 같은 기간(8. 16.~8. 22.) 미국 메이저리그에 대한 보도 3,409건 가운데 류현진을 다룬 기사가 80%를 차지했다. 추신수에 대한 보도가 류현진의 효과와 동반상승함으로써 메이저리그 뉴스의 38.5%(1,412건)에 이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 추신수에 대한 보도는 올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15건이었다. 이 일주일 사이에 보도된 전체 스포츠 뉴스가 1만 7,121건이었는데, 이 수치가 폭염 보도의 수를 넘어 서고 있다는 것은 스포츠가 일상적인 저널리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어쨌든 이 가운데 류현진 한 개인에 대한 보도가 15.9%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류현진의 미국 진출을 허용했던 2012년 10월 29일부터 올 시즌 다저스의 개막전이 열리기 전인 올해 3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국내 언론이 류현진의 이름을 넣어 보도한 건수가 3만 102건이었다. 그런데 시즌 개막일인 4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이 건수는 두 배가 넘는 6만 4,163건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445개의 류현진 관련 기사가 쏟아진 셈이다(이 통계들은 신문과 잡지, 방송을 포함한 온라인뉴스 통합 스크랩 서비스 아이서퍼(eyesurfer)에서 수집했다).

류현진에 대한 국내 언론의 이런 뜨거운 관심과 쏠림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투수로서 세계 최고의 무대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류현진의 활약상을 보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물음 자체가 오히려 어색하

메이저리그 진출 환송식 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류현진
(출처: 스포츠조선, 「아듀 류현진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13년 1월 5일자)



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프랑스 사회학자 가브리엘 타르드(Gabriel Tarde, 1843~1904)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왜 언론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류현진의 활약에 환호하는 것일까라고 물음표를 던져 볼 수 있을 것이다. 흔한 얘기로 너무 지나친 보도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또는 적당히 보도해야 한다는 정도로 점잖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가볍게 이 문제를 지나치기엔 이 현상들은 너무나 우리들의 생활과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어김없이 닷새 만에 찾아오는 그의 선발등판 때마다 텔레비전 앞에 서게 되거나 스마트폰을 열게 되는 생활패턴의 형성, 그의 활약을 통한 대리만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정보의 공유, 나아가 정보의 소비까지를 생각하면 결코 가벼운 문제만은 분명히 아니며, 오히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인간이 지구의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지구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과 별, 태양의 궤도와 움직임을 이해하고 나면 지구가 어떤 궤도로, 어떤 빠르기로 자전과 공전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린 미디어가 류현진을 왜 이

렇게 보도하는지, 류현진은 왜 미국으로 갔는지, 그의 활약은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와 메이저리그를 둘러싼, 우리 생활에 긴밀하게 결합된 사회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구조의 메카니즘이 작동하는 곳이 바로 우리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셔널리즘이라는 정신의 세계를 생산하는 공간과 시간이며, 그 내셔널리즘으로 인해 우린 애국적 열정으로 류현진에 환호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서양 스포츠의 세계적 확산

왜 스포츠는 내셔널리즘, 즉 민족주의와 결합해 더 강렬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스포츠와 내셔널리즘은 언제 생겨났고,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쟁적인 신체활동인 스포츠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으며, 고대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인류에게 보편적 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물역사적 일반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스포츠 특성을 과거의 것과 구분지어 설명해줄 수 없다. 따라서 고대나 중세와 구분되는 근대 이후의 스포츠를 논할 필요가 생긴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앨런 거트만(Allen Guttmann)의 '근대스포츠의 본질'은 세속화·기회균등·전문화·합리화·관료화·수량화·기록추구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7가지의 특성만으로 근대스포츠를 설명할 수 없는 까닭은 현재의 스포츠가 고도로 국제화·상업화·산업화·세계화·초국화·복잡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를 입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로는 1978년 피파(FIFA) 월드컵에 출전한 해외파 출신 선수들의 비율은 11.4%였는데, 1990년 27.1%, 2006년에는 53.1%로 급증했다는 연구(Frick, 2009)가 있다. 박지성이 뛰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공식 출범했던 1992~1993년 시즌에 이 리그에 참여한 선수들의 해외 국적 수는 27개(외국인 선수 비율 30.3%)였지만 이번 시즌은 64개(외국인 선수 비율 66.7%)에 이른다(transfermarket.co.uk, 2013). 류

현진과 추신수가 뛰고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을 제외한 15개국 241명(외국인 선수 비율 28.2%)의 외국인 선수가 올 시즌 30개 구단에 등록되어 있다(MLB.com, 2013).

100년 전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이제는 안방의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친숙하고 신속하게 전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 프로페셔널(직업화된) 스포츠인 축구와 야구의 국제화가 동양이 아닌 서양,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초등학교(당시엔 국민학교) 시절이었던 1960~70년대엔 어느 학교 운동장엘 가더라도 어김없이 씨름장이 있었지만 지금 씨름장이 있는 학교를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다. 프로스포츠로 탄생한 민속씨름이 서양의 프로스포츠 시장 뒤편에서 실패로 막을 내린 것과는 반대로 요즘 일선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스포츠클럽의 스포츠는 모두 서양에서 도입된 것들이다.

매일같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스포츠뉴스가 이런 영역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한마디로 우리 서양스포츠의 세계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때론 다정하고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런 서양스포츠가 민족성이 남달리 강한 한민족 문화와 결합함으로써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붉은 악마’, ‘대~한민국!’과 더불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은 한국 근·현대스포츠의 가장 큰 사건이자 역설과 모순이기도 하다. 따라서 더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근대 이후의 스포츠는 서구화와 근대화의 결과물이라고 단언할 수 있으며, 서구 중심적 전개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는 주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스포츠 내셔널리즘에 관해 얘기하려는 지금 우리는 서양화된 스포츠로 몰입하고 서양의 스포츠를 통해 우리의 열정과 열광의 환희를 느끼고 즐기고 있는 우리 현실의 객관적인 문턱을 갓 넘었을 뿐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3·4위전을 응원하기 위해 시청광장에 모인 붉은 악마들
(출처 : 스포츠서울, 「2002한일월드컵 10주년,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 2012년 5월 29일자)

근대 민족주의와 스포츠의 결합

스포츠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민족 또는 민족주의는 그럼 무엇이며,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 이 문제는 정치학자인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윤형숙 역, 나남출판, 2002)에서 제시한 민족주의의 세 가지 패러독스 가운데 세 번째 역설만큼이나 난해하고 풀기 어렵다. 그는 민족주의가 ‘정치적’으로는 위력이 있는 반면, 철학적으로는 그 내용이 빈곤하고 일관성마저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족주의가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지만 그 내용의 깊이란 각양각색인데다, 최소한 자기방어적 이데올로기부터 시작해 배타적이며 국수주의적 파시즘으로 치닫기까지 한다.

이런 이유로 다른 주의들(isms, 사상)과 달리 민족주의는 홉스(Hobbes), 토크빌(Tocqueville), 막스(Marx), 베버(Weber)와 같은 대사상가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앤더슨은 주장했다. 그런데 그는 민족이란 가장 작은 민족의 성원들도 대부분 자기 동료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지만,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서로 친교(commune)의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벅엄(Beckham)의 활약에 영국인들이, 펠레(Pele)의 활약에 브라질인들이, 메시(Messi)의 활약에 아르헨티나인들이, 박지성의 활약에 한국인들이 서로 잘 몰라도 마치 오래 같이 생활해온 가족처럼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환호하는 현상은 바로 앤더슨이 말한 ‘친교의 이미지로 서로를 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앤더슨의 관점이 학계와 세간에 흥미롭게 전파된 이유는 출판과 인쇄 자본주의, 즉 근대적 미디어산업이 특정언어와 지역성과 결합함으로써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파한 데 있다. 류현진의 시즌 10승, 추신수의 시즌 20호 홈런 등의 소식에 한반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흠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들이 서로 만나거나 통신을 하지 않고도 미디어를 통해 민족이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서 비슷한 환희를 느끼는 이유이다. 이렇게 근대 시점에서 언어와 인쇄술의 결합을 통한 상상의 공간이 인간의 마음 속에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저절로, 또는 자발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것은 물론 당연히 아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선행적 환경과 맥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이 종족, 조상, 종교, 언어, 영토 등의 원초적 유대 위에 성립된다고 보는 원초론(primordialism)은 민족이 국가에 선행하고, 민족적 유대감은 국가나 정치형태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이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강명세 역, 창작과비평사, 1994)에서 ‘만일 유럽에 있었다면 역사적 민족들(historian nations)로 인지되었을 중국·한국·베트남과 같이 상대적으로 영구한 몇몇 정치체’가 어찌면 원초론적 관점에 어울리는 민족으로 분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민족을 근대화의 산물로 보는 도구론(instrumentalism)은 ‘민족주의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근대화와 도시화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생성된 이데올로기로서, 국가민족 또는 민족국가의 개념을 상징한다(임지현, 1994)’고 주장한다. 동아시아처럼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단일민족적 성격이 오래 지속된 경우가 전자라면,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으로 근대국가의 출현과 민족의 형성이 두드러졌던 유럽의 경우가 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단일민족을 주장하고 강조한다고 해도, 원초론적 민족주의의 강조와 주장은 근대적 개념의 민족국가 이전 단계라는 제한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근대 이전의 민족은 지금과 같이 명확한 영토와 국가라는 정치체에 기반해 국제적 경쟁을 벌이는 인간집단의 단위는 아니었던 것이다.

홉스봄의 표현처럼 민족(주의)의 고향 유럽에서 만개한 민족국가의 경쟁적 주도권 싸움은 앞서 언급한대로 1차 대전을 야기했

고, 이는 2차 대전 발발 이전까지 유럽의 민족주의를 완성했다. 2차 대전 이후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식민지를 경험한 제3세계에서 민족국가의 구도가 차차 형성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 국가 중심의 세계구도는 제국주의와 세계전쟁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근대 스포츠가 국제적으로 등장한 19세기 말부터 스포츠는 자연스럽게 민족국가 간 경쟁의 장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며 민족주의와 결합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근대적 형태의 민족국가의 탄생, 그리고 이 민족국가 단위의 국제적 경쟁이 새로운 지구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1986년부터 시작된 근대올림픽과 1932년부터 올림픽과 결별해 국가대항적 프로스포츠를 외치고 출범한 월드컵 축구는 민족주의를 전쟁보다 더 친숙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화적 매체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류현진과 추신수, 박지성 등 해외파 스포츠 스타선수들의 활약에 온 국민이 애국적 열정으로 응원을 하고, 관심을 보이는 일은 이런 거시적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재화된 것이다. 즉, 스포츠 내셔널리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근대적 시장질서가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민족국가에 작동하는 다양한 현실 가운데 극히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이 1934년과 1938년 월드컵 축구에서 두 차례 우승한 사실, 독일 히틀러 정권이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종합우승한 사실은 스포츠가 파시즘과 나치즘이라는 민족주의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프랑스 극작가 장 지로두(Jean Giraudoux)가 ‘축구의 영광’이라는 글에서 “1933년 우리들 세계에서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직은 전쟁과 스포츠, 둘 밖에 없다”고 말한 유명한 표현은 스포츠가 민족주의적 색채를 전쟁만큼이나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작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역시 1945년 ‘스포츠 정신(The Sporting Spirit)’에서 “불순한 의도로라도 막대한 돈을 벌려면 이스라엘-아랍, 독일-체코, 인도-영국, 러



프랑스의 극작가 장 지로두
(출처 : NNDB[www.nndb.com])



시아-폴란드, 이탈리아-유고의 축구경기 시리즈를 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민족국가간의 갈등과 혐오가 극에 달했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권오상, 2011). 치욕적인 일제식민지 경험을 겪은 한국이 일본과의 모든 스포츠경기에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일본보다 더 열렬한 관심과 응원, 열정을 쏟는 것은 이런 민족 간의 갈등과 모순이 뿌리 깊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내셔널리즘의 효과와 이해관계

지금까지 스포츠와 내셔널리즘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왜 찰떡궁합처럼 잘 들어맞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았다. 그럼 스포츠 민족주의,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반적인 것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경제적인 이해로 볼 수 있다. 가령 2006년 독일월드컵의 경우 32개국의 팀만이 본선에 진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누적 총 텔레비전 시청인구가 262억 9천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구촌 인류에게 주는 재미와 감동의 효과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월드컵은 이런 엄청난 시청인구의 단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삶의 구조적 모순을 결코 해결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더 심화시키거나 은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표현은 사실에 부합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외국인 선수 비율이 유럽 프로축구 5대리그 중 66.7%로 가장 높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는 잉글랜드를 뺀 전 세계 64개국에서 온 342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4개국에서 10명이 진출해 있는데, 가장 인기가 있는 EPL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 아시아에만 4,100만 명 이상의 팬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EPL의 해외중계권료는 200개 이상의 나라를 대상으로 2007년 기준 3년간 1조 642억 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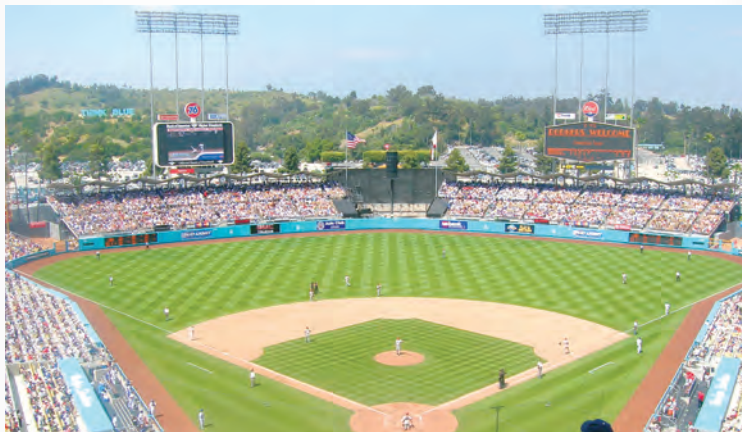
(Sheerwood, 2007). 이런 액수는 올 시즌 EPL의 해외중계권료를 포함한 총 액수 3조 7천억 원과 간접 비교하면 연간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프리미어리그가 전 세계의 시장으로부터 중계권료만 챙겨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거기엔 여행과 경기장의 입장, 해당 구단의 유니폼과 같은 상품구매 등 경제효과는 쉽게 측정이 되지 않는다.

영국의 스포츠사회학자 줄리아노티(Giulianotti)가 아시아선수 사들이기와 같은 축구의 초국적 노동 형태, 즉 축구 이외의 직접 투자의 한 형태로서 외국인 선수의 영입은 해당 구단의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그 클럽의 매출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지난해까지 코리안 메이저리거는 추신수 1명으로 근근이 체면치레를 했던 한국의 스포츠 내셔널리즘은 올 시즌 류현진의 가세와 성공으로 마치 미국 프로야구를 평정하는 듯한 분위기로 돌변한 듯 보인다. 물론 올해의 경우 MBC스포츠플러스가 메이저리그와 연간 45억 원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계권료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른바 ‘대박이 터졌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기는 하다. 하지만 류현진의 소속팀이 전통적으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의 홈팀이라는 점, 향후 중계권료 인상의 조짐이 농후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미 미디어의 과열된 경쟁적 보도가 보여주듯이 메이저리그의 잠재적 시장이 박찬호 이후 국내에서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과연 누구에게 더 큰 이득이 돌아갈 것인지 는 명약관화(明若觀火, 편집자 주 :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분명하다는 말)한 일이다.

그러므로 최고기량을 갖춘 상대적으로 후진국 출신의 엘리트 선수들이 해외의 유명한 리그로 진출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표면적 대리만족을 가져오는 대신, 막대한 중계권료의 지출, 해외 스포츠투어와 관련 구단에 대한 다양한 상품 구입 등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중심국에 더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 민족주의가 초래하는 효과의 이중성이며 역



설이자 모순이다. 이런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조장하고 자극하는데 앞장서는 분야는 단연코 ‘미디어’다. 미디어는 앤더슨이 언급한대로 ‘상상의 스포츠 민족공동체’라는 환상을 거의 매일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주입한다. 과연 국내 미디어는 어떻게 류현진과 같은 메이저리거의 뉴스를 다루고 있는가?



LA 다저스의 홈구장인 다저스 스타디움
(출처 : 위키미디어[commons.wikimedia.org])

감정 자극과 반복 · 모방 보도행태

방송이 시청률에 의존해 콘텐츠의 성공여부를 평가받는다면, 신문은 포함한 모든 뉴스는 온라인시대에 걸맞게 클릭수로 그 영향력과 진실성이 가려지게 마련이다. 물론 논란이 벌어지는 기사들이 반드시 옳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뉴스야말로 내용의 건강성 여부를 떠나 좋은 콘텐츠로 평가받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뉴스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피해 점차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들을 다루게 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류현진과 관련해 가장 민족주의적 보도 논란이 벌어진 것은 무엇보다 일본인 메이저리거인 스즈키 이치로와의 맞대결에서 류현진을 상대로 홈런을 친 이치로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가령 〈일간스포츠〉와 〈JTBC〉의 6월 20일 통합 온라인뉴스에서는 제목을 「NYY 이치로 망언 논란, ‘도발 or 자신감 표현?’」으로 붙임으로써 기사의 실제 내용에 비해 자극적인 표현이었음이 확인됐다.

특히 이치로의 망언 논란이라는 문구에 아무런 인용표시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치로의 발언을 망언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실제 이 기사는 이치로가 “눈을 감고 쳤다”는 발언에 대해 망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칫 류현진이나 다저스 입장에서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피홈런 투수 당사자 류현진이나 해당 구단 다저스의 어떤 반응도 적합한 근거로 내세우지 않고 기자 자신의 추측만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기사는 한발 더 나아가 “자신감이 강한 이치로의 성향과 최근 성적 부진을 감안하면 ‘자신감’을 나타낸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는 또 다른 기자 자신의 추측을 사실처럼 묘사했다. 이 내용에서는 이치로의 자신감과 최근의 성적 부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은연중에 이치로를 비하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보도의 진짜 문제점은 당사자의 발언 진위를 자신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그 의도의 진위성을 확인하기 보다는 그 의도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다시 해석하고 단정함으로써 이중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에 가서는 일본 신문 <산케이스포츠>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와전’이 났을 가능성이 큰 이유”라고 묘하게 꼬리를 감추고 있다. 이 기사는 결국 오해의 소지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실제로는 앞선 표현에서 나타났듯이 기자가 의도적으로 ‘와전’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발언 당사자에게 돌리는 모순도 함께 보여주었다.

가장 먼저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 언론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마치 군중심리의 효과를 보는 듯한 세계가 펼쳐진다. 「일본판 주먹감자」 이치로, “눈 감고 스윙” 발언 도마(일요신문), 「역시 ‘입치료’, 이치로 “류현진 공 눈 감고 홈런 쳤다” 망언(헤럴드경제), 「이치로는 입치료? “류현진 공 눈 감고 쳤다” 망언(조선일보) 등의 기사가 잇따랐다.

그러나 후폭풍이 있을 법한 사건을 놓고 언론사 간의 경쟁은 곧 진위여부 논란이라는 2단계로 나아갔다. 인터넷 스포츠뉴스 <오

NY Yankees 이치로 망언 논란, ‘도발 or 자신감 표현?’

【산케이스포츠】 도쿄 2013.6.20 12:20



2013년 6월 20일자 일간스포츠 기사 캡처



센) (OSEN)이 「류현진에 홈런' 이치로 또 망언? 알고보니…」라는 논란을 잠재울 기사를 내자, <조선일보>가 이를 그대로 인터넷으로 받아 게재했고, 정작 논란을 일으켰던 언론사 <일간스포츠>와 <JTBC>는 「오해로 빚어진 NY Yankees 이치로 망언 논란 '시끌」이라고 정정성 보도를 했다.

이 2단계 보도에서는 사건을 추스르기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를 상업적으로 끌고 가는 듯한 인상도 피하기 어렵다. <오센>의 기사를 전제한 <조선일보>는 다시 자사의 기자 명의로 「이치로, “눈감고 류현진 공 홈런 쳤다” 망언 사실일까?」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눈감고 휘둘렀다”는 이치로 발언 논란」이란 기사를 썼던 통신사 <연합뉴스>는 논란기사가 전 언론사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자 3시간 뒤 「이치로 “눈감고 쳤다” 논란… 실은 “과감하게 쳤다”(종합)」는 식의 해프닝성 기사로 정리했다. 결국 이렇게 국내에서만 유독 ‘논란’이 생긴 이 현상은 <일간스포츠>가 21일자 최종판 신문에서 「“눈 감고 스윙했다” 이치로 발언 또 논란」으로 나온 반면, 「이치로 망언’ 번역 해프닝」(스포츠한국), 「“류현진, 상대하기 싫은 투수” 이치로 망언 없었다」(스포츠조선)는 양 극단으로 갈라졌다. 「류현진 상대하기 싫은 투수」라는 제목의 기사는 인터넷 스포츠뉴스 <오센>이 먼저 낸 기사인데, 이 글의 첫 부분이 “망언은 없었다. 칭찬만 가득했다”로 시작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의 상반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글 역시 이치로의 발언이나 인용의 출처인 <산케이스포츠>의 맥락을 제대로 짚어보겠다는 의도보다는 다른 언론사의 보도 문제점을 겨냥한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치로는 ‘류현진을 상대하기 싫은 투수’라고 에둘러 말해 좋게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류현진은 ‘이치로가 잘 쳤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언론은 두 선수의 이런 진실성이 담긴 표현보다는 ‘망언’이라는 역사적 한·일 민족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민족주의적 재현 관행을 통해 소모적이며 비생산적인 담론들을 양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6월 20일자 연합뉴스 기사 캡처



이런 논란 기사의 경쟁구도 속에서 버젓이 나온 「아쉽게 끝난 뉴욕 정벌」(국민일보) 기사는 마치 일본이 한국과 만주를 정벌한 것처럼, 이젠 류현진을 대리인으로 보내 한국이 뉴욕을 ‘정벌’이라도 하려는 듯한 군국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 사고가 담긴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쟁용어를 통한 일상화된 공격적 표현은 이중적 성격을 내포한다. 우선 근대 이후 전쟁을 일으킨 대부분 선진국의 언론에서 사용하던 표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후진국의 미디어 세계에 스며든 것이며, 전쟁의 피해국인 후진국들이 민족 감정 속에 내재된 열등의식을 이겨보려는 의도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용어들이다.

어쨌든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이런 국내 언론의 ‘냄비 보도’ 양상은 도대체 왜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이런 진지한 문제의식은 앞서 언급한대로, 별로 이상해보이지 않는 우리 현실이 실제로는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한다. 내용의 문제성 여부를 떠나 이치로의 말 한마디 또는 일본 수상이나 각료,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한국의 국민과 언론이 들썩들썩한다는 것은 자극받기 쉬운 한민족 감정의 성격을 드러냄과 동시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여전히 우리가 아니라는 현실의 거울을 비쳐줄 뿐이다. 스포츠의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최고를 지향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공감대, 최고의 세계를 먼저 열어



간 선진국처럼 끊임없이 우리도 발전할 것이라는 발전주의의 환상과 함께 언론과 대중은 야구의 메이저리그, 축구의 프리미어리그에 매우 깊숙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겠다.

스포츠 민족주의 보도행태의 심각성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인식을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8월 23일 류현진이 시즌 13승에 도전하기 위해 마이애미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쓴 것에 대해 「시즌 13승 달성 비상」, 「팀원들 배려, 자체 격리」, 「팀 동료 위해 마스크착용 눈길」, 「류현진 감기 소식에 팬들 응원 봇물」 등의 기사들이 쏟아진 것은 실제 스포츠가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행동하는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다보니 류현진과 관련된 기사가 부족할 경우, 즉 선발과 선발 등판 사이의 기간엔 「류현진도 오승환도 2차지명 대박」이라며 2차 지명 선수의 홀랑함을 드러내려 노력하는가 하면, 「ML(메이저리그) 기자 PS(포스트시즌)진출팀 류현진 공략법 준비해야」 등 시의성이 없는 무리한 기사를 내기도 한다.

이번에 류현진과 이치로의 경기를 통해 해프닝성으로 나타난 '망언' 촌극은 그나마 정확한 보도를 하려고 애쓰는 경쟁사들의 노력으로 사태가 크게 확장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런 경험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든 우리의 내면에 불씨가 지펴지기만 하면 활활 타오를 정신적 감염의 세계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의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비단 우리 민족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런 인식의 지평이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산된다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실천적으로 잡힐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급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 행동에 대한 언론의 경쟁주의적 보도행태의 극복 노력이다. 아쉬운 것은 현장의 전문가들인 스포츠언론인들이 이런 문제의 공감과 해결방안을 위한 어떤 공동의 가시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포츠내셔널리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스포츠사회학이나 철학의 분야에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계의 연구는 여전히 상아탑 안에서 논리와 텍스트로서 문제점을 설파할 뿐 현장과의 연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안타깝다.

현대인들은 복잡화, 초국화,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속화를 특징으로 하는 후기근대 또는 탈근대(post modern)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보자. 한국이 아무리 초고속 정보통신을 통해 세계를 리드한다고 해도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해 착시적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 1~2명의 메이저리거, 서너 명의 프리미어리거를 배출한다고 해서 한국의 스포츠 세계가 결코 선진국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극소수의 엘리트 선수의 해외 진출이 국내 언론사들의 콘텐츠 생산능력과 시스템의 종속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국내 스포츠에 대한 콘텐츠의 약화 우려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와 염려가 요구된다. 페어플레이를 통한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스포츠가 갈수록 경쟁과 승리 지상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선 스포츠미디어 종사자들이 스포츠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과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류현진과 추신수
(출처: MK 스포츠, 「류-추 재대결,
성사되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
2013년 8월 28일자)

뉴스 소스로서의 SNS 역할과 그 문제점



글. 황유선
중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Social
Network



뉴스의 소스가 된 SNS의 사례

얼마 전, 인터넷 상에서는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시민들의 주검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피가 흥건한 채 누워 있는 시신도 있었고 총을 맞고 쓰러져 죽어간 어린이의 사진도 보였다. 이토록 생생하고 선명한 사진은 현지의特派원이 찍어서 보도한 것도 아니고, 이집트 당국이 제공한 공식 자료는 물론 아니었으며, 현장에 있던 이집트 시민들이 직접 찍어서 그들의 SNS를 통해 게시한 사진이었다. 그리고 이는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우리들에게 공유되었던 것이다.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소식과 더불어서 현장의 망가진 기체, 뿜어 나오는 검은 연기, 부상당한 승객들과 아수라장이 된 기체 주변의 모습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었던 것도 SNS의 공이 컸다.

이렇듯, 중요한 뉴스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는 채널로서 SNS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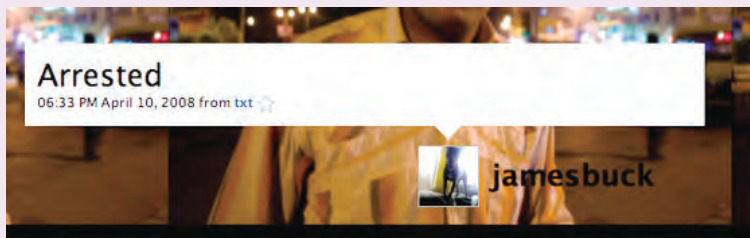


<http://twitpic.com/135xa> - There's a plan in the Hudson. I'm on the ferry going to pick up the people. Crazy.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2009년 1월 있었던 허드슨 강 비행기 추락사고를 실시간으로 전한 한 시민의 트위터
(출처 : 트위터, @jkrums)

쓰촨성 대지진 당시 현장의 소식을 발 빠르게 알리고 중계하는 트위터의 영향력을 세계인이 경험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같은 해에는 인도 뭄바이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트위터가 최초로 알렸고, 이집트 반정부 시위를 취재하던 대학생 제임스 칼 벅이 체포되자 그는 ‘체포됨(Arrested)’이라는 한마디의 트윗을 남김으로써 이를 본 트위터 이용자들이 미국 대사관과 변호사에게 이를 알리며 하루 만에 풀려날 수 있었던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미국의 뉴욕 맨하탄 허드슨 강에 비행기가 추락한 사진을 한 시민이 트위터에 게시하며 제1보를 전달했고 뒤이어 CNN, ABC 등 미국 유수의 언론사들은 트위터에 업로드된 사진을 사용하며 보도를 이어가기도 했다. 2011년 빈 라덴의 사살 소식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던 곳도 트위터였으며 같은 해 일본의 대지진 소식 역시 트위터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었다.



자신의 체포소식을 트위터로 전한 제임스 칼 벅
(출처 : 트위터 캡처, @jamesbuck)

SNS가 속보 매체로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라도 인터넷 망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간단하게 정보를 업로드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술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망라하여 구성될 수 있는 SNS의 인맥 구조는 SNS 운용의 기제로써 정보 확산의 인프라가 된다. 2009년 이란 선거 이후 언론의 보도 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반정부시위 무력 진압 과정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은 단연 SNS였고 그로 인해 세계의 관심이 이란의 정국에 몰릴 수 있었다. 일명 ‘재스민 혁명’으로 알려진 튀니지 반정부 시위는 2010년 말 아랍권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산되어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정권교체와 독재정치 종식, 그리

고 독재 통치자 망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재스민 혁명은 한 시민의 분신자살 소식이 페이스북을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공유됨으로써 대대적인 관심과 움직임이 촉발된 것이라고 보아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 같은 SNS의 활약은 대단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당시 정규 방송 뉴스를 통해 속보가 전달되기 이전 트위터에서 신속한 정보 확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2011년 양양 산불 중계, 서울 테크노마트 건물 흔들림에 관한 소식, 폭우로 인해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를 비롯해 서울 곳곳의 교통이 마비되었을 당시 실시간 교통 상황 정보가 트위터를 통해 전파되었다. 이로써 대중적으로 SNS에 대한 정보 채널로서의 인식이 강화되는 계기를 맞을 수 있었다.



SNS로 전파된 강남 일대 침수 모습
(출처 : 트위터 캡처, @westminia)

전통 저널리즘과 SNS

이처럼 SNS가 뉴스 전달 채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게 되면서 뉴스의 생산과 확산을 담당하는 전통 언론사들의 저널리즘 기능과 SNS의 공생구조가 자연스럽게 부각되었다. 이미 전통 미디어 기업들은 SNS를 통해 수용자들과 소통하고 정보 확산의 통로를 넓히는 식으로의 공생 관계를 구축하려는 모습이다. 미디어 기업들은 SNS의 속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자사의 SNS 계정을 만들고, 기자들 역시 SNS 상에서 취재원을 확보하



뉴욕타임스 소셜 미디어 편집장인
제니퍼 프레스턴
(출처 :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www.nytimes.com])

거나 대중과 상호작용하며 기사를 발굴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히 SNS 계정을 오픈하여 정보 확산 통로를 넓히고 양방향 소통을 구현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SNS를 통해 정보적 가치를 지닌 뉴스 수용자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전통 미디어 뉴스룸의 혁신으로까지 이어질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2009년 소셜 미디어 편집장(social media editor)을 임명하기도 했으며 SNS 담당 기자 제도를 도입하여 SNS를 통한 뉴스 보도 및 이를 활용한 신문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뉴스룸과 언론사 내부의 기자들, 그리고 독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구축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BBC 역시 소셜 미디어 전담 편집장제를 도입했으며, 영국의 방송사 스카이뉴스(Sky News)는 온라인팀의 기자를 SNS 전담 기자로 배치하면서 뉴스 취재 및 보도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국내 언론사들도 자사의 저널리즘과 뉴스 제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단순히 정보 제공 채널의 확장이 아니라 시장의 수용자들과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그들의 니즈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다.

언론사와 SNS의 공생관계는 생활 속의 저널리즘(ambient journalism) 구현으로까지 이어진다. 대중은 SNS 상에서 다양한 뉴스를 접하고 이를 소재 삼아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스스로가 사회적 혹은 정치적 공론장에 참여하게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SNS 이용자들은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 편집자 주 : 스마트 폰 및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사회적인 이슈를 파악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그들의 전문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SNS의 저널리즘 행위가 이들 이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전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개인이 임의로 편집하여 확산하는 과정을 대단히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줬으며 향후 SNS를 활용하는 대중이 뉴스 정보의 흐름

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았다.

대중에 의해 구현되는 SNS 저널리즘 행위는 반드시 새로운 뉴스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언론사에 의해 만들어진 뉴스 가치의 재편에도 관여하게 된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대체로 언론사의 뉴스 가치는 언론사 자체의 편집권에 의해 규정된다. 방송 뉴스에서처럼 프로그램 앞부분에 편성되어 송출되거나 신문의 일면배치 혹은 지면의 크기는 곧 뉴스의 중요도와 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SNS에서 최신의 트렌드 토픽으로 분류되는 뉴스 정보들은 전통 언론사가 부여하는 기사의 가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 또 구글 트렌드(google trend)와 같은 검색 서비스의 뉴스 순위와도 상이하며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헤드라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즉, 전통 언론사의 의제 설정(agenda setting)과 SNS 공간에서의 의제 설정은 그 설정 방식은 물론이고 의제 설정의 방향 역시 상이하다. SNS에서의 의제는 이용자들이 의해서 결정되며 그것은 대중이 경험하는 사회 문화적 현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며 나아가, SNS의 의제는 전통 미디어의 의제 설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SNS 상에서 주요하게 부각되는 사건이나 사안이 전통 미디어를 통해 정제된 형식의 보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때문에, SNS 이용자들의 취향이나 정치적 성향 등이 정보의 발굴, 생산, 확산 과정, 그리고 이슈 주목도에 반영되며 SNS는 그 자체로서 뉴스 정보 소통 채널의 고유한 속성을 충분히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SNS란 무엇인가?

SNS의 초기 형태는 과거 1997년 등장했던 사교 친목 사이트인 미국의 ‘식스 디그리즈(six degre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촌’을 맺음으로써 커뮤니티가 구성되고 상호간에 소식을 주고받거나 콘텐츠를 게시하는 공간으로 인기를 몰았던 ‘싸이월드’를 떠올릴 수 있다. SNS 사회는 결국 인맥을 바탕으로 현실에서의 삶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의 커뮤니티 속에서 구현되고, 그



자금은 사라진 식스 디그리즈의 로그인 화면
(출처 : [technology.ezinemark.com])



국내 트위터 팔로워수 순위
-2013년 8월 29일 현재
(출처 : 코리안트위터
[www.koreantweeters.com])

럼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며 인맥 형성 방식은 트위터와 같은 개방형이거나 페이스북과 같은 폐쇄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SNS는 사교적 소통만을 매개하는 채널이 아니다. 특히, 인터넷 매개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등장했을 때와는 그 상호작용의 성격이 다르다. 초기 인터넷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 개인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본인의 실제 모습과는 다른 인간성을 구현하기도 하며 현실에서 미처 채우지 못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백을 보상할 수도 있었다. 반면, SNS는 현실에서의 인맥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프라인의 인맥 규모가 온라인을 통해 연계되고 확장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SNS의 인맥 결성은 공개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 삶의 영역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인 상호작용 특성의 변화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SNS가 정보와 뉴스를 송수신하는 플랫폼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사건 사고, 국가적 행사, 시민운동 등에 관련된 정보가 SNS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됨으로써 SNS에 대한 사회 인식의 초점은 정보적 기능에 모아지는 추세이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연예인, 정치인을 포함한 사회적 유명인들은 SNS 상에서 많은 인맥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의견과 정보를 전략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팬덤(fandom, 편집자 주 :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현상)을 유지해 나가기도 한다. 즉,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일종인 SNS는 사교적 기능과 정보적 기능을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비로소 ‘사회적 미디어’로서 그 위치를 굳혔다고 할 수 있다. SNS는 이제 개인이 하나의 계정을 보유하는 개인 미디어(interpersonal media)로써 뿐 아니라 사회적 미디어로서 정보적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SNS를 이해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SNS를 마케팅 및 정보 전파의 도구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여기에는 정보 소통 과정에서 SNS를 가능한 한 유리하게 활용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리란 도구적인 기대가 반영되어



Social Network

있다. SNS의 이용이 발전적인 변화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 기저에 깔려 있으며 특히 정보와 영향력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허브(hub)로서 SNS의 유용성에 관심을 갖는다. 둘째는 SNS에서의 상호작용을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연장으로 보는 관점이다. SNS의 서비스 자체 혹은 그 미디어적인 속성 보다는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며 SNS의 사교적 측면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셋째는 SNS를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으로 보는 관점이다. SNS 공간에서 구성된 인맥 관계 구조는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이는 SNS 상의 권력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SNS 사회관계망 내에서는 관계망의 중심에 선 유력자가 정보를 전달하면 구성원들이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재확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SNS의 정보적 기능이 강조된다. 넷째, SNS는 권력관계가 드러나는 영향력 행사의 장이라는 관점이다. 정치학이나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며 과연 누구를 SNS 상에서 유력자라고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종 영향력 지표들이 제시되었다. SNS에서의 권력은 정보에 대한 높은 집중도와 공감에 의한 정보의 확산을 바탕으로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결국, SNS에 대한 최근의 사회문화적 그리고 학문적 관심은 SNS가 수행하는 정보 소통 기능과 적지 않은 관계가 있다.

SNS 매개 정보 소통의 부정적 특성

이념의 양극화

정보 소통 채널로서 SNS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바로 SNS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이야말로 SNS를 매개로 한 정보 소통의 정당성 혹은 보편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근거가 된다.

SNS는 이념적으로 양극화 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체로 진보 성향의 진영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언론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follow) 하고 있는 팔로워(follower, 트위터에서 인맥 관계를 맺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구독하게 되는 이용자) 규모는

경향신문의 트위터
(출처 : 트위터 캡처, @kyunghyang)



진보적 성향 언론사의 경우에 더 크다. 물론 팔로워 규모만으로 영향력의 절대적인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뉴스 정보의 유통이 팔로워의 자발적인 공유에 의해 주도되며,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대중에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팔로워 규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팔로워 규모는 정보적 영향력의 기본 전제가 된다.

팔로워 규모는 또 정치인과 같은 특정 유명인을 구심점으로 한 공감대 형성과 행동 돌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의 대선 후보였던 당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팔로워 수가 이백만 명 이상에 달했던 것에 비해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 팔로워 수는 오천 명이 채 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양상은 대선 결과와 전혀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진보적 색채의 정치인들은 보다 많은 SNS 인맥을 보유하며 그들과 소통하고 사회적으로 정보와 의견을 확산하는 데 도움을 받는 실정이다. 한편, 복수의 당사자가 제3자에 의해 동시에 팔로우 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코 팔로우(co-follow) 비율도 진보적 정치인들에 대해서 더 현격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동일한 이념 성향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맞팔로우(한사람이 상대를 팔로우 하면 그 사람도 함께 팔로우 하는 것을 이름) 양상 역시 진보 이념을 표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빈번하다.

다음으로, SNS 상에서의 정보 확산은 정보의 허브가 되는 몇몇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짙다. 오피니언 리더에 의해 생산된 정보는 그들의 SNS 인맥들에 의해 재확산되고 일단계로 확산된 정보가 여러 단계의 확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피라미드 구조의 정보 전파 양상을 만들어 나간다. 이는 유력자에 의한 2차적인 정보의 확산, 이른바 라자스펠트(Lazarsfeld, 미국의

사회학자) 등의 ‘2단계 유통 모형(two-step flow model)’의 구조가 효율적으로 재현되는 공간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SNS 공간에서는 정치인, 교수, 작가 등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진보적 성향을 갖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촘촘한 SNS 인맥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나름의 알고리즘을 통해 부여된 SNS 영향력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뉴미디어의 수용에 민감한 젊은 계층들이 대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전혀 낯설다고 받아들이 필요는 없겠다. 더구나 정보 생산의 근원지가 되는 전통 미디어의 행위적인 요인에서도 진보 언론의 우위가 드러난다. 한국의 트위터 디렉토리 및 순위 집계 통계 등에 따르면 트위터 영향력 순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언론사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그리고 오마이뉴스 등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들이다. 기자들이 운영하는 언론사 진보 노동조합의 트위터 계정(예를 들어, ‘MBC 노동조합’ 트위터) 등도 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집계 되었다. SNS는 전통 미디어에 비해 진보적이고 그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가 교환되는 공간으로 대상화 되고 있으며, 진보적 언론사 스스로도 SNS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자사 영향력 확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MBC 노동조합의 트위터
(출처 : 트위터 캡처, @saveourmbc)



1) 황유선 · 이재현 (2011), 트위터에서의 뉴스 생산과 재생산 : 8개 언론사와 일반인의 트윗 및 전파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 정보가 트위터를 통해 어떠한 양상으로 확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연구¹⁾에서는 뉴스가 트위터 이용자들에 의해 리트윗 되는 빈도, 최초로 리트윗



독일의 학자 노엘레 노이만
(출처 : 더 인디펜던트 홈페이지,
[www.independent.co.uk],
2010년 4월 10일자)

을 수행한 사람의 규모인 리트윗 범위, 하나의 뉴스가 몇 번이나 리트윗되며 확산되는지를 나타내는 리트윗 거리, 그리고 리트윗이 지속되는 길이 등에서 진보 언론사의 뉴스 정보가 우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SNS 상에서 진보적 이용자들 사이의 결속력은 이데올로기적인 공감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주로 진보적인 성향에 부합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자칫 진보적 성향의 정보가 공중 전체의 의견으로 인식될 우려를 낳는다. 독일의 학자 노엘레 노이만(Noelle-Neumann)이 주장한 ‘침묵의 나선(spiral of silence)’ 이론은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의견이 비록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점차 다수의 의견으로 인식되면서 그것과 다른 자신의 의견은 소수의 의견으로 간주하고 결국은 침묵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SNS 상에서 특정 성향의 의견과 정보가 두드러진다면, 그에 부합하는 의견을 가진 개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만한 동기가 부여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개인은 자신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일 것이라 짐작하고 사회적 공론장으로부터 점차 멀어질 수가 있다. 때문에 SNS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은 정보적 편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부의 의견을 보편적인 의견으로 잘못 간주할 수 있는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보의 매개를 통한 왜곡 가능성

SNS 상에서 상위 트렌드로 랭크되며 확산 공유되는 정보들 중에서는 개인이 직접 취재하거나 가공해 낸 정보보다는 전통 미디어에서 이미 생산된 뉴스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SNS에서 소통되는 정보는 여전히 전통 미디어가 생산해 낸 뉴스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SNS와 같은 뉴미디어의 저널리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전통 언론이 구성하는 의제와는 별도의 독립적 의제가 설정되며 전통 미디어와는 다른 관점의 이슈가 자유롭게 부각될 수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정보의 소스는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전통 미디어의 뉴스 생산에 의존하게 된다. 그럼에도, 과연 시민 저널리즘으로서의 SNS가 언론사의 전문 저널리즘 역할을 어느 정도나 대체 혹은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은 논의거리다.

SNS의 정보 확산 영향력은 주지하다시피 휴대가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스마트 미디어로 인해서 뉴스 정보를 언제라도 손쉽게 자신의 SNS 계정에 링크시키고 의견도 덧붙일 수 있다. 물론, SNS 상에서 정보의 편집은 컴퓨터나 휴대 전화의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를 매개하는 SNS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SNS는 개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SNS 상에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마치 일상에서의 면대면(face-to-face) 커뮤니케이션을 하듯이 자유로울 수 있다. 동시에 SNS는 사회적인 정보 소통의 미디어로서도 기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이 사회 공론장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공인의 경우에 그의 사건은 곧 공론이 될 수 있고 여론 형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얼마 전 ‘국정원 대화록 문건 실종’ 사건을 두고 벌어진 야당 정치인들 간의 SNS를 통한 정치적 공방은 공식적인 석상이나 기자회견이 아니라 각자의 개인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들은 각자의 의견을 SNS에 올렸고 대중은 이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언론은 그러한 상황을 보도했다. 이로써 야당 정치인들이 서로를 향해 갖고 있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충돌하고 있음을 SNS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까지도 감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SNS의 특성이 정치 사회적으로 의도되고 있을 개연성도 있다.

문제는, SNS를 통해 수용하게 되는 뉴스 정보의 가치와 진위여부, 그리고 신뢰도 등이 정보적인 객관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보 전달자의 인기나 그에 대한 선호도, 또는 화려한 화술과 언변에 의해 규정되어 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다. 그럼으로써 SNS 공간에서는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수용을 의견 지도자의 가치관, 양심, 그리고 판단에 의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SNS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생산해내는 언론기관이 아니다. SNS는 언론사의 뉴스가 소통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며 언론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누구에 의해서든 생산된 정보가 확산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뉴스나 정보에 대한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한 부분을 통제하는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 SNS 매개의 정보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정보의 품질과 가치 그리고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중적으로 관심이 높은 SNS에 게시되었다고 해서 정보를 맹신하는 것 역시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SNS를 통한 정보를 여타의 정보 소스들과 비교하고 통찰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과 분위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겠다.

정보 소비의 편협성과 폐쇄적 소통

대체로 뉴스 정보를 송출하는 방송사나 신문사의 정보를 수용할 때 개인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의 소스를 선택함으로써 내면적으로 발생하는 부조화를 최소화 하는 경향이 있다. 페스팅거(Festinger)의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회피함으로써 인지적으로 발생하는 부조화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선호하는 언론사의 뉴스만을 선별하여 소비하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disclosure)’ 현상이 수반되며 이는 정보의 편향적인 섭취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SNS 공간에서도 인지부조화 감소를 위한 선택적 노출 현상이 발생된다. SNS 이용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정보의 선택적 노출이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트위터 상에서 보수 성향의 이용자들은 보수 언론이 생산한 뉴스를 주로 수용하고, 진보 성향의 이용자들은 진보 언론으로부터 생산되는 뉴스를 주로 소비하고 있었다.²⁾ 즉, 트위터와 같은 SNS 상에서도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원(information source)에 대한 노출 양상이 극화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대선 정국이나 선거 기간 같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양분화 된 보도가 많은 시기 일수록 SNS 상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인지부조화 이론을 주장한 페스팅거
(출처 : [www.infoamerica.org])

2) 황유선 (2013). 선택적 노출 행위를 통해 바라본 트위터 공간의 이념적 양극화. 「한국언론학보」 제57권 2호, p. 58-79.



Social Network

후보와 관련된 뉴스 정보가 많아지며 이용자들은 자신이 지지하거나 투표했던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접하게 됨으로써 인지부조화 발생을 막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SNS 이용자들은 언론사 뿐 아니라 정보의 허브에 위치한 사회적 유력자 가운데 선별적으로 인맥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로부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용한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언론에서 각기 상이한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SNS의 의견 지도자들도 각기 주관적 견해를 피력하며 사회적 현안을 해석하는 고유한 이슈 프레임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는 SNS의 정보적 유력자들과 인맥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 누구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주로 수용하는지에 따라서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은 편향된 정보 수용과 공유 행위를 진작하는 것임과 동시에 SNS 상에서 정보의 전파력을 구성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정보의 확산은 정보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SNS 이용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 혹은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정된 정보를 주로 확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SNS 공간에서 동질적인 사람들과 맺어진 인맥 규모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한 나위 없다. SNS는 비록 외형적으로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 공개된다는 점에서 개방적인 채널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다.

이미 몇몇 연구를 통해서 SNS 공간의 소통은 주로 동질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진보 정치인과 SNS 상의 인맥 관계를 맺고 상호 소통하며 공감대를 이어간다. 언론사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사를 중심으로는 보수 성향의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진보 언론사를 중심으로는 진보 성향의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이처럼 동질적 구성원들로 SNS 인맥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SNS 상에서의 정보적 영향력은 동질적 성향의 사람

들 사이에서 유효하게, 그러나 다소 배타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SNS 매개 소통과 정보 교류가 진행될수록 각자의 신념은 강화될 것이며 인지 부조화는 감소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단결보다는 분화된 사회를 조장할 수 있다.

SNS 매개 정보 소통이 야기하는 문제점

지금까지는 정보 소통 채널로서 SNS의 특성이 SNS 매개의 정보 확산과 공유에 대해 역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배경과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짚아 볼 수 있다.

첫째, **저널리즘의 전문성 문제이다.** 사람들은 친숙한 사람이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 더 신뢰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라자스펠트 등의 2단계 유통 모형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직접적으로 전달될 때 보다는 매스미디어의 정보가 특정 커뮤니티 속에서 신뢰 받는 오피니언 리더에 의해 전달 될 때 인식적으로나 행위적인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SNS 공간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두가 전문적인 저널리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개인 미디어로서 SNS를 활용하여 정보의 확산과 공감대 형성에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이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들의 정보 생산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반드시 확보되었다고 말 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해 유통되는 뉴스 정보의 정당성 판단이 사회적인 인기와 명성의 뒷전에서 희석되어 버리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허위 정보의 신속한 확산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다.** 정보 채널로서 SNS의 가장 현저한 특성은 신속하고도 폭 넓은 정보의 확산과 교환 기능이며 이는 긴급한 중대 사안을 알릴 때에 강력한 순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허위 정보 역시 SNS를 통해 일순간에 대중에게 전파됨으로써 사회적인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동요를 야기할 수도 있다. 더구나 이러한 소통 시스템을 통해 누구라도 정보를 게시하고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정보 확산에 의한 피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SNS 공간에서 사생활의 침해와 개인 정보의 노출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물론 전문적이지 못한 저널리즘 행위 및 허위 정보의 확산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지만 SNS의 기술적 특성 자체가 사생활 침해 발생에 매우 취약하다. SNS는 인맥을 기반으로 운용되며 SNS 상의 정보는 인맥에게 공개되므로 사적 정보가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인맥을 통해 노출될 수 있다. 가령, 나의 사진이나 행적이 친구의 페이스북 상에 게시된다면 나의 정보가 친구의 인맥에게 공개됨으로써 나의 행적과 모습이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고스란히 보여 지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친구에게 남긴 댓글이나 게시글 등도 그의 인맥에게는 모두 공개된다. 또한, SNS의 개인 프로필 정보나 게시물 등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기술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무의식중에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언급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사생활 노출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해킹에 의한 피해이다. SNS에는 사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안이 담겨져 있으며, 물론 이를 비공개로 설정 하거나 친구 공개로 설정 해놓더라도 누군가에 의해 해킹 당할 우려를 전혀 없앨 수는 없다. 그동안 유명인의 SNS 계정이 해킹 당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으며 유명인을 비롯해 누구든 사생활이 온전히 노출된다면 그로 인해 입는 피해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넷째, SNS에서 소통되는 정보 가치에 대한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이다. SNS 상에서 누군가 요란하게 정보를 부각시키고 의견을 주장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 정보의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인식될 수 있다. 몇몇 목소리 큰 소수의 의견이 마치 대중의 보편적인 견해인 양 과장되게 포장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여론의 방향이 영향을 받는 상황에게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정보가 SNS를 통해 유통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단위의 논의나 충분



올 3월 트위터 계정을 해킹당한 슈퍼주니어 은혁의 트윗
(출처: 은혁 트위터 캡처, @allrisilver)



Social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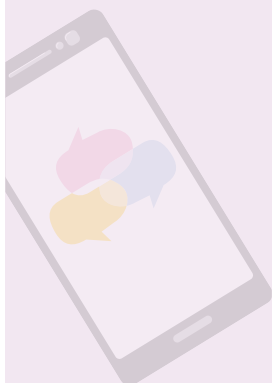
한 민주적 숙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과소평가되어 묻혀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혹은 실시간으로 간단하게 소식을 주고받는 시스템에 적합한 가볍고 트렌디한 뉴스 정보들만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됨으로써 뉴스 정보의 지나친 연성화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뉴스 정보에 대한 진지함이나 성찰적 태도는 점차 결여되는 것이다.

마지막은 SNS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나타나는 인간성의 상실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수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SNS가 정보적 관점에서 분명 발전적인 미디어 환경을 견인하는 존재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SNS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자연히 사회적 관계나 면대면 대인 소통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고독한 인간을 양산하며 인간성의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SNS 상에서의 인맥이 비록 오프라인의 관계가 연장된 것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들 상호간 관계 속에 내재된 진정성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축적해온 그것과는 분명 같지 않다. 기술이 인간 삶의 방식을 견인할 것인가, 인간이 기술을 추동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다. SNS는 최첨단의 기술력 위에 편리함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SNS를 수용하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는 결국 휴머니즘인 것이다.

대안 및 해결 방안

문명의 이기는 인간이 그것을 유리하게 활용함과 동시에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에게 온전히 이로운 그 무엇인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SNS의 정보적 기능과 부작용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SNS가 편리한 정보 소통 채널의 이기로 자리매김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뉴스 정보 생산의 주체인 전통 언론사의 SNS를 향한 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공생’이라는 미명하에 지금까지는 SNS를 정보원의 자격으로 격상 시켰으며 SNS에서 수립되는 의



제를 별다른 고민 없이 뉴스로서 승화시켰다. SNS 상에서 행해지는 특정 정치인 혹은 정치 성향을 표방하는 사회적 공인들의 사건이 가감 없이 언론 기사에 자주 보도된다. SNS가 개인 미디어라는 점에서 이들의 언사는 다분히 사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발언 속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취재하지 못한 내용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해 얻은 정보가 기사화 되었을 경우 좀 더 자극적이고 현실적이며 주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사로서는 SNS가 구미 당기는 정보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뉴스 정보의 생산을 담당하는 것은 엄연히 전문성과 합법적인 시스템을 갖춘 언론사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언론사가 SNS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식들을 중계하듯 보도하며 SNS를 정보 채널로서 정당화시키는 것에는 적절한 수위 조절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SNS에서의 정보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혹은 법 제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SNS를 언론사 혹은 포털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부정적인 행위들을 규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SNS가 개인적인 공간이라 한다면 그 안에서 허위의 정보를 게시하더라도 그것은

은 사적인 영역이라는 논리에 의해 자유가 부여될 수도 있다. 허위 정보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가 되는 정보가 일파만파 확산될 때에도 최초 게시자 이외에는 누구에 의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확산되어 나가는지 추적하고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카더라’식의 추측성 정보가 마치 검증된 보도인 양 확산되며 원치 않는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지난 7월에 있었던 강남



2013년 7월 8일 한 네티즌이 자신의 트위터에 '강남역 침수'라는 제목으로 올린 사진과 그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해명 트윗
(출처 : 세계일보, 「신논현역 하수도 역류 사진, 강남역 침수로 둔갑?」, 2013년 7월 9일자)

역 침수 오보는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SNS 상에서는 개인의 위치 정보가 공개되어 도용되거나 개인이 무심코 남긴 크고 작은 정보가 수집되어 상업적으로 혹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SNS 상의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만한 규제가 시급하다.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은 사실상 성숙한 SNS 문화의 부재로 인해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력의 발전 속도에 맞게 규범 문화내지는 도덕 수준이 함께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의식해야 하는 예의가 무엇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범죄 행위인지를 배우고 이를 지키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SNS가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금도 여전히 SNS의 예의, 규범, 건전한 문화를 교육해야 한다는 인식은 안타깝게도 부족하다. SNS 아노미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SNS 문화와 규범에 관한 교육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뉴스미디어 판매와 소비 경향

지난 9월 초 오전 8시 중국 베이징의 지하철 시즈먼역. 2·4·13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기에 항상 붐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바빠 걷는 시민들과 승강장에서 서 있는 승객들의 손에 가장 많이 들려 있는 건 스마트폰이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으로 올라 선 사실을 엿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반면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 역사와 승강장에서 신문을 팔던 사람들의 자취도 보이질 않았다.

출근이나 등교 길의 승객 절반가량은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들여다봤다. 종이 신문을 펼치는 대신, 인터넷에 들어가 뉴스를 보거나 이동전화서비스 회사가 전송한 '모바일 뉴스'를 보는 모습이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Weibo)나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微信, WeChat)에 들어가 메시지를 보는 젊은이들도 많았다. 태블릿PC로 온라인 뉴스를 보거나 e북 리더기로 글을 읽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 많은 승객들 가운데



글. 온기홍 중국통신원
중국 베이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중국 베이징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승객들 모습

신문을 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내 곳곳의 버스 정류장 풍경도 비슷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뉴스를 보고 웨이보·웨이신에 접속해 메시지를 보는 중국인들이 적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시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와이파이(WiFi) 무료 서비스 지역을 늘리고 있어 시민들은 길거리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문가판대의 신문 판매 감소세

중국인들 사이에 이 같은 '디지털 생활'이 널리 자리 잡으면서 종이신문 매체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는 곳이 바로 신문가판대다.

9월 초 베이징의 중관촌(中关村). 유명 대학들을 비롯해 대형 전자상가와 IT회사, 연구소들이 몰려 있는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곳이다.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로 크게 붐비고, 하루 유동 인구가 수만 명에 달한다. 이곳에서 신문가판대를 10년간 운영해 온 40대 후반의 중년 남성 장 씨는 "하루에 신문이 몇 부나 팔리나요?"라는 물음에 대답 대신 한숨부터 내쉬었다.

"200부요? 100부요? 그럼 50부요?"라는 질문에, 그는 계속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50부에도 못 미쳐요."

"누가 주로 신문을 사가요?"라고 묻자, 그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예요"라고 답했다. 신문 보다는 이동전화 선불카드나 생수, 음료수, 담배를 사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는 설명했다. 주위 신문가판대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는 게 그의 얘기다.

중관촌 지역 내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신문가판대 세 곳을 골라 살펴봤다. 대략 30분 동안 50명 정도가 세 곳의 가판대에 들렀다. 이 가운데 5명만 신문을 사갔다. 나머지는 음료수, 이동전화 선불카드 등을 구매했다.

신문 한 부 값은 대개 1위안(180원 정도)이다. 한 부에 1.5위안인 신문들도 있고, 인기가 많은 주간신문 남방주말(南方周末)은 3위안(540원)이다. 버스 요금(1위안)이나 지하철 요금(2위안)과 비슷하다. 중국의 물가 상승세에 비춰볼 때, 신문 가격은 결코 비싸지 않다.

이 중 중관촌 소재 중국인민대학에서 가까운 신문가판대 주인은 "신문가판대 운영을 시작한 1990년대엔 아침 출근 시간에 가판대 앞은 시장 같았고, 매일 수백 부의 신문을 팔았어



중국 베이징 시내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요. 그런데 2006년쯤부터 장사가 점점 잘 안되더니 요즘은 하루에 신문 몇 십 부도 팔기 힘들어요”라고 전했다. 요즘엔 오히려 담배, 생수, 음료수, 이동전화 선불카드를 사가는 사람이 전체 고객의 80%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신중관촌 대형 쇼핑몰 근처의 신문가판대 운영자는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고 사람들이 모두 이동전화기를 갖게 되면서 신문이 잘 안 팔리게 됐다”면서 “특히 두 해 전부터 스마트폰이 빠르게 많이 퍼지면서 신문을 사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구책으로 음료수는 물론 소시지와 옥수수 같은 간식 거리도 팔고 있다.

신문가판대 옆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한 중년 남성은 “신문을 사서 보는 경우가 드물고, 내 주위에서도 신문을 사보는 사람이 적다”고 전했다. 다만 그의 70대 부모는 TV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고, 오전마다 가판대에 가서 신문을 사온다고 한다.

또 다른 20대 남성 직장인은 “평소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뉴스를 본다”며 “중이 신문을 사서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사무실에는 회사가 정기 구독하는 신문들이 놓여 있지만, 일 때문에 신문에 손이 자주 가질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 베이징 시내 신문가판대에서 신문을 고르는 시민



중관촌 소재 베이징대학 캠퍼스 안팎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교내 신문가판대에는 바깥보다 많은 종류의 신문들이 진열돼 있지만, 신문을 사가는 학생들이 드물었다. 베이징대학 동문 앞 횡단보도 옆에 있는 신문가판대의 주인은 “사람들은 많이 오가지만, 신문이 나 주간지 판매가 이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베이징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신문을 봐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사보거나 도서관 신문잡지 열람실에서 보는데, 평소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근처의 칭화대학이나 베이징어언대학, 베이징임업대학의 학생들도 가끔 쉬는 시간에 교정에 설치된 신문 게시판에서 뉴스를 보긴 하지만, 대부분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뉴스를 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파트 단지의 폐지 수집상에서도 신문의 분량은 책이나 다른 물건들에 비해 눈에 띄게 적었다. 폐지 수집상은 “주민들이 가판대에서 사오거나 정기 구독하는 신문이 적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요즘에는 가정보다는 직장이나 기관에서 신문을 정기 구독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 베이징 소재 미디어 연구기관인 베이징 세기 화문 국제 미디어 자문(北京世纪华文

중국 베이징대학 중앙 도서관 로비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



国际传媒咨询有限公司)이 지난해 10월 2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 지역 가판대의 하루 평균 신문 판매량은 2003년 250부에서 2012년 상반기 100부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신문가판대 1만여 곳 철거

중국 당국의 조치도 신문가판대를 위축시키고 있다. 전국 지방 정부들은 ‘미관을 해친다’, ‘관리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여러 해 전부터 도심 신문가판대를 잇달아 철거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에 걸쳐 신문가판대 1만여 곳이 철거됐다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报)가 지난 8월 30일 전했다. 철거된 신문가판대 가운데 일부는 골목 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 있는 신문가판대는 3만여 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신문가판대 철거를 아쉬워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도시 거주자 중 일부는 고정적인 주소가 없거나 이동·출장이 잦아 신문을 정기 구독할 수 없어 신문가판대를 찾고 있다. 일부 노인들의 경우 아침 운동 뒤 신문가판대에 들러 신문을 사서 귀가하는 게 오랜 습관이 됐다. 디지털 기기 구매와 인터넷·이동전화 이용료에 부담을 느끼는 중·저소득층들은 가끔 신문과 주간지를 사기 위해 신문가판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 신문 광고 시장 쇠퇴

중국 내 뉴미디어 확산과 신문 판매 감소, 신문 구독률 하락은 신문 광고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광고협회 신문분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중국 신문 광고 시장 분석 보고’에 따르면, 2013년 1월~6월 전통 매체의 누계 광고는 7.9% 증가했다. 이 가운데 TV는 11.3% 증가했고, 라디오는 2.7% 증가했다.

반면 신문과 잡지의 광고는 모두 하락했다. 올 상반기 신문 광고 규모는 전년 동기기에 비해 6.1% 줄었다. 신문의 1월~5월 광고 하락폭은 3.6%였다.

중국 미디어광고 연구회사인 상하이메이화정보(上海梅花信息)가 지난 1월 발표한 ‘중국 신문 광고 투자 연도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신문 광고 시장 규모는 2011년에 비해 12.6% 줄면서 근 10년 이래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뉴미디어 확산 외에 국내 경기 침체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CCTV발전연구센터(中央电视台发展研究中心)가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12년 동안 중국 TV광고 연평균 증가율은 13.48%였다. 온라인 광고의 연평균 증가율은 52.62%로 더 높았다. 인터넷 동영상 광고는 광고주를 빠르게 끌어들이고 있다.

추이바오궈(崔保国) 칭화대학 신문방송학원 교수는 “2005년 ‘신문 산업 겨울’을 거친 이후, 지난해 중국 신문업이 또 한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추이바오궈 교수는 “신문

중국 베이징 시내 한 신문가판대와 시민들의 모습



광고 단가는 7.5% 내렸는데, 30여 년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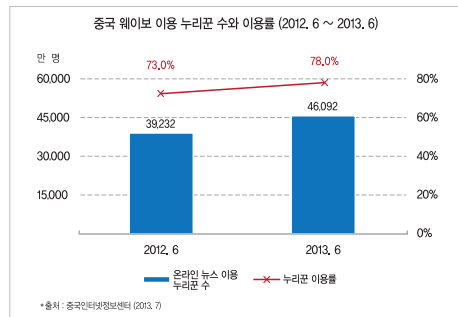
앞으로 당분간 신문 광고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하락폭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언론계와 광고계의 분석이다.

중국 온라인 뉴스 이용자 1년 새 6,800여만 명 증가

중국에서 종이 신문의 판매와 이용은 줄고 있는데 반해 온라인 뉴스 이용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대역 인터넷 보급과 중저가 스마트폰 확산, 3G와 무선 인터넷망 확대에 힘입어 온라인 뉴스는 중국인들이 뉴스와 정보를 접하는 주요 경로로 자리 잡았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지난 7월 말 공식 발표한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발전 상황 통계 보고’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온라인 뉴스를 이용하는 누리꾼 규모는 4억 6,100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6,860만 명(증가율 17.5%)이 증가했다. 전체 누리꾼들 중 온라인 뉴스 이용자는 78.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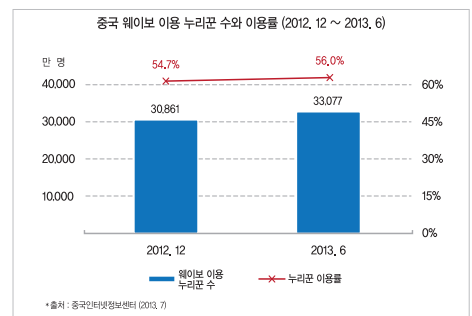


CNNIC는 “누리꾼들이 틈틈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고 있으며, 웨이보와 웨이신 같은 모바일 메신저 애플

리케이션의 확산으로 누리꾼이 뉴스와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웨이보는 중요한 뉴스와 소식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핫이슈와 화제를 만들어내며 주류 전통매체와도 연동해 뉴스를 전파함으로써 누리꾼의 온라인 뉴스에 대한 접촉 빈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웨이보는 ‘여론 형성’의 플랫폼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자 전통 매체는 물론 많은 당·정부 기관들도 웨이보를 통해 정보를 발표·전파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웨이보 이용자 수는 3억 3,100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말에 비해 2,216만 명(증가율 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리꾼 중 웨이보 이용자는 56.0%로 지난해 말에 비해 1.3%상승했다. 웨이보 이용자 수는 2010~2011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후 지난해부터 안정적인 성장기에 들어섰다.



중국 온라인 미디어 ‘주류 매체’로 떠올라

중국에서 온라인 뉴스와 매체 이용이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매체는 지난 10년 사이 ‘주변 매체’에서 ‘주류 매체’로 탈바꿈했다.

온라인 매체는 뉴스·정보 전파와 여론 형성의 중요 경로가 됐을 뿐 아니라, 공산당 정부

의 ‘여론 확인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 매체는 중국 누리꾼이 주요 뉴스, 돌발 사건 등을 접하는 가장 빠른 통로가 됐다. 특히 상업성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온라인 매체로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뉴스 등재와 전제 자격을 갖춘 대형 포털사이트는 수 억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이용자와 방문자 수를 바탕으로 기존 언론사 사이트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 사이트들은 뉴스 전파력과 영향력 상에서 대형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 뒤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중국 지도부도 온라인 매체의 커다란 영향력을 감지하고 온라인 여론에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 2008년 6월 20일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인민일보 웹사이트 인민망(人民网)의 ‘강국논단(强国论坛)’에서 누리꾼들과 온라인 대화를 가진 것은 중국 온라인 매체 발전의 이정표가 됐다. 이어 2009년~2011년까지 3년 연속 당시 원자바오 총리는 신화통신사(新华通讯社)의 웹사이트 신화망(新华网)에서 경제, 민생, 교육, 의료 문제를 놓고 누리꾼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 온라인 대화를 벌였다.



중국 웨이보 홈페이지 (www.weibo.com) 캡처

중국 정부 기관도 웨이보를 통해 온라인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 기관의 웨이보 계정은 지난 상반기 기준 2만 5,866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성(省)과 부(部)급 이상 정부 기관 웨이보는 58개였고, 청(厅)과 국(局)급 이상

정부 기관 웨이보는 1,154개였다.

이렇게 온라인 매체와 여론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공산당 정부는 웨이보를 비롯한 뉴미디어 통제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월 19일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에서 공산당 선전 담당 기관에 뉴미디어의 기반을 장악하기 위해 강력한 인터넷 부대를 조직하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공산당이 여론전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 매체 신기술 적극 도입

전통 매체들은 국민들의 미디어 이용과 소비 방식 변화에 발맞춰 독자와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하고 있다. 신문사들은 최근 모바일 뉴스 플랫폼을 마련해 활성화에 힘을 쏟는 데 이어 동영상 형태 뉴스 제작에도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창간 65주년을 맞은 인민일보는 지난 7월 1일자 지면을 통해 “신문 전파 형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7월 한 달 동안 2차원 바코드가 딸린 동영상과 사진 기사 162편을 보도했다. 앞서 인민일보는 온라인 뉴스, 웨이보 뉴스, 모바일 뉴스 서비스를 선보였다.

장연농(张研农) 인민일보 사장은 “신기술을



장연농 인민일보 사장
(출처 : 인민망 홈페이지
[www.people.com.cn])

활용해 전통적인 문자 기반 뉴스 취재·편집 체계를 모든 형태의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보도 체계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또 취재편집 조직을 개편해 종이 신문과 온라인 간 뉴스의 융합을 전담할 부서들도 신설했다. 또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음성과 영상 뉴스 제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민일보의 마리(马利) 부편집장은 “신문과 온라인의 융합은 콘텐츠의 융합이자 생산 방식의 융합이다”라고 설명했다.

방송사들은 시청자와의 쌍방향 교류를 중시하는 쪽으로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 체계를 다듬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시청자들의 요구와 습관을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방송사들은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모바일 방송국 개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통 매체들은 웨이보 뉴스사이트 개설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에서는 2009년부터 웨이보 시대에 들어선 뒤, 2010년을 ‘웨이보 원년’, 2011년을 ‘정부(政务) 웨이보 원년’, 2012년은 주류 매체의 웨이보 개통에 따른 ‘매체 웨이보의 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차이원(蔡雯) 중국인민대학 신문학원 부원장은 “모바일 기기는 전통 매체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는 큰 흐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 전문가들,

신문 매체 입지에 대해 낙관론 펼쳐

중국에서 온라인 미디어의 확산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신문 매체의 입지에 대해, 주류 신문사와 언론 전문가 중에 조심스럽게 낙관론

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몇 가지 이유가 이런 낙관론을 뒷받침 한다. 첫째, 인터넷과 신문 매체의 상호 보완성이 뚜렷해지고 있고, 전통 매체들이 보도 내용의 신뢰도와 권위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 쉽게 신문 매체의 입지가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둘째, 중국 당국이 경제 연착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구 소득 증가가 GDP 증가율을 초과하고,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신문 광고 시장도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작용하고 있다. 또 중국의 경제 성장 방식이 수출주도형에서 소비주도형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도 도시보(都市報) 등의 성장 여지를 넓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셋째, 중국의 빠른 도시화 속도도 이유로 꼽힌다. 도시화에 힘입어 ‘도시보’를 비롯한 신문들의 성장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도농주택건설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 도시화율은 46.59%에 달했으며, 앞으로 10년~15년 동안 연평균 0.8~1%의 증가율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의 대표 도시 '상하이'의 도심

넷째, 중국 인구의 노령화 추세도 신문 독자 기준량 증가에 이로울 것이란 판단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이 ‘도시보’의 충실한 독자로서 신문 구독 의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중국 당

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6,714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1세기 중반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신문의 미래 독자 집단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류 신문들은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 하루 발행부수

100만 부 일간지 20개 육성키로

세계 신문업계 불황과 파산, 인수합병 속에서도 중국 주류 신문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지금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공산당 정부의 지원이 작용하고 있다. 종합기관지들을 중심으로 한 주류 신문들의 발행량은 별다른 변화가 없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세운 '신문출판업 12·5 계획'은 오는 2015년까지 일일 발행부수 100만 부가 넘는 종합 일간지 20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지와 전국종합지가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관지로는 공산당 중앙, 성(자치구), 시 공산당 위원회가 발행하는 기관지(党报, 당보)와 각급 정부가 펴내는 기관지 등이 있다. 인민일보가 대표격이다. 전국종합지로는 경제일보(經濟日報), 광명일보(光明日报), 중국일보(中國日報), 참고소식(参考消息)을 비롯해 14개 신문이 있다.

현재도 하루 평균 발행부수가 100만 부를 넘는 신문은 △인민일보, △참고소식, △광저우일보(广州日报) 등 26개나 된다. 2011년 기준 인민일보는 256만 부, 광저우일보는 188만 부였다. 중국 언론매체들이 2012년 10월 세계신

문협회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전세계 신문 발행부수 상위 100위 신문'에는 중국 대륙의 일간지 20개가 포함돼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빈제(柳斌杰) 국가신문출판총서 서장은 지난 1월 5일 "지난해 중국의 신문 발행량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띠었고, 세계 신문 발행량 상위 100위 내 신문 가운데 중국이 4분의 1을 차지했다"며 "올해는 유명 신문과 간행물, 유명 출판 웹사이트를 키워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류빈제 국가신문출판총서 서장
(출처: 신화망 홈페이지
[www.xinhuanet.com])

또한 정부의 신문 구독 지원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공산당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농가书屋 프로젝트(각 농촌을 대상으로 30종 이상의 신문 구독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해 전국 수십만 개 농촌 현지당 조직에 인민일보 등을 무료 구독하도록 지원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중국의 주류 관영 신문들은 정부의 지원 등을 바탕으로 당분간 판매량 급감과 경영난을 피하는 동시에 뉴미디어와의 적극적인 접목을 통해 활로를 개척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신문 대국'인 중국이 전세계적인 신문 업계 불황의 파고 속에서도 주류 전통 매체와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과 규모를 키워 '미디어 대국'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예고되는 대목이다.

지면제작의 화두는 신뢰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신문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 보편성을 띄어야 한다. 이 모든 가치의 지향점은 신뢰다. 독자들이 믿지 못하는 신문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 신문의 위기를 말하는 요즘이지만 묵묵히 신뢰를 다져 나간다면 얼마든지 떠난 독자를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다.



글. 서명수
중앙일보 고충처리인

오보에 대처하는 중앙일보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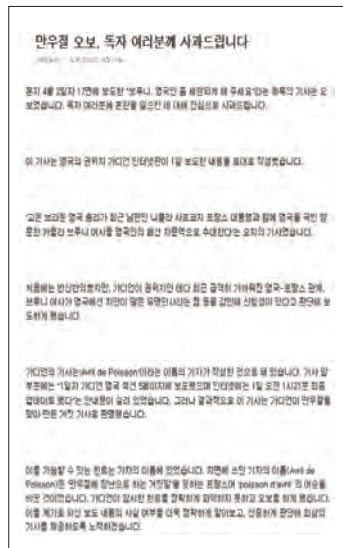
신뢰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한번 들어먹을 뻔한 적이 있다. 지난 1990년대 말 IMF 시절이다. 한국정부와 기업을 믿지 못하게 된 외국인들이 투자해 놓은 자산을 한꺼번에 빼가는 바람에 경제가 휘청거렸다. 사람들은 IMF를 거치면서 개방경제에서 신뢰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신뢰란 것을 단순한 관념적인 윤리가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신문은 종종 크고 작은 오보 때문에 시달린다. 오보를 내고 싶어 내는 신문은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신뢰를 갉아먹는 주변 임엔 틀림없다. 본지도 과거 본의 아니게 여러 차례 오보 소동에 휘말렸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8년 4월 2일자 17면에 보도된 “브루니, 영국인 좀 세련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기사다. 영국의 권위지 가디언 인터넷판이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영국을 국민 방문

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카롤라 부르니 여사를 영국인의 패션전문역으로 추대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나 이는 가디언이 만우절을 맞아 거짓으로 만든 허무맹랑한 기사임이 판명됐다. 본지는 오보의 원인제공자가 가디언이지만 확인을 제대로 안한 책임을 지고 이튿날 보도경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간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했다. 그 이전에도 스위스 호수사진을 뽕뽕 언 중국 사진이라며 1면에 실었다가 바로 정정보도를 한 적이 있었다. 광우병 파문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던 그해 여름에는 취재기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장면을 연출한 사진을 실어 사과문까지 내보냈다.



2008년 4월 2일자 중앙일보 17면



2008년 4월 3일자 중앙일보 17면에 게재된 정정보도문

이런 일련의 오보들은 따지고 보면 강한 취재의욕과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사정을 잘 모르는 독자들은 따가운 질책을 쏟아냈다. 특히 광우병 사태 때는 사안의 민감성 탓에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내렸다. 국내 언론사상 처음으로 사진·기사 사전검증시스템인 '팩트체킹제'를 도입한 것이다. '팩트체킹제'는 베테랑 기자들로 구성된 '팩트체커'들이 기사출고단계에서 촘촘한 심의로 팩

트가 정확한지를 걸러내고, 신문이 나간 후에도 오류여부를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팩트체커들은 지금까지도 불량을 제로의 지면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다. 기자들에게도 특종보다는 정확한 뉴스를 생산하고, 기사를 쓸 때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도록 당부가 이어졌다.

획기적인 신문혁신, 중앙일보의 '베를리너판'

2009년 3월은 국내 언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중앙일보의 '베를리너판'(Berliner format, 편집자 주: 신문판형의 한 가지로 대판과 타블로이드판의 중간 크기)이 탄생한 달이다. 기존의 대판사이즈를 대폭 줄인 베를리너판은 가장 획기적인 신문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베를리너판이 던진 화두는 신되었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을 '독자 밑에서, 뉴스 위에서'로 정리했다. 독자 밑에서 몸을 낮춰 독자를 섬기고 매체홍수 속에서 깊이 있고, 정확하며, 몰아가지 않는 차별화된 뉴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뉴스의 선택부터 달라졌다. 선택기준은 철저히 독자의 눈높이와 관심이었다. 기사를 쓰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어느 한쪽 주장이나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몰아가는 보도가 아니라 좀 늦더라도 확인된 사실만 담았다. 의미분석이나 논평이 필요하면 별도의 뉴스분석으로 사실기사와 철저히 구분했다. '보도와 주장의 분리'는 베를리너판의 대원칙이다.

중앙일보만의 고충처리인 제도와 '기사제보 및 독자불편불만처리센터'

제일선에서 독자와 소통하는 고충처리인의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월 2회 열리는 편집간담회에 참석, 신문기사에 대한 의견·지적·건의사항들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한편 '고충처리인 리포트'라는 칼럼도 신설해 생생한 독자의 목소리를 담았다. 지난해부터는 일일 심의보고서에 독자의 지적사항을 게재해 기자들에게 회람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심의보고서에 적시된 독자의 기사정정 요구사항은 즉각 2면 '바로잡습니다' 코너에 반영된다. 중앙일보의 '바로잡습니다'는 단순한 정정에 그치지 않고 이런 저런 필요 정보를 담아 교육적 활용도(NIE; News in Education)도 높이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8월 12일자 14면 '검찰, 전두환 아들들 소환조사 임박' 제하의 기사에서 '종자돈'은 '종자돈'의 오타이므로 바로잡습니다. 한글 맞춤법 30항의 사이시옷 규정에 따르면 두 명사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명사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뒷말의 첫소리 가·예사소리인데 뒷소리로 발음될 때(코+구멍=콧구멍)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아+롬=잇롬) ▶뒷말 첫소리가 모음 앞에서 'ㄴ, ㄹ'이 덧날 때(나+무

앞=나뭇잎) 사이시옷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합성명사라도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된 경우 '콧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회수(回數)'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20면 '중국 졸부들 무례 못 참겠다' 기사 중 '싱가포르로 이민 간 중국인은 50만~60만 명으로 (...) 싱가포르 인구의 10~20%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싱가포르 인구의 10~12%'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중앙일보 8월 13일자 2면 '바로잡습니다' 기사

고충처리인은 노무현 정부 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설치 의무화된 제도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훨씬 이전부터 독자와의 소통창구를 두고 있었다. 2002년 4월, 기자와 공급자 중심으로 제작된 지면이 독자에게 실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편집국 내 '기사제보 및 독자불편불만처리센터'를 만들었다. '기사제보 및 독자불편불만처리센터'는 기사에 항의하는 독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과 해명 및 독자들이 생활주변에서 겪는 억울함, 어려움 등 민원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는 역할을 한다. 접수된 제보는 담당기자에게 전달되고 제보자와 함께하는 동행취재를 통해 지면에 기사화됐다. 첫 작품은 2002년 4월 10일자 사회면에 계

재된 '퇴폐 유리방·룸살롱에 포위된 하원 아이들 보고 배울까 겁나'로 주부 2명과 함께 경기도 일산 학원이 유혹업소를 르포로 다뤘다. 예전에는 편집국 부서마다 독자를 응대하다 보니 기자들이 독자전화에 매달려 시간을 빼앗겼고 중요한 제보전화가 담당부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었지만 이 센터가 가동된 뒤로는 이런 비효율이 사라졌다. '기사제보 및 독자불편불만처리센터'는 독자들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앙일보 고충처리인 블로그



중앙일보 독자서비스 페이지

중앙일보 고충처리인은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독자의 다양한 의견에 눈과 귀를 열어놓고 신문제작에 반영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독자와 신문을 잇는 다리라고 할 수 있다. 기사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구제활동도 편다. 기삿거리가 될 만한 제보가 들어오면 신속히 담당기자에게 전달해 기사화를 돕는다. 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직접 답변도 해주는 등 피드백 기능도 수행한다. 중앙일보 고충처리인 제도가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임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전담 처리하고 보다 밀도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다. 다른 신문들은 논설위원이나 편집국 에디터급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고충처리인이 독자와 소통하는 채널은 전화·이메일·팩스 등이 있는데, 이중 전화가 주 채널이다. 신문의 오타자·오류지적·보도내용에 대한 항의 및 의견, 각종 제보와 기사관련 문의 등 하루 평균 10여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국가적 이슈라던가 사회적 파장이 큰 뉴스가 신문에 나는 날엔 전화통은 불이 난다.

독자의견 접수 현황

기간 분류	2011.1.1.~12.31.	2012.1.1.~12.31.	2013.1.1.~7.31.
오류지적	245건	202건	121건
항의	92건	78건	45건
의견	1,448건	1,530건	837건

‘베를리너판’ 도입 이후 항의전화·악성독자 감소

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거칠고 흥분된 말투로 항의하거나 때로는 욕설도 퍼부어대는 독자도 자주 있다. 이런 독자를 다루는 일은 쉽지 않지만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 말을 경청해 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보면 상대방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든다. 하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막무가내인 악성독자가 문제다. 고충처리인하고 얘기가 잘 안된다며 회사로 직접 찾아오

거나 심지어 신문제작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회사 경영층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화풀이를 해대기도 한다. 그래도 과거보단 항의전화가 많이 줄어든 편이다. 악성독자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중앙일보가 베를리너판으로 전환한 후 생긴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다.

일례로 베를리너판 도입 직전인 2008년만 해도 1년 동안 400건이 넘었던 항의전화는 2009년 200건 아래로 떨어졌고 최근 2년 사이엔 연평균 100건도 채 안 된다. 보도와 논평을 분리하고 팩트 중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글쓰기를 해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짹짹한 제보도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그동안 중앙일보를 빗댄 특종 중엔 독자 제보가 실마리가 된 것이 제법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7년 5월 1면 톱으로 보도됐던 “‘혁신포럼’ 세미나 하러 남미 이과수 폭포 간다”란 기사다. 팩스를 통해 들어온 문서와 자료를 점검하다 우연히 발견한 익명 독자의 제보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 중이에는 이과수로 가는 공기업 감사들의 명단과 여행일정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었는데, 이를 넘겨받은 취재기자들은 출국당일 전화확인 작업을 거쳐 기사화했다. 당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터라 포럼을 빙자한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는 엄청난 파장을 던졌다. 대부분 감사들은 도중에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

중앙일보 '공기업 감사 이과수 세미나' 한국신문상 취재보 도 부문 수상

【중앙일보】 입력 2008년 04월 01일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31일 2008년 한국신문상 취재보도 부문에 중앙일보의 '공기업 공
공기관 감사 21명 혁신포럼 세미나 하러 남미 이과수 폭포 간다'(서명수·정경민·김준현·박해민·
윤창희·손해홍 기자·사진)를 선정했다. 이 기사는 지난해 5월 공기업·공공기관의 감사 21명이
남미의 대표적 관광지인 이과수 폭포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보도해 공기업의 방만
한 경영 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신문협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보도로 고발해 새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핵심 정책과제
로 채택하는 데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기획탐사 부문에는 경향신문의 '한국인의 자
화상', 경영관리 부문에는 서울신문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선정됐다.

2008년도 한국신문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한 중앙일보

이 기사는 2008년도 한국신문상을 수상할 정도로 대어급 특
종이었다. 그러나 독자제보 중엔 개인적 민원도 상당한 비중
을 차지해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 이는 신문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문을 무슨 권력기관
쯤으로 여기는 독자가 적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신문은 오
로지 뉴스를 전달하는 보도기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
다. 수사권이나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취재를 통해 문제제
기를 하고 여론형성으로 정부기관이나 권부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앞으로 신문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
하는 독자가 늘어나면서 개인 민원성 제보도 사라지길 기대
해 본다.

피해구제를 위한 중앙일보의 노력

뭐니 뭐니 해도 고충처리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사로 인
한 피해구제다. 고충처리인은 독자의 피해구제 요청이 들어오
면 해당기사가 보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
해 관련부서에 정정과 반론보도,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초상권이라든가 기사의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구제요청이 한 달 평균 2~3건씩 들어온다. 건수론 얼마
안 되지만 독자가 피해를 보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최대한 신

경 써서 처리하고 있다. 대개 신문이 정
정보도를 내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마무
리된다. 요즘은 인터넷상의 과거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테면 재판결과 무죄로 판명됐는데,
사건발생 당시의 기사가 인터넷에 동등
떠다니는 바람에 취직이 안 되는 등 불
이익을 받고 있다는 독자가 있었다. 고
충처리인은 이 독자가 보내온 증빙을 근
거로 중앙일보 인터넷판의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한편 신문에도 정정보도를 낼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에 고충처리인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9년째로 접어
들었다. 도입 초기 여러 가지 말들이 많
았지만 독자 응대창구를 일원화해 기사
들이 자신의 업무에만 전념하게 하고 독
자 불만을 내부에서 조정함으로써 문제
확산을 방지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다.

고충처리인의 독립성·효율성 문제,
비판 감시 기능에 대한 내부의 부정적
인식 등 개선해나가야 할 사안도 적지
않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진통이라 생각
한다. 아무쪼록 고충처리인 제도가 빨리
뿌리를 내려 독자들로부터 굳건한 신뢰
를 받는 언론 창달에 한 몫 담당하는 날
이 오길 기대해 본다.



‘조정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DR 교육

협상, 조정, 중재 등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인 ADR 기법에 관하여 공무원,
교사,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언론피해 예방교육

언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언론분쟁의
해결방안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지혜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 Persuasion & Rhetoric Report』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 설득기법과 조정전략

조정에 필요한 설득의 주요 법칙들을 무엇인가?
설득적인 말하기 기법, 분쟁 당사자를 대하는 적절한 태도,
설득을 위한 환경 조성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 영화, 고전 등에 나타난 갈등해결의 지혜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은 어떻게 분쟁을 슬기롭게 이겨냈을까?
역사 속 위인들의 결단과 화해를 위한 노력은 어떠했을까?
동서고금의 유명한 설득의 장면에서 오늘날 조정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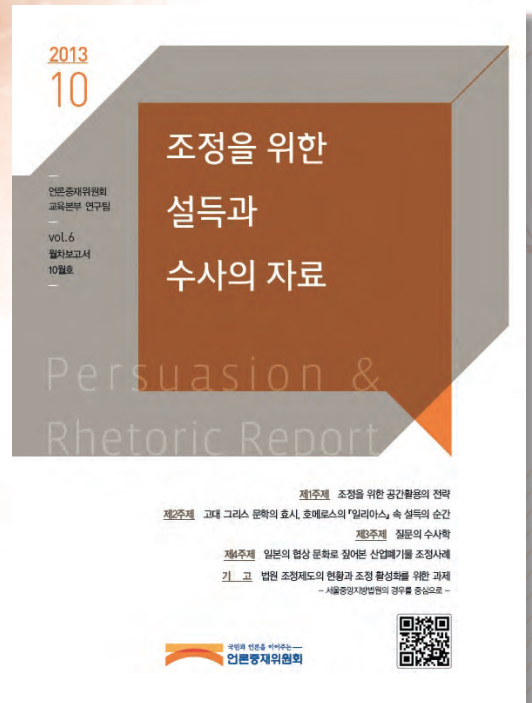
● 수사학 이론과 조정

동·서양 철학자, 사상가들의 설득 및 수사 이론을
조정 현장의 설득 상황에 비추어 분석, 연구한다.

● 각국의 ADR 사례와 제도 소개

세계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의 ADR의 태동 배경과 동향,
주요 ADR 사례 및 시사점을 짚어본다.

※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연구팀(02-397-3041~30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발간 (격월간)
- 정가 : 5,000원 (정기구독 : 연 30,000원)